



보도준칙

1.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 2013-1093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주문〉

한국경제 2013년 3월 27일자 A3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특하면 총수 국회 출석 요구, 불참하면 줄줄이 재판/법정에 선 정용진<신세계 부회장>·정지선<현대백화점 회장> … 정치 입김에 기업경영 위축 논란」 제목의 기사에 대해 ‘경고’ 한다.

〈이유〉

1. 한국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물의를 끼쳐 죄송하다. 해외 출장이 불가피했다. 선처해달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26일 법정에 나와 고개를 숙였다. 두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소병석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정용진 부회장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정상을 참작해 주기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경영인으로서 회사와 주주에 대한 책임도 무겁다”며 “회사 업무로 해외 출장이 불가피했고 사유서를 내고 다른 임원이 대신 증언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약식명령 청구 때와 같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30분 뒤 성수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정지선 회장은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인데 부득이하

게 불출석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비슷한 요구가 있으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을 인정한다. 회사의 중대한 이익과 연결될 수 있는 출장이라 부득이 다녀온 만큼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정 회장에게도 약식명령 때와 같은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다음달 11일 정 회장, 18일 정 부회장에게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10~11월 정 부회장과 정 회장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 부회장의 동생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도 같은 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해당 기업들도 이날 총수가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나가지 못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해외 출장과 일정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대기업 오너들의 해외 출장은 일반적으로 3~6개월 전에 일정이 잡히고, 방문국의 최고위 관료와 협력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만나는 일이 많아 갑작스러운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려웠다는 얘기가. 국회는 작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이 열리기 2주 전 주요 유통기업 오너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계는 기업 경영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 기업인들을 국감장으로 불러내 압박지르는 등 죄인 취급하는 듯한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국회에 출석해 곤욕을 치르는 모습 자체가 잘잘못과 관계없이 죄인처럼 비쳐진다”며 “꼭 필요하지 않다면 기업인의 국회 소환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을 지는 게 두려워 일부 총수들이 등기 임원을 맡지 않으려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상무)은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유전유죄’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탓에 한국식 오너경영의 강점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감 때마다 기업인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사태는 무리한 정치권 개입의 폐해를 잘 보여준

다. 한진중공업은 2010년 생산직 근로자 400여명 희망퇴직 발표를 계기로 노조의 총파업과 크레인 고공농성, 희망버스 등장 등으로 혼란에 빠졌다. 제1야당 대표가 2011년 7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를 방문하는 등 정치권의 개입이 잇따랐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은 2011년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 불려갔고, 그해 10월 환노위 권고안을 수용해 1년 뒤 해고 노동자를 복귀시키기로 했다. 회사 측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작년 11월 정리해고됐던 생산직 근로자 92명을 전원 복직시켰다.

쌍용차도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과거 정리해고를 둘러싼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바람에 홍역을 치렀다. 이유일 쌍용차 사장은 지난 1월 “가만히 놔두면 잘하는데 정치권이 자꾸 쑤셔대면 더 어려워진다”며 정치권 개입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은 큰죄를 짓고도 검찰 소환을 미루고 불응하는 일이 많다”며 “피의자 신분도 아닌 기업인들을 국회가 특하면 오라가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사건을 중심으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국회의 출석 요구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다루었다.

기사는 기자의 의견과 재계인사·교수 의견을 반영한 기사 본문과 제목을 통해 국회의 대기업 총수 출석요구에 대해 ‘대기업 경영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표현하면서 이것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재계의 시각을 전하고 있다.

“국회에 출석해 곤욕을 치르는 모습 자체가 잘잘못과 관계없이 죄인처럼 비쳐진다” “꼭 필요하지 않다면 국회소환을 자제해야한다” “경제 민주화 바람을 타고 ‘유전유죄’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탓에 한국식 오너경영의 강점이 위협받

고 있다” “국감때마다 기업인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피의자 신분도 아닌 기업인들을 국회가 특하면 오라가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등의 기술이 그 사례들이다.

위 기사는 한발 더 나아가 심지어 많은 대기업 총수들이 책임회피의 수단으로 등기 임원을 맡지 않고 있는 잘못된 풍토에 대해서도 “책임은 지는 게 두려워 일부 총수들이 등기 임원을 맡지 않으려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며 엉뚱하게 입법부를 탓하는 재계의 시각도 여과없이 전했다.

기사는 대기업 총수들의 국회 불출석에 대해서는 “고의가 아니라 해외출장과 일정이 겹쳤기 때문”이라는 당사자들의 해명을 자체적인 사실 확인 노력없이 그대로 전했다.

위 기사는 입법부의 대기업 총수 국회출석 요구와 법원의 재판절차 진행이 실제로 기업경영을 위축시키는지, 대기업 총수들의 등기임원 회피현상도 이같은 입법부와 요구 때문인지와 관련해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국회가 왜 기업 총수들을 출석토록 요구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 노력도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이 특정한 정략 때문에 대기업 총수 국회출석 요구를 남발한다면 언론으로서 그 사안은 별도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해야 할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기사가 문제삼고 있는 기업 총수들의 국회 출석 요구가 그런 사례에 해당된다는 근거가 없다면 국회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특정사안에 관해 논의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 규정과 여야 합의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기업 총수들을 출석토록 요구하는 일을 정치권의 개입이니 기업 활동 위축이니 하는 말로 폄훼하는 일을 돕는 것은 언론의 공정한 보도 자세라고 볼 수 없다.

실사 해당 기업들의 주장대로 기업 경영상의 중요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나라 국민인 이상 그것이 국회의 거듭된 출석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대기업 총수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점은 대기업 총수들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법원이 검찰의 약식기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은 법원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가 위와 같이 기술한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언론이 대기업 총수들의 잘못을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싸기에 급급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게 할 수 있다.

이같은 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볼 수 없고,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하는 사회공기로서 책무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3조 「언론의 독립」,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094 신문윤리강령 위반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주문〉

머니투데이 2013년 4월 3일자 1면 「현대차 노조의 생떼 5400억원 생산차질」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밤샘근무가 없어졌는데 과거 심야특근 때 받았던 임금과 조건을 그대로 해 달라는 요구를 어떻게 들어 줄 수 있습니까?”(현대차의 한 간부)

현대자동차가 노조(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의 '생떼'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9일부터 30~31일까지 4주 연속 주말특근을 거부하면서 2만7400대의 생산차질을 빚었다. 금액으로는 5400억원이나 된다.

최악의 내수부진으로 차가 안 팔리는 가운데 그나마 수요가 몰렸던 쉐타페, 맥스크루즈 등은 각각 2개월과 3개월을 기다려야 살 수 있다. 영업 일선에서는 수입 브랜드 혹은 다른 국산차의 경쟁모델에 시장을 빼앗길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 3월에 현대차 판매가 전년보다 0.9% 늘었지만 이는 해외공장 물량이 9.2% 증가한 데 따른 것이며 오히려 국내공장의 해외수출 물량은 7.7% 줄었다.

현대차 노조가 특근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문제다. 과거 주야 2교대 때의 주말특근수당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다.

현대차는 노사 합의 아래 지난달 4일부터 주야 2교대근무를 주간연속 2교대제 체제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평일근무시간은 '10시간(주간조)+10시간(야간조)'에서 '8시간(1조)+9시간(2조)'로 바뀌었다.

주말특근도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1개조가 14시간을 근무했던 것에서 '8+9시간' 2개조로 변경됐다.

1인당 근무시간이 14시간에서 8시간 또는 9시간으로 준데다 심야특근이 없어졌으므로 심야 특근수당은 없어져야 한다는 게 회사측의 시각이다.

반면 노조는 평일 낮 근무의 350%까지 받던 심야특근수당을 그대로 달라고 하고 있다. 1개조가 14시간 특근을 할 때보다 2개조가 '8+9'시간의 특근을 하므로 전체 생산량이 2000대 늘어난 만큼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오일 현대차 노조 대외협력실장은 "1인당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라인가동 속도가 빨라지고 노동 강도도 높아졌다"며 "전체 생산물량이 늘었으므로 할증된 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하는 수 없이 지난달 말에 종전의 주말특근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14시간 동안의 특근수당이 약 31만원이었으므로 '8+9시간' 동안 약 39만원을 주기로 한 것.

그러나 1교대 때 1인당 31만원을 받던 것과 달리 2교대로 바뀌어 39만원이

지급되므로 1인당 수령액이 20만원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조합원들의 불만을 달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말특근수당 뿐만 아니라 특근관련 운영기준을 놓고도 양측은 팽팽한 견해 차를 보이고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밤샘근무는 없어졌지만 과거 주야 2교대 때의 주말 특근 수당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대해 회사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노사양측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고 있다.

위 기사는 노조측이 수당 보전 이유에 대해 “밤샘근무가 없어지면서 1인당 근무시간은 줄었지만 라인 가동 속도가 빨라지고 노동강도도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회사측은 “과거 심야특근 때 받은 임금과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결국 회사측은 종전의 주말 특근 수당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는데 노조의 거부로 노사 양측이 계속 팽팽한 협상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위 기사는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 소속 근로자의 수당은 노사 양측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대자동차의 주말 특근 수당 역시 진행 중인 노사 양측의 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협상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측의 요구는 협상의 카드이며 그 내용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같은 개별 기업체의 노사 협상은 노사 자율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진행 중인 특정 기업체의 노사 협상에 대해 언론이 어느 일방의 편을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데도 위 기사는 노조의 주장을 ‘생떼’라는 표현으로 매도, 협상을 통해 근접점을 모색하고 있는 회사보다 더 나서서 노조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1면 머릿기사의 제목으로까지 달았다.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라고 볼 수 없다.

이같은 보도는 신문이 사회의 공기로써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신문

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12 신문윤리강령 위반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주문〉

국민일보 2013년 4월 9일자 8면 「대학가 ‘無알코올 축제’ 하자는데/“술 없이
된 재미 …” 어이 없는 반발」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술 없는 봄 축제에 대한 대학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무(無)알코올 축
제’를 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술 없이 무슨 재미로 축제를 하느냐’
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한호(27) 학생회장은 8일 “성인으로 첫 발을 내딛는 대
학생의 술 문화가 잘못된 관행으로 변질돼 온 게 사실”이라며 “학내 음주사
가 빈발하는 상황이어서 축제 기간 캠퍼스 절주 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국대학총학생회장모임(전총모) 소속 20여개 총학생회는 ‘캠퍼스 내 절주’
‘욕설·구타 근절’ ‘총학비리 근절’ 등을 3대 과제로 내걸고 이달 중 선포식을 가
질 예정이다. 건국대 용인대 국민대 한양대 중앙대 등도 축제시즌을 앞두고 ‘무
알코올 축제’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다. 술을 대체할 ‘놀 거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
에서다. 서울시립대 총학생회는 3일 학생총회에서 ‘무알코올 대동제’ 찬반투표
를 진행했지만 투표자 920명 가운데 찬성이 180표에 그쳐 무산됐다. 숙명여대

도 최근 총학생회와 과 대표들의 회의에서 캠퍼스 음주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술을 뺀 축제 아이템을 찾기 어렵다는 쪽의 의견이 우세했다. 지난해부터 교내 주점 설치를 금지한 한국외대는 최근 이를 어기고 주점을 연 동아리 회장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가 학내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 대학 학생회장은 “술 말고도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다”며 “술을 못하는 친구들은 축제에서 소외되는데, 모두가 함께 즐기려면 절주 분위기가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위 기사에서 봄 축제를 앞둔 일부 대학들에서 술 없는 축제를 치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거세다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총학생회가 지난 4월 3일 ‘무알코올 대동제’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920명 가운데 찬성은 180표에 그쳤다는 것이다. 또 얼마 전 숙명여대 총학생회와 과대표 모임에서도 『캠퍼스 음주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술을 뺀 축제 아이템을 찾기 어렵다는 쪽의 의견이 우세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 「“술 없이 뭐 재미…” 어이없는 반발」이라는 지극히 주관적 표현으로 달아 이러한 반대 의견들을 어이없다고 매도해버렸다.

이는 이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을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룬 기사 본문의 취지와도 동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편견에 따라 작성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런 편집태도는 신문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2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영권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영만

〈주문〉

파이낸셜뉴스 2013년 5월 8일자 1면 「경제정책 좌지우지 ‘국회 만능시대」
기사의 제목, 헤럴드경제 5월 9일자 6면 「내달에도 경제민주화 ‘폭탄’ 쏟아진다」
기사의 제목에 대해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위 신문들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회가 행정부에 앞서 경제·민생 정책을 주도하는
‘입법부 전성시대’가 열렸다. 행정부의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가 지난해 밝힌 총·대선 공약 실천의지를 바탕으로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선 것. 더욱이 6월 임시국회에는 공정거래법상 집단소송제와 신규
순환출자금지, 금산분리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어서 국회가 경제정책을 주도
하는 행보가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관련기사 8면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각종 경제·민생정책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이 갈
수록 탄력을 받고 있다. 단적인 예로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
가경정예산안 심사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
제 기본공제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에 기획재정
부는 곧바로 2014년 1월 1일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이 같은 제도를 적용
할 뜻을 발표했다.

더욱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인도 델리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및 아세안(ASEAN)+3 재무장관
회의에 불참, 대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및 본회의 출석을 통해 추경안 논의 추
이를 살폈다.

4.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입법도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박근혜정부 첫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양도소득세·취득세 한시감면 기준과 소급적용일 모두 여야 논의 과정에서 대폭 손질됐다. 특히 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통해 이례적으로 정부 발표 한 달 이내에 관련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통과, 이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와 함께 4월 임시국회 내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각종 법안들이 잇따라 처리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비롯해 '정년 60세 연장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이 일각의 예상을 깨고 여야 수정안 도출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욱이 유해물질 배출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의 경우 환경부(10%)와 산업통상자원부(1%) 간 의견차를 보인 상황에서 국회가 중재를 통해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대체휴일제 법안'은 국회가 행정부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대안이 없을 경우 안행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며 안전행정부에 압박하고 있다. 이에 안행부는 9월까지 공휴일 제도를 손질하는 등 대체휴일제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6월 임시국회 때도 국회의 입법 주도활동은 왕성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당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와 기업의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집중 논의할 뜻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 상정 직전 제동이 걸린 프랜차이즈법안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 개정안(일명 FIU법)도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헤럴드경제)= 『지도부가 교체된 민주당이 6월 국회를 앞두고 경제민주화

추진 과제의 새판짜기에 들어간다. 비대위 체제에서 만들어진 ‘여야 6인협의체’의 우선처리 합의 법안 83개 외에도 ‘이자제한법’ 등 새로운 의제를 설정, 경제민주화의 주도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포부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 상임위 간사 등 20여명의 소속 의원이 참여하는 ‘경제민주화추진의원모임(경민추)’을 중심으로 6월 국회에서 다룰 경제민주화 법안 선별 작업에 돌입했다. 9일에는 당 정책위가 주관하는 경민추 모임을 열어, 이들의 행보가 당 차원의 지원을 받을 것임을 시사했다.

당 관계자는 9일 “4월 임시국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부분이 주로 다뤄졌다면, 6월 국회에서는 대부업 이자제한, 채권추심 완화 등 서민경제 부분과 기업의 지배구조 부분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자제한법은 지난해 고금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피에타(Pieta) 3법’ 중 하나다. 현행 연 30%인 대부업 최고 이자율을 25%로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서민경제 보호 차원에서 추진된다. 파산 신청 후 선고 시까지 법원이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가 주거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도 추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불공정거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대기업과 대리점 사이에 벌어진 남양유업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제조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질서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추가입법 발의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여야 공통공약이나 6인협의체에서는 합의하지 못했던 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핵심 사안이다. 여야 합의에 실패한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 철회(금융지주회사법)도 재추진된다.

여야 6인협의체의 우선처리 법안에 포함됐으나,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에 계류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 법안

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채권추심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회생 및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권추심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정리해고 관련법’ ‘최저임금법’ 등이 4월 국회에 이어 6월 국회에서 재차 논의된다.

김한길 신임 당대표도 연일 ‘을(乙)을 위한 6월 국회’를 강조하며 이 같은 경제민주화 입법 움직임에 힘을 싣고 있다. 김 대표는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접견 자리에서 “6월 국회는 ‘을’을 보호하고 ‘을’을 살리는데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측근은 “당내 중도·진보 논쟁을 떠나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이라면서 “남양유업 사태 등으로 촉발된 경제민주화 바람에 당 차원에서 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두 신문은 모두 기사 본문의 내용을 과장·왜곡해 제목을 달았다. 파이낸셜뉴스는 새 정부 들어 행정부의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행정부에 앞서 경제·민생 정책을 주도한다면서 이같은 현상에 대해 ‘입법부 전성시대’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위 기사는 해당 사례를 열거하며 소개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의 제목을 ‘경제정책 좌지우지’ ‘국회 만능시대’라고 달았다. 이는 기사 본문 내용의 ‘입법부 전성시대’라는 표현을 훨씬 과장한 것이며 이 때문에 제목 표현이 주는 이미지는 기사 본문 표현과는 전혀 달라 결과적으로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국회가 행정부에 앞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현상은 보기에 따라서는 국회가 지난날의 무사안일에서 벗어나 성실한 본연의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오히려 기사 본문 표현을 부정적으로 과장해 ‘경제정책 좌지우지’ ‘국회만능’이라고 표현한 것은 편집자의 사적 의견을 지나치게 반영한 것이다. ‘좌지우지’나 ‘국회만능’이라는 표현은 은연중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고 이에 따라 기사 본문의 취지와 달리 국회가 잘못 가고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독자들에게 심을 수 있다.

헤럴드경제 제목 역시 편집자가 기사 본문의 내용을 부정적으로 과장함으로써, 왜곡을 초래했다. 위 기사의 본문은 민주당이 지도부 교체에 따라 6월 국회에서 경제 민주화 추진과제 새판 짜기에 들어간다는 취지로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위 기사는 민주당이 이자제한법이나 채권추심 완화, 불공정거래 바로잡기 등 서민경제 부분과 기업의 지배구조 부분을 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사실관계를 위주로 객관적 서술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목은 경제민주화 추진과제를 ‘경제민주화 폭탄’이라고 표현했다. 폭탄은 무차별적인 인마살상과 주거지 파괴가 목적인 병기인데 이러한 끔찍한 물건을 경제민주화 과제와 동의어로 비유한 것은 결국 경제민주화가 사람들에게 끔찍한 피해를 준다는 뜻이며 이는 편집자가 기사 본문의 취지를 벗어나 자신의 치우친 선입견을 제목에 반영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독자들에게 기사 본문의 사실 및 취지와 다른 내용을 제목으로 왜곡 전달함으로써 신문의 책임과 신뢰, 권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29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3년 4월 23일 1면 「엔低공습·역사도발 … 日, 또 ‘한반도 침략’」 기사의 제목, 4월 26일자 2면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 후속 조치를/통상임금 확대때 기업 38조 부담해야”」 기사의 소제목 「‘포폴리즘 법안’ 어떻게 있나」, 5월 6일자 1면 「유해물질관리법, 違憲·과잉입법 논란/ … 행정부·전문가 모두 반대」 기사의 제목, 5월 21일자 3면 「대주주 경영권 직접 겨냥 … 사실상 대기업 해체수준 ‘초강수’」 기사의 제목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4월 23일자/엔低공습...>=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의 폭주기관차를 연상케 하는 ‘우익 포퓰리즘’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 때부터 잇단 과거사 망언으로 우려를 자아냈던 아베 정부는 집권 후 경제(엔저 공세)와 외교(각료들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등으로 ‘도발’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베 정부의 최근 행태에 대해 “내부 위기 극복을 위해 주변국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은 ‘100년 만의 제2한반도 침략’으로 볼 수 있다”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23일 오전에는 일본의 여야 국회의원 168명이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한·일관계에 또 한번 찬물을 끼얹는 ‘상징적 사건’이다. 초당파 의원연맹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오쓰지 히데히사 자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168명이 야스쿠니 춘계 예대제(例大祭·제사)에 맞춰 야스쿠니를 참배했다고 밝혔다.

주변국은 아랑곳하지 않는 극우 포퓰리즘은 갈수록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부작용과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다.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외교적 도발로 인해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전격 취소된 데 이어 매년 5월 개최돼 온 한·중·일 정상회담 역시 언제 열릴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다. 정부 관계자는 “아베 내각에 사전경고했는데도 이번에 참배를 감행했다”고 밝혔다.(후략)』

<4월 26일자/정년연장...>= 『경제5단체 수뇌부가 26일 긴급회동에서 정치권을 향해 수정·철회를 요구하며 지목한 ‘포퓰리즘 입법’ ‘과잉 입법’들은 10여 개에 달한다.

경제단체들은 우선 ‘정년 60세’를 보장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정년연장법)의 경우 도입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다만 “기업 경쟁력 유지와 세대간 일자리 상생을 위해 60세 정년 규정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등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정년연장법이 통과할 경우 노사 간 최대의 갈등 요인이 될 ‘임금체계 개편’에서, 현행 연공급 임금체계가 장년층의 고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직무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체계(연봉제, 성과급제 등)로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다.

노동관련 법 가운데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고용정책 기본법’(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의무고용)에 대해서도 “고용 유연성과 고용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정비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단체들이 ‘과잉입법’으로 지목한 것은 우선 대체휴일제를 법으로 정하는 ‘공휴일법’이다. 국회에서 논란을 벌인 끝에 9월 정기국회로 처리가 미뤄지기는 했지만, “공휴일을 법으로 정한 것은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고,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입법 철회를 요구했다. 화학사고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의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벌칙을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과도한 행정제재·처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때 가산점을 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엄마가산점제)은 “미혼 여성, 미출산 여성, 남성에게 대한 차별을 야기하며 퇴직의 자발성 여부가 불분명해 노동시장의 혼란만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신속조치를 요구한 사안들도 있다. 지난해 대법원이 ‘근속수당과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이후 고정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정산해 달라는 노동조합들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경제단체들은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는 우리 기업들이 일시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최소 38조5000억 원에 달해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5월 6일자/유해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과잉입법’과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과징

금이 기업의 존속마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면서, 재계는 물론 입법전문가와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까지 반대의견을 내는 등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쟁점으로 부상한 이 개정안은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이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대상인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산정의 기준을 ‘매출액’으로 삼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3억 원인 관련조항을 수정, ‘영업정지를 갈음하거나 인적 사항피해가 발생한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의 10% 이하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경봉(경제학) 국민대 교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화학사고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과징금의 부과기준도 영업이익 등을 따지지 않고 매출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잉제재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대표적인 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의 2012년도 매출액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최고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그 액수가 조 단위로 해당 기업에 치명적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소업체는 “실수 하나가 기업 존폐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김성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한 회사가 폐업할 수도 있는 수준으로 행정 제재가 가해지면 행정 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돼야 하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5월 21일자/ 대주주 경영권 직접 겨냥...〉=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당정협의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6월에 집중 처리키로 하면서 정·재계 간에 또 다른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근로기준법(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지배구조 관련법 까지 가세해 기업들에 ‘삼중 압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사회 이슈화된

갑을(甲乙) 문제까지 겹쳐 이들 법안은 첨예한 사회적 논란을 촉발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기존에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국한된 주기적 대주주 자격심사를 증권·카드·보험사 등 비은행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은행권 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격을 심사해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 51개 법률에서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불이행 시 6개월 내 보유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초강력’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 안에는 주기적 대주주 자격심사 내용이 빠져 있지만 김기식·김기준(이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포함돼 있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지주사 회장의 제왕적 지배구조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 있다. 주요 집행 임원 임면 시 이사회 의결을 의무화해 최고 경영자(CEO)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고, 자체적인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마련,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외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사외이사 모범규준 개정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4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 6월 중순까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 4월 23일자 1면 머릿기사는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 극우 인사들의 도발적 언사와 엔저(低) 경제 정책으로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일보는 이 기사에 「엔저공습·역사도발 … 日, 또 ‘한반도 침략」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한반도 침략’이라는 표현은 은유적 수사인데 사실관계를 다루는 스트레이트 기사(사실기사)의 제목으로는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한 비유다.

국가간 외교관계는 늘 굴곡이 있기 마련이며 그같은 굴곡이 극대화한 것이

침략이다. 비록 지금 일본의 잘못된 우경화와 엔저 정책으로 양국관계가 급냉하고 있다 해서 이같은 상황을 곧바로 ‘침략’으로 비유한다면 양국간에 수없이 발생하는 유사 상황을 번번히 ‘침략’으로 비유해야 할 것이다.

4월 26일자 2면 기사는 여야 정치권이 다각도로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하자 경제5단체가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전하고 있으며 그 논조는 주로 경제5단체와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서술해야 하는데 문화일보는 경제5단체가 이른바 ‘포폴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법안들을 소개하면서 작은 제목으로 「‘포폴리즘 법안’ 어떤게 있나」라는 내용을 달았다. 여기에서 표현한 ‘포폴리즘 법안’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경제5단체가 포폴리즘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법안’이다. 그럼에도 문화일보의 제목은 마치 해당 법안들이 모두 객관적인 ‘포폴리즘 법안’인 것처럼 독자들에게 왜곡해 전달하고 있다.

5월 6일자 1면의 머릿기사 「유해물질관리법, 違憲·과잉입법 논란」은 「행정부·전문가 모두 반대」라는 작은 제목을 달았는데 이 제목대로라면 행정부와 전문가들 모두가 반대한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기사 본문을 보면 이같은 법개정 추진에 대해 행정부에서는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의견을 냈다. 또 전문가들 중에서는 안경봉 국민대교수가 『“... 면밀히 검토한 뒤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신중을 요구했고 김성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기사는 적고 있으며 김희균 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책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량을 정할 경우 견장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2면의 관련 기사 「“영업이익 최대 22배 과징금 ... 살아남을 기업 없다”」)고 지적한 것으로 적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문화일보가 임의로 선택한 소수의 인터뷰 대상자들로서 이들이 모든 행정부와 전문가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음에도 제목은 「행정부·전문가 모두 반대」라고 표현했다.

5월 21일자 3면의 「대주주 경영권 직접 겨냥 ... 사실상 대기업 해체수준 ‘초강수’」 제목의 머릿기사는 1면 머릿기사의 해설기사이다. 이 기사는 정부와 새

누리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현재 은행권에만 국한된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카드, 보험, 생명 등 비은행권 금융회사로까지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어 보험·카드사를 소유한 대기업에 경영권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사실상 대기업 해체수준’이라고 제목으로 표현하는 것은 과장이며 왜곡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문화일보의 제목 달기는 기사 본문에서 드러난 내용이나 표현, 그 취지와 달리 편집자의 의견을 치우치게 반영한 것으로 이는 독자들에게 사실을 왜곡 전달해 신문 제작의 기본인 정확성과 객관성·공정성을 상실함으로써 신문의 신뢰·권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66 신문윤리강령 위반

光州日報 발행인 김 여 송

〈주문〉

光州日報 2013년 6월 3일자 3면 「“5·16은 혁명, 5·18은 폭동” … 뉴라이트 ‘교과서 쿠데타’」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光州日報는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라이트 계열 보수학자들의 새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역사교과서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5·18광주민중화운동을 ‘폭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어서 5·18 왜곡·편향에 이어 교과서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와 5·18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1일 광주시청에서 ‘5·18 역사교과서 왜곡저지대응위원회’를 구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김영진 전 국회의원이 맡았다.

◇뉴라이트 교과서 검정 통과= 현행 역사교과서를 좌편향·친북 교과서라고 비판하며 이승만·박정희 시대를 미화해온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만든 역사교과서가 지난달 10일 국사편찬위원회 역사교과서 검정심의위원회의 검정본심사를 통과했다.

뉴라이트 저자들이 2008년 ‘한국 근·현대사’라는 대안교과서를 내놓은 적은 있지만 이들이 쓴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사용하는 검정과정에 합격한 것은 처음이다.

교학사가 발행하는 이 교과서는 현재 검정심의위가 권고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며 8월30일 최종 합격 여부가 발표된다. 최종 합격된 교과서는 9월 중 각 학교에 전시돼 학교별 채택과정을 거친 뒤 내년 3월부터 사용된다.

◇“5·16은 혁명, 5·18은 폭동”= 이들이 쓰는 교과서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뉴라이트 학자들이 밝혀온 견해를 고려하면 집필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은 ‘대안교과서’에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했다. 4·19 혁명도 ‘학생운동’으로 폄하됐다.

제주4·3사건과 5·18광주민중화운동 등 국가가 민간인에게 저지른 폭력을 단순히 ‘폭동’으로 기술하는 등 역사적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이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산업화의 아버지’로 보고 그 시절 이뤄진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은 축소하고, 긍정적인 면은 지나치게 부풀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역사 전쟁’ 재연 우려= 역사 전쟁은 2008년 교과서포럼이 대안교과서를 내놓으면서 본격화했다. 교과서포럼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인정하고 10월 유신을 합리화한 대안교과서를 내놓자,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필자 여러분이야말로 후손들을 위해 큰일을 하셨고, 덕분에 걱정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그해 말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포럼과 통일부·국방부·대한상공회의소 등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좌파적 편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금성교과서의 수정을 지시했다.

2011년엔 교과부가 역사교육 과정을 바꾸면서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자유민주주의’로 고치고 이후 교과서 집필기준도 대폭 변경했다. 새 집필기준에서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5·16 군사정변’ 등 현대사의 주요 역사적 사실들이 빠지면서 여론의 반발이 빗발치자, 국사편찬위원회는 “집필기준엔 넣지 않았지만 이 사건들을 교과서 집필할 땐 꼭 넣으라”는 교육책을 내놓기도 했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2일 광주에서 열린 ‘현문즉답’ 행사에서 “5·18은 정치적으로 대립돼 있는 이슈”라고 말해 지역 사회와 역사학계의 반발을 샀다.

이와 관련, 5·18 역사교과서 왜곡저지대응위원회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5·18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총체적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光州日報의 위 기사는 뉴라이트 계열 보수학자들이 만든 새 역사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면서 ‘역사교과서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의 핵심은 뉴라이트 계열 보수 학자들이 2008년에 내놓은 ‘대안교과서’에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했고,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단순히 ‘폭동’으로 기술하는 등 역사적 사실관계를 왜곡했기 때문에 이들이 만들어 검정을 통과한 새 교과서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사는 문제의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은 채 과거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의 주장 등을 인용하는 것으로 새 교과서 내용을 ‘예상’하는 데 그치고 있다.

기사는 뉴라이트 계열의 보수 학자들이 펴낸 ‘대안교과서’ 내용도 왜곡했다.

기사는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은 ‘대안교과서’에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했다. 4·19 혁명도 ‘학생운동’으로 폄하됐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국가가 민간인에게 저지른 폭력을 단순히 ‘폭동’으로 기술하는 등 역사적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안교과서’는 4·19는 “4·19 민주혁명”으로, 5·16은 “5·16 쿠데타”, 5·18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각각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안교과서를 공동집필한 이명희 공주대 교수 역시 지난 6월 5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전화연결에서 “5·18을 반란, 폭동으로 기술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사는 새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추정하면서 이 교과서를 펴낸 교학사의 해명이나 반론을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교학사는 새 역사교과서 문제가 불거진 5월 31일 반박 보도 자료를 내놓았다. 광주일보가 이 기사를 보도한 날자는 사흘 후인 6월 3일자였다.

편집자는 더 나아가 본문 내용이 미확인 사실임에도 큰 제목으로 “5·16은 혁명, 5·18은 폭동” … 뉴라이트 ‘교과서 쿠데타’로 뽑았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이라는 언론윤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97 신문윤리강령 위반
부산일보 발행인 이 명 관**

<주문>

부산일보 2013년 8월 1일자 11면 「새누리 ‘홍준표 경남지사 재공천’ 딜레마」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부산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새누리당이 ‘홍준표 딜레마’에 빠졌다.

내년 지방선거 때 홍준표 경남지사를 다시 공천하기도, 그렇다고 낙천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현재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기류는 ‘홍준표 대항마’만 나타나면 내년 경남지사 선거에서 홍 지사를 공천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당내에 “경남지사를 야권에 빼앗기더라도 새누리당이 전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홍 지사를 공천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들도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복지공약 전체가 공격당할 수 있다는 이유이다.

상당수 새누리당 인사들은 홍 지사를 ‘트러블 메이커’로 본다.

정부와 긴밀한 상의없이 진주의료원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박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했고, 언론과도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당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그렇다고 ‘독불장군’ ‘홍반장’으로 소문난 홍 지사를 일방적으로 내치기도 쉽지 않다.

최근 모 언론이 실시한 4개 광역단체장 지지도 조사에서 홍 지사의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 홍 지사가 경남지사 재선에 나설 경우 ‘지지할 것’이라는 응답(35.4%) 보다 ‘지지하지 않을 것’이란 답(53.6%)이 훨씬 높았다. 그러나 홍 지사는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김경수 민주당 경남김해울 지역위원장, 공민배 전 창원시장 등 야권후보와 맞대결에선 10% 이상 앞섰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새누리당은 “현재 당 지지도를 감안할때 누구를 내세워도 야권 후보를 이긴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홍 지사의 ‘대항마’를 찾는데 우선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지난번 당내 경선에서 홍 지사에게 패한 박완수 창원시장을 거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본선 경쟁력이 약해 제외시키는 분위기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박 시장의 정치력으론 홍 지사를 누르기 힘들고, 야권 후보를 이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학송·권경석 전 의원, 하영제 전 농림수산물 품부 차관 등도 거론되지만 경쟁력이 약하다는 평가이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남지사를 지낸 김태호 의원을 다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김 의원은 내년 새누리당 대표 선거에 도전한뒤 2017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만 현재로선 홍 지사와 야권 후보들을 동시에 제압할 사람은 김 의원 밖에 없다는 얘기가. 하지만 이 가설도 김 의원이 수용하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렵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홍 지사를 경선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복잡한 사정을 반영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의 ‘홍준표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다.』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801000185>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의 위 기사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재공천’ 문제를 둘러싼 새누리당의 고민을 소개한 기사다. 기사는 새누리당이 내년 지방선거 때 홍지사를 다시 공천하는 문제를 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전하고 있다.

위 기사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에 대한 해석이 덧붙여진 해설기사다. 때문에 스트레이트 기사와는 달리 기자의 의견이나 식견, 안목이 반영될 수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사실관계는 명확해야 한다.

기사는 이와 관련, 『새누리당의 전반적인 기류는 ‘홍준표 대항마’만 나타나면 내년 경남지사 선거에서 홍 지사를 공천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 『당내에 “경남지사를 야권에 빼앗기더라도 새누리당이 전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홍 지사를 공천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강경파들도 적지 않다.』 『상당수 새누리당 인사들은 홍 지사를 ‘트러블 메이커’로 본다.』 『새누리당은 홍 지사의 ‘대항마’를 찾는데 우선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지난번 당내 경선에서 홍 지사에게 패한 박완수 창원시장을 거론하는 사람

들도 있지만 본선 경쟁력이 약해 제외시키는 분위기이다.』『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남지사를 지낸 김태호 의원을 다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등으로 기술, 전체적으로 홍 지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차기 선거 출마에 필수적인 당의 재공천 문제는 현역 정치인인 홍 지사에겐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기사가 새누리당 내에 홍 지사에 부정적인 기류가 주류라는 점을 지적하고 분석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홍지사의 행적에 대한 논란과는 별개로, 일반적인 ‘선거기사’에 버금가는 엄격한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을 갖추어 기술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사 전체에서 사실이나 논리 전개의 근거가 될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최근 모 언론이 실시한 4개 광역단체장 지지도 조사』 뿐이고, 그 밖에는 기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일부 익명의 취재원의 발언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 또 위의 지지도 조사 결과도 홍 지사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야권 후보와의 맞대결에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가 전체적으로 반 홍지사의 기류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은 객관성, 공정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이러한 보도 자세는 신문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49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문〉

헤럴드경제 2013년 10월 16일자 1면 「‘팽’당한 에너지 희망 ... ‘원전대계’ 무너지나」 제목의 기사에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머슴 하나가 있었다. 35년간 주인에게 충성했다. 밥은 많이 먹었지만, 힘 하나는 장사였다. 다른 머슴보다 3~4배 일을 많이 했다. 주인은 그래서 그 머슴을 애지중지했다. 그런데 힘이 빠지고 병색이 돌자, (물론 그 머슴은 그렇게 생각지 않지만) 주인은 머슴에 대한 애정을 거뒀다. 다른 젊고, 힘센 머슴에게 눈길을 돌렸다. 충직했던 머슴은 토사구팽을 당하는, 착잡한 심경을 맛봤다.

그 머슴, 다소 과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원전(原電)’이다.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민간 워킹그룹이 원전비중을 2035년까지 20%대로 낮추겠다고 하면서 원전이 그런 입장에 처해진 것이다.

원전은 에너지의 희망이었다. 100년 대계(大計)였다. 지난 1970년대 말 중화학 육성정책과 맞물려 원전 건설은 장려됐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값싸게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발전(發電) 수단이라고 수십년간 칭송됐다.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을 일군 바탕 중 하나는 그런 원전의 값싼 전기로 중화학은 물론 전자 반도체 철강 화학 조선 자동차 등이 경쟁력을 확보한 채 성장할 수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에 역대 정부는 원전 건설에 몰두해왔고, 이명박정부에 이르러서는 41% 비중으로까지 올리겠다고 원전 ‘올인 정책’을 펼 것이다.

그런데 워킹그룹이 권고한 2035년 원전 비중(설비용량 기준)은 22~29%로,

41%와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현재 전체 발전원 가운데 원전비중은 26.4%(석탄 31%, LNG 28%)임을 보면 워킹그룹의 권고안과 그리 차이는 나 보이지 않지만, 문제는 향후 20년 뒤면 에너지 사용량이 현재보다 엄청 늘 것이라는 점에서 '원전 역할의 후퇴'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워킹그룹의 권고안이 시대 흐름을 완전히 거역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전 세계에선 원전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음이 발령된 상태다. 원전 강국 독일 등 원전 속도를 늦추고 있는 곳도 상당수다. 4면으로 계속

문제는 워킹그룹의 권고안은 원전 이후의 대체에너지에 대한 실효성이 빠져 있고, 전기 가격과 수요에 대한 해법이 결여돼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35년간 충직하게 일해온 머슴을 대신할 새 머슴을 구하지 못한 채, 구박만 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 원전 사고로 거세게 불고 있는 반(反)원전 여론을 의식하다보니 일단 원전 비중 감축 방향을 정하고 보자는 심리가 짙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나명수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친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는 “‘원자력이 (향후 에너지시대의)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가 새 시대 대체에너지가 되기 어렵고, 바이오메스·태양열·수력·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도 원전 이후의 주요 대안이 되기엔 현재로선 요원하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이러다보니 원전에 대한 ‘홀대’는 기회주의적이며 20년 후의 한국경제를 고려치 못한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비판도 뒤따른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현재로선 원전만한 값싼 에너지는 없다”며 “대체에너지가 마땅치 않은 지금, 원전 비중부터 줄이자는 것은 산업용 전기료는 물론 가정용에도 뒤따를 엄청난 부담 증가를 그냥 감수하자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원전을 대체할 석탄은 CO₂ 배출 문제가 있고, 그나마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LNG는 발전단가가 원전의 2.65배에 달한다. 현 계획대로라면 철강, 화학 등 값싼 원전 전기를 사용했던 기초소재 업종은 경쟁력이 약화될 대로 될 것이고, 이는 자동차, 조선 등 가공

업종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가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35년간 충직하게 일해온 머슴과 그 못잖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머슴, 이들의 조화를 일궈낼 ‘주인의 슬기’가 필요한 때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최근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이 2035년까지 원전 비중을 당초 계획인 41%에서 20%대로 낮추자면서, 원전 확대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는 내용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을 정부에 권고한데 대해 비판적 관점에서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위 기사는 글머리에서 원전을 머슴에 비유, 정부가 원전 비중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줄인다면 이는 머슴이 늙고 병색이 돌자 주인이 애정을 거두는 것과 같다고 서술했다. 헤럴드 경제는 이같은 비유 내용을 1면 머릿기사인 이 기사의 제목에 반영했다.

하지만 이같은 ‘머슴’의 비유는 위 기사의 원전 정책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 민간워킹 그룹이 원전 비중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자고 권고한 이유는 원전이 늙고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이 인류에게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원전 확대 일변도 정책의 그늘 아래에서 엄청난 조직적 비리가 기생했으며 이로 인해 원전 시설의 부실도 만연했음이 뒤늦게 드러나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견잡을 수 없이 커졌던 것이다.

결국 위 기사 중 ‘머슴’의 비유는 사안의 본질을 외면함으로써 중대한 비유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즉, 기자가 자신의 의견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또 헤럴드경제가 위 기사의 소제목을 통해 「전문가들 “무책임한 정책”비난」이라고 밝힌 표현도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다. 기사에서 인용한 전문가는 두 사람으로서, 이들 중 아무도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발언은 하지 않

았으며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표현과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한 이도 두 사람 중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 뿐이다. 당연히 유 본부장이 전체 원전 전문가를 대변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소제목에서 마치 전체 원전 전문가들이 모두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난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처럼 사실과 의견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기자의 의견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신문의 책임성과 권위, 독자의 알 권리를 크게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50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준식

〈주문〉

스포츠조선 2013년 9월 23일자 1면 「박원순 서울시장님 책임입니다/처참한 상암벌 논바닥 잔디!」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략) 눈물겨운 노력이 있는 반면 여론과는 동떨어진 그라운드가 있다. 여러차례 경고음이 울렸다. 하지만 결국 ‘국제 망신’을 당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의 성지 서울월드컵경기장이 한국 축구의 격을 떨어뜨리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스포츠조선은 이달 초 ‘이제는 클래스다!’ 코너를 통해 상암벌의 ‘비상식 그라운드’를 지적했다. 그라운드는 생기를 잃은 지 오래다. 곳곳이 맨땅이다. 급하게 잔디를 손질하지만 선수들이 한 번 지나가면 끝이다. 경기력에도 영

향을 미친다. 패스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고, 드리블도 쉽지 않다. 선수들은 볼을 차면서도 틈만 나면 패인 잔디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다. 3류 그라운드 탓에 선수들도 부상에 노출돼 있다.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ACL 8강 2차전이 벌어졌다. FC서울이 천신만고 끝에 4강에 올랐다. 하지만 그라운드는 부끄러운 한국 축구의 자화상이었다. 비토르 페레이라 알 아흘리 감독은 “우리는 패스를 통해 경기 운영을 풀어나가는 팀인데 잔디가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토로했다. 아랍기는 최용수 서울 감독도 마찬가지다. “좋은 잔디에서 좋은 패싱 축구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쉬웠다.” 서울과 알아흘리전은 아시아 전역에 중계됐다.

‘인재’다.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산물이다. 서울특별시의 현주소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시민을 미소짓게, 서울을 아름답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공기업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한다. 서울시 산하에 있다. 여론의 지적에도 반응은 더뎠다. 반성은 없었다. 조목조목 절차만 따졌다. 잔디 복구를 위해 6000만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했지만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최근 승인이 떨어졌지만 입찰을 통해 잔디 보수 업체를 또 선정해야 한다. 서울은 25일 에스테그랄(이란)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ACL 4강 1차전을 치른다. 그 때까지 원상 회복되진 못한다. 또 한번 국제 망신을 당할 일만 남았다. 다음달 12일 브라질과의 A매치에 맞춰 긴급 보수 작업을 마칠 계획이란다. A매치와 ACL, 차별을 두는 발상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스포츠를 바라보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지도 궁금하다. 능력이 안되면 기업구단에 그라운드 운영을 맡기면 된다. 밥그릇은 내놓지 않으면서도 관리는 부실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대한축구협회도 문제가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영국과 중국을 제외하고 ‘1국가-1협회’를 원칙으로 한다. 대외 창구는 프로연맹이 아닌 축구협회다. 축구회 고위관계자들은 서울의 8강 2차전을 현장에서 관전한 후 상암벌의 어두운 현실을 직시했다. 그리고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브라질과의 친선경기 걱정으로 우려를 토해냈다. 그러나 ACL도 신경을 써야하는 무대다. 어떤 경로든 사전에 우려를 전달했어야 했다. 일본축구협회의 경우 ACL이 열리

는 경기마다 관계자들을 파견해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극과 극의 후진 행정이다.』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309240100186590014305&serviceDate=20130923>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프로축구 구단 FC서울의 홈구장인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척박한 잔디 상태를 고발하며 그 원인과 대책을 따지고 분석한 기획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지난 9월 18일 FC서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아흘리와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ACL) 8강 2차전을 치를 당시 잔디 곳곳이 맨땅이어서 선수들이 패스와 드리블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애를 먹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경기가 아시아 전역에 중계됐기 때문에 국제적 망신까지 샀다고 기사는 지적했다.

그런데 스포츠조선은 1면 톱으로 보도한 위 기사 제목을 「박원순 서울시장님 책임입니다/처참한 상암벌 논바닥 잔디!」라고 달면서 박 시장의 얼굴 사진을 문제의 잔디 그라운드 사진 중간에 돋보이도록 배치했다. 제목만 놓고 보면 박 시장의 잘못 때문에 경기장 잔디가 엉망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위 기사에도 일부 지적된 것처럼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생긴 축구경기장 잔디 부실의 책임이 전적으로 서울시장에게 있는 것처럼 1면 톱 제목으로 단정해 비난한 것은 지나친 논리비약이며 과장이다.

특히 위 기사가 보도되기 얼마 전에는 박 시장 측과 새누리당 사이에 '무상보육' 채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펼쳐진 터여서 이렇다할 근거없이 박 시장을 겨냥한 위 기사의 제목은 자칫 박 시장을 정치적으로 흠집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살 소지도 있다.

서울시는 위 기사가 나간 이후 해명 자료를 통해 “지난 7월 20일부터 이틀간 동아시안컵 경기로 4경기를 연속으로 치르는 등 13경기를 무리하게 치르는 바람에 잔디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지만 경기가 계속 열려 잔디가 뿌리 내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은 그러나 위 기사는 물론 그 이후에도 서울시의 이 같은 해명을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51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문〉

스포츠조선 2013년 9월 23일자 18면 「오너 지분 경쟁에 ‘나사 풀린’ 롯데그룹」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58)과 그의 형인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59)이 ‘책임경영’을 앞세우며 올해들어 계열사 주식을 잇따라 매입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 내에선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질 않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들 형제가 실제로는 책임경영과는 상관없이 지분경쟁에만 몰두, 회사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에선 최근 고객 사은품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꿀 제품을

제공했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일부 고객에게 제공한 홍삼꿀차와 대추꿀차, 블루베리 꿀차, 아카시아꿀 제품이 문제가 됐다. 이들 제품은 정문농업법인(주)(경북 경산시 소재)이 제조한 것으로 홍삼꿀차와 대추꿀차는 유통기한이 3년 이상 경과됐고, 블루베리꿀차와 아카시아꿀은 8개월 이상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제품의 판매금지와 함께 회수조치를 취했다.

롯데백화점 대구점이 해당제품의 납품과정에서 제대로 체크를 하지 않은 셈이다.

이에 앞서 롯데백화점 청량리점에선 지난 4월21일 여성복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여성(47)이 백화점 옥상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A씨는 투신 직전 의류매장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 앞으로 '대리님, 사람들 그만 괴롭히세요. 대표로 말씀드리고 힘들어서 저 떠납니다'라는 글을 남겨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백화점 측의 매출압박을 견디지 못해 A씨가 자살했다는 것이 당시 주변의 분석이었다.

롯데는 각종 법규를 어기는 것도 '단골 손님'이다.

롯데그룹은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3년 간 내부거래 관련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4억470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미의결·미공시 등 위법행위 11건이 적발됐다. 공정거래법은 자본금 5억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대해 '특수관계인과 자본금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반드시 공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회사별로는 롯데상사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호텔롯데와 롯데푸드, 롯데브랑제리 등이 각각 1건씩의 위반사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신동빈 회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듯 지분 늘리기 행보를 가속화해 '경영권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5월 롯데케미칼 주식 6만2200주를 100억여원을 들여

매입했다. 신 회장은 6월에는 롯데제과 주식 6500주와 롯데칠성 주식 7580주를 사들였다. 신 회장의 롯데제과 지분율은 5.34%, 롯데칠성의 지분율은 4.96%로 높아졌다. 신 회장은 이달 9일부터 13일까지는 롯데손해보험 주식 100만 주를 매입하기도 했다. 신 회장은 이번 주식 매입 이전에는 롯데손해보험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었다.

신동빈 회장의 이같은 움직임에 자극받은 것일까? 신 회장과 함께 그룹의 경영을 양분하고 있는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도 최근 주식매입에 나서 두 형제의 '지분 경쟁' 가능성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신동주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제과 주식 643주를 매입해 지분율을 3.52%로 높였다. 신 부회장이 롯데제과 주식을 사들인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10년 만이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부회장은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인 롯데쇼핑 지분을 각각 13.46%, 13.45%를 갖고 있어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의 우세를 점치기 어렵다.

롯데그룹 측은 오너일가의 주식매입에 대해 '책임경영'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사건과 사고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형국이다.』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309230100182680014002&servicedate=2013092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위 기사에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그의 형인 신동주 일본 롯데 부회장이 올 들어 계열사 주식을 잇달아 매입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 내에서 크고 작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형제가 지분경쟁에만 몰두하면서 회사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 같다는 것이 기사의 골자다.

기사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지난 5월 롯데케미칼 주식 6만2200주를 100억여원을 들여 매입했고, 6월에는 롯데제과 주식 6500주와 롯데칠성 주식 7580주를 사들였으며, 9월에는 롯데손해보험 주식 100만 주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신동주 부회장은 지난 8월 롯데제과 주식 643주를

매입했다.

기사는 『두 형제의 ‘지분 경쟁’ 가능성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면서도 『롯데그룹 측은 오너일가의 주식매입에 대해 ‘책임경영’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만 놓고 보면 두 형제가 ‘지분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추정일 뿐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그런데 위 기사가 제시한 롯데그룹 내 불상사는 ▲롯데백화점 대구점 고객 사은품으로 유통기한 넘긴 꿀 제품 제공 ▲지난 4월 21일 롯데백화점 여성복 매장 여성 매니저 투신자살 ▲롯데그룹이 지난 3년간 내부거래 관련 부실 공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태료 4억4705만원 부과받은 것 등 세가지 사안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여성 매니저 자살 사건과 내부거래 부실 공시 등 두 건은 신동빈 회장이 올들어 처음으로 주식을 사들인 지난 5월 이전에 일어났다. 설사 두 오너형제가 ‘지분경쟁’에 나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두 건의 불상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스포츠조선은 두 사람의 지분경쟁으로 인해 경영이 방만해진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인 양 기사 큰 제목을 「오너 지분 경쟁에 ‘나사 풀린’ 롯데그룹」이라고 단정적으로 큰 제목을 달았다.

그리고 롯데 측의 해명이나 반론을 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주관적 의도나 편견에 따라 과장되고 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이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81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문〉

경향신문 2013년 10월 31일자 1면 「학생 역사인식보다 뒤쳐진 역사교과서/중·고생 70% “친일 규명은 정부·국회서 해야」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국의 중·고교생 10명 중 7명은 정부나 국회에서 친일 민족반역자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 일각에서 일제 통치의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학생들이 오히려 냉정한 평가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의 역사 논란이 학생들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다.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역사교육연구소가 지난 5~6월 전국 중3, 고2 남녀 학생 12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사인식 설문조사 결과 ‘일제강점기의 친일 민족반역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부나 국회가 나서 진상을 밝히고 민족반역 행위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는 답이 38%로 가장 많았다. ‘정부나 국회가 친일 진상을 밝히고 기록으로 후세에 남겨야 한다’는 답도 31%였다. 이어 ‘시민단체가 앞장서 친일 진상을 밝혀야 한다’(12%), ‘지난 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11%), ‘일제강점기에는 누구든 일본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친일 문제를 따질 수 없다’(8%) 등의 순이었다.

예상과는 달리, ‘평소 역사에 흥미와 관심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흥미와 관심이 꽤 있는 편’(34%), ‘언제나 흥미와 관심이 있다’(12%) 등의 긍정답변이 46%로, ‘흥미와 관심이 별로 없다’ 등의 답변(22%)의 2배를 넘었다.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노동자·농민들이 생산활동을 열심히 하였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많은 반면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꼽은 답변은 8%로 최하위였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아이들은 미래지향적인 역사 교육을 꿈꾸고 있는데, 정작 역사교과서 논쟁은 ‘반공’ 등 지난 시기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교육을 퇴행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일식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연세대 교수)은 “대부분의 국민과 학생들은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며, 경제발전도 특정 리더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피와 땀이 모여 이뤄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특정 리더십만 강조하는 교학사 교과서의 가치보다 훨씬 성숙해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302321185&code=94040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이 1면 톱으로 보도한 위 기사는 전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사인식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요지는 큰 제목의 표현대로 「학생 역사인식보다 뒤쳐진 역사교과서」라는 것이다. 이 기사에서는 ‘역사교과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과서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기사 중 ‘시리즈 8, 9면’이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향신문 같은 날자 8, 9면 기획 특집에서 비판적으로 소개한 ‘교학사 교과서’를 일컫는 것으로 여겨진다.

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는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역사교육연구소가 지난 5~6월에 전국 중3, 고2 남녀학생 1,28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사는 설문 항목 가운데 ‘일제 강점기의 친일 민족반역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초점을 맞추었고, 위 기사에 적시된 5가지 답변 항목별 응답자 수를 근거로 『한국의 중·고교생 10명 중 7명은 정부

나 국회에서 친일 민족반역자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문 조사 결과를 ‘교학사 교과서’ 내용과 비교하려면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 민족반역자’ 처리에 대해 어떻게 썼는지를 함께 따져보는 것이 객관적 사실보도의 원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위 기사는 ‘교학사 교과서’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객관적 근거 제시도 없이 『학생들이 오히려 냉정한 평가를 주문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사회의 역사논란』이, 즉 ‘교학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셈』이라고 상대적 평가를 내렸다.

기사는 이어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과 연관지어 『아이들은 미래지향적인 역사 교육을 꿈꾸고 있는데, 정작 역사교과서 논쟁은 ‘반공’ 등 지난 시기의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교육을 퇴행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미래지향적인 역사 교육을 꿈꾸고 있는 데』라는 기술의 근거는 기사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기사는 이를 ‘역사 교과서 논쟁’에 대비시켜 『교육을 퇴행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따라서 경향신문의 위 기사와 제목은 주관적 의도나 편견에 따라 과장되고 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이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310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 문〉

朝鮮日報 2013년 9월 11일자 1면 「채동욱 총장 婚外아들 생모로 알려진 임씨, 본지에 편지/“아이 아버지는 다른 蔡모씨 채동욱과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학적부에 아버지로 올려”/법조계 “비논리적 주장 … 특가 유전자 검사 받아야”」 기사와 제목에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채동욱(54) 검찰총장의 혼외(婚外) 아들(11)을 낳은 것으로 보도된 Y(54)씨가 10일 ‘채 총장은 경영하던 술집의 손님으로 아들의 아버지가 아닌데도 내 식구들에게까지 (애 아버지로) 속여 왔다. 진짜 아버지는 다른 채모씨’라는 내용의 주장을 담은 편지를 본지에 보내왔다.

편지에 ‘임○○’라는 실명(實名)을 밝힌 그는 “밝힐 수 없는 개인 사정으로 어떤 분의 아이를 낳게 됐고, 아버지 없이 제 아이로 출생 신고했다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게 되자 아버지를 채동욱씨로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본지와 한겨레신문에 이날 각각 배달된 임씨 명의의 편지는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임씨는 이어 “채동욱씨를 (10여년 전) 부산에서 술집을 할 때 손님으로 알게 된 후 서울에서 사업(레스토랑과 술집)을 할 때도 제가 청(請)하여 여러 번 보게 됐다”며 “(아이가) 채동욱씨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렵고 가게(술집)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채동욱) 이름을 함부로 빌려 썼다”고 했다. 술집 단골손님인 채 총장을 아이 ‘아버지’라고 하면 사업도 수월하고, 주변에서도 깔보지 않을 것 같아서 최근까지 자기 가족을 비롯한 주변 모든 사람을 속여 왔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비상식적 주장의 배경에는 언론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사건을 미궁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하창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혼외 아들의 진위는 차치하고서라도 채 총장이 공직자로서 어떻게 처신했길래 주점 여사장이 자기 이름을 팔고 다니도록 했는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임씨의 비(非)논리적 편지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면서 “채 총장과 임씨가 즉각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여론은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것”이라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을 두었다고 처음으로 보도했던 朝鮮日報가 후속 보도로 내보낸 것이다. 기사는 당초 朝鮮日報가 채 총장의 婚外 아들의 생모로 보도한 임모씨가 朝鮮日報에 보내온 편지내용을 주로 전하고 있으며 이 편지내용에 대한 법조계 인사 2명의 반응도 덧붙이고 있다.

위 기사는 본문에서 임씨의 편지 내용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이런 비상식적 주장의 배경에는 언론을 통해서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사건을 미궁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왜 ‘비상식적 주장’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이 문장 다음에 이어지는 법조계 인사 2명의 발언 내용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사건을 미궁에 빠뜨리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는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처럼 임씨의 편지내용을 두고 합당한 근거없이 ‘비상식적 주장’이라고 단정하고, 인용한 발언에도 없는 내용을 ‘법조계’의 의견인 것처럼 적은 것은 객관적 사실 기술이 아닌 기자의 의견 기술일 뿐이며, 결과적으로 기자는 이들의 발언 내용을 아전인수식으로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장의 기술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이 특히 사실기사(스트레이트 기사)에서 강조하는 ‘사실과 의견의 구분’ 원칙을 외면한 것이다.

또 이 기사는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의 말을 인용, 『“임씨의 비(非)논리적

편지 내용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면서 “채총장과 임씨가 즉각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여론은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기사가 인용한 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의 발언 내용 속에는 ‘비(非)논리적 편지 내용’이나 또 ‘즉각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으면 여론은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것’이라는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방적이고, 근거없는 주장을 설득력있는 ‘법조계’ 인사의 의견인 것처럼 기사에 담은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어기는 것이다.

또 위 기사의 부제목을 보면 「... 법조계 “비논리적 주장 ... 즉각 유전자 검사 받아야”」라고 돼있다. 기사 본문 중 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은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 한 사람의 발언 내용뿐이다. 그나마도 그가 직접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론’의 동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제목에서 이 발언 내용을 토대로 이를 ‘법조계’라고 지칭, 유전자 검사 요구가 법조계 전체의 일반적 견해인 것처럼 표현한 것은 기사 본문 내용을 왜곡·과장한 것이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신문의 표제는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해야 하며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기사본문에서 객관적 사실과 기자의 의견을 구분하지 않고, 또 제목에서 기사본문의 내용을 과장·왜곡한 것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보도해야 하는 신문의 신뢰와 권위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 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01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문〉

매일경제 2014년 1월 7일자 1면 「지자체 한마디에 1.4조 허공으로/인천 서구청 “SK공장 증설위법 … 공사 당장 멈춰라”」·A14면 「공사 지연 피해 매달 1000억/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 중단 위기」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자체 한마디에…〉= 『SK그룹이 인천에서 진행 중인 화학공장 증설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자칫 지금까지 공사에 투입된 1조4000억원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질 판이다.』

인천시 서구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SK인천석유화학 측에 ‘파라자일렌 생산 제조시설’ 증설 공사를 중단하라고 1월 중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5일 인천시가 권고한 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열흘간 SK인천석유화학 공장 증설과 관련해 인허가 기관인 서구를 상대로 공장 증설 승인 및 건축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과정 일체를 감사했다. 그 결과 SK인천석유화학은 공작물 17기, 공작물 제조시설 5092㎡와 공작물 부대시설 3만2899㎡를 누락시켜 서구에 신고했으며 2006년 2분기~2008년 3분기와 2010년 2분기~2012년 2분기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 인천시는 서구청이 SK인천석유화학의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하고 각종 변경·승인신청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내줬다고 보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원유를 정제해 합성섬유와 페트병 원료인 파라자일렌(PX)을 생산하는 공장을 지난해 초부터 증설하고 있다. 총 1조6000억원 정도 투자될 예정인

이번 공사의 공정률은 90% 수준으로 이미 1조4000억원 이상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SK 측은 공사가 중단되면 매월 540억원가량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 측은 “1조원 이상을 투자했는데 공사가 중단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7909>)

〈공사지연 피해…〉= 『SK그룹이 1조6000억원을 투자한 화학공장이 자칫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겉으로는 승인 절차와 환경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지만 주변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인천 지역 정치인들의 힘 겨루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이 인천 서구 지역에 증설 중인 화학공장은 당초 올해 4월 완공 예정이었다. SK 측은 이 공장에서 ‘파라자일렌’이란 합성섬유와 페트병 원료 물질을 생산한 뒤 이를 중국에 있는 다른 화학공장으로 옮겨 고순도 테레프탈산 제조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6일 인천 서구청 측이 “공장 증설 중단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됐다.

SK 측은 일단 인천시와 서구청의 시정 요구 사항을 받아본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구청이 산업통산자원부에 증설 공사 승인이 적법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해석 결과에 따라서는 공사 중단이 장기화하거나 아예 증설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사 중단이 길어지면 시장 선점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매달 매몰 비용만 5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영업이익 감소·공정비 부담·원유 장기 도입 계약 손실 등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은 매달 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에는 국내 대형 기관투자자들 자금도 투입됐다.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3500억원을 투자했으며, 사학연금도 1000억원가량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증설이 지연될수록 국민에게도 피해가 돌아가는 셈이다.

법조인들 역시 인천시와 서구청의 대응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인천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공사 승인 취소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과태료 부과 정도로 그칠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책임 소재도 문제다. 당초 공사 승인을 해준 건 인천 서구다. 스스로 승인한 사안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사실 이번 논란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불거졌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SK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 승인은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인천 서구청장직을 맡고 있던 2006년 이뤄졌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인천 서구청장과 인천시장이 모두 야당 출신으로 교체된 이후에도 이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공장 증설 건축 허가가 난 것도 지난해 1월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766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의 위 기사들은 인천 서구청이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을 중단할 것을 예고했다는 내용의 스트레이트 기사와 관련 해설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청은 SK인천석유화학 측에 ‘파라자일렌(PX) 생산 제조시설’ 증설 공사의 중단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는 인천시의 감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인천시는 앞서 인허가 기관인 서구청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해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기사는 전했다.

1면 스트레이트 기사는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증설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자칫 지금까지 공사에 투입된 1조 4000억원 이상이 허공으로 사라질 판』이라고 보도했다.

편집자는 이를 토대로 큰 제목을 「지자체 한마디에 1.4조 허공으로」로 뽑았다. 제목대로라면 서구청의 공사 중단 예고에 투입 공사비 1조 4000억원이 사라졌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기사가 제기한 ‘가능성’을, 제목은 ‘실현’된 것으로

표현한 셈이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공사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 1조 4000억원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또 기사 내용을 보면 설사 1.4조가 허공으로 살아지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그 것은 공장 증설 과정에서의 SK측의 잘못이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제목에서 그러한 사실을 비껴 간 채 ‘지자체의 한 마디에’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을 충실하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편집자의 예단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 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A14면 해설기사는 자치단체의 공사 중단 예고와 관련, 모두에서 『겉으로는 승인 절차와 환경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지만 주변에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인천 지역 정치인들의 힘겨루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해당사자는 물론이고, 독자와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말미에서 『사실 이번 논란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불거졌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SK인천석유화학의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 승인은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인천 서구청장직을 맡고 있던 2006년 이뤄졌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인천 서구청장과 인천시장이 모두 야당 출신으로 교체된 이후에도 이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공장 증설 건축 허가가 난 것도 지난해 1월이다.』라고 적었을 뿐 납득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사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선부른 예측에 얽매어 불공정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제작태도는 신문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02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문〉

서울신문 2014년 1월 8일자 1면 「빛더미 LH, 눈뜨고 4600억 날렸다/판교 테크노밸리 개발 때 경기도에 땅 헐값 매각」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41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허덕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3년 판교 테크노밸리 택지개발 과정에서 경기도 등 지자체와 불평등한 협약서를 체결, 4600억원대의 이익을 날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방만경영 1순위라는 오명이 주인의식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LH는 2003년 판교 테크노밸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리한 협약서를 경기도와 체결, 45만 4964㎡의 땅을 경기도에 조성원가로 매각해 실질적으로 4649억원(감정가 기준)의 이익을 날렸다.

LH의 전신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는 2003년 9월 8일 성남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한다는 내용의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 협약서’를 체결했다.

문제는 LH를 비롯한 공동시행자들이 경기도가 벤처·업무단지를 LH로부터 조성원가에 이관받을 수 있도록 해당 단지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정한 것이다. 택지개발처리지침상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벤처기업 등이 들어설 경우 LH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택지를 조성원가로 이관해야 한다.

판교 테크노밸리 벤처·업무단지가 도시지원시설 용지로 지정되면서 협약서 제2조에 ‘경기도가 벤처·업무단지 전체를 공급받아 입주자를 선정하고 관리를

담당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2006년 4월 LH로부터 벤처·업무단지 택지 45만 4964㎡를 조성원가인 9269억원에 이관받는 특혜를 누렸다. 이후 경기도는 해당 택지를 4개 유형(초청연구, 일반연구, 연구지원, 주차장)으로 그룹화해 수의계약 및 경쟁입찰 방식을 거쳐 안랩 컨소시엄 등 벤처기업 등에 1조 3918억원에 매각했다. 이로써 경기도는 테크노밸리 택지개발사업에 한 푼도 들이지 않고 4649억원을 챙길 수 있었다.

경기도가 벤처기업 등에 택지를 매각하면서 판매 조건으로 내건 '건축물 보존등기 이후 10년간 전매 제한'도 명백하게 특혜란 지적이 나온다.

일정기간 제한을 두긴 했지만 결국 택지를 분양받은 업체들은 10년 뒤부터 개별적으로 토지거래에 나서게 됨으로써 큰 차익을 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LH와 경기도가 입주 기업의 토지 투기를 사실상 도운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해당 택지를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지정하지 않고 LH가 직접 입주기업에 매각했으면 더 큰 이익을 얻었겠지만, 협약서를 체결할 당시는 주택가격은 오르는데 택지가 없어 개발이 시급했던 시절이었다"면서 "이른 시간 내에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공동시행자들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108001015>〉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공기업 개혁, 이번엔 제대로 하자」라는 주제의 기획을 시작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한 판교 테크노밸리 택지개발사업을 문제가 있는 사업의 첫 번째 사례로 지목했다.

기사에 따르면 LH는 2006년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용지 45만 4964㎡를 조성원가인 9269억원에 경기도에 매각했다. 기사는 이와 관련, 『택지개발처리 지침상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벤처기업 등이 들어설 경우 LH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에 해당 택지를 조성원가로 이관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조성원가로 공급받은 땅을 벤처기업 등에 1조 3918억원에 되팔아 4649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기사는 이에 대해 모두에서 『주인의식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라고 적은 데 이어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리한 협약을 경기도와 체결』 『불평등한 협약서 체결 때문』 『4600억원대의 이익을 날린 것』 등으로 기술했다. 편집자는 더 나아가 「빚더미 LH, 눈뜨고 4600억 날렸다」고 제목을 달았다.

여기서 ‘눈뜨고’는 ‘기만당했다’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 따라서 제목대로라면 LH가 상대인 경기도의 ‘핍’에 빠져 4600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

기사는 그러나 ‘법령에 근거없는 불리한 협약’ ‘불평등한 협약’이라는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사는 LH공사가 택지개발처리지침에 따라 땅을 조성원가에 매각했다고 적었다. 그리고 해당 지침이 법령에 맞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LH와 경기도 등이 해당 협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3년은 국가 정책적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을 찾던 시기였고, 이러한 취지에서 해당 사업이 추진됐다. 게다가 LH는 지침에 따라 조성원가로 택지를 공급한 것으로 이득을 챙기지 않았을 뿐이지, 손실을 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선부른 예단에 근거해 불공정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제작태도는 신문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03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주 문〉

경향신문 2014년 1월 6일자 9면 「철도노조 영장 잇단 기각 ‘파업 불법성’ 깨져」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파업이 시작되자마자 불법으로 규정하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민주노총에 공권력 투입을 감행했다. 파업의 불법성이 속속 깨지면서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일단 잡아들이고 보자’는 식의 파업 와해 전략이었다는 논란도 커지게 됐다.

이번 철도파업으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씨 등 2명이 구속됐으나 지난달 31일 파업 종료 이후로는 천안기관차승무지부장 최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철도노조는 지난 4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부장과 지방본부 간부들이 먼저 경찰에 자진출두하고 김명환 위원장과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지방본부장, 중앙간부들도 코레일과의 교섭 상황을 봐서 출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최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철도노조와 민변 등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천안지원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파업이 이뤄져 사업 운영에 큰 혼란과 손해가 초래됐는지 등에 대해 엄밀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6년 철도파업에 대해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춰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사업 운영

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에 앞서 조합원 찬반 투표와 필수유지업무 인력 지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코레일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법인 분리안을 통과시키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예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코레일은 파업 첫날인 지난달 9일 곧바로 191명을 고소·고발했다. 코레일은 2009년 파업 때도 180명가량을 고소·고발했지만 구속자는 김기태 전 위원장뿐이었다. 김 전 위원장도 1·2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점을 들어 민변과 민주노총 법률원 등은 지난달 13일 코레일을 무고죄로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달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도 코레일의 고소·고발에 따른 체포 영장만이 유일한 법적 근거였다.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합법화된 민주노총 본부에 사상 처음 진입했던 것이다. 파업 종료 시점을 전후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도 형사처벌이 파업 와해 수단으로 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변호사)은 “과거 대법원 판례와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무죄 판결들이 있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음이 명백한 상황인데도 파업 중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파업이 끝나니까 기각됐다”면서 “검·경과 코레일, 정부가 상통해서 고소·고발과 공권력 투입으로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할 공권력이 정치적 요구에 휘둘려 노조를 탄압하는 데 앞장선 것은 경찰로서도 치욕이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무차별 체포와 영장 청구를 자제하고 원만하고 평화로운 해결과 교섭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052118235&code=94070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데 대한 해설 기사다.

기사는 『이번 철도파업으로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씨 등 2명이 구속됐으나 지난달 31일 파업 종료 이후로는 천안기관차승무지부장 최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는 점을 들어 『파업의 불법성이 속속 깨지면서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일단 잡아들이고 보자’는 식의 파업 와해 전략이었다는 논란도 커지게 됐다』고 했다. 기사 제목도 「철도노조 영장 잇단 기각 ‘파업 불법성’ 깨져」라고 단정적으로 달았다.

기사는 또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에 앞서 조합원 찬반 투표와 필수유지업무 인력 지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코레일 이사회에서 수서발 KTX 법인 분리안을 통과시키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예고한 바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통상 관련자들이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점 때문인 것이 일반적이다. 철도노조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고 대다수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의 불법성 여부는 사법절차를 거쳐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할 일이지, 구속영장 발부나 기각이 적법성이나 불법성을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위 기사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파업의 불법성이 깨졌다고 기사 본문과 제목에서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와 제목은 편견과 선입견을 앞세운 보도와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04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4년 1월 9일자 9면 「한국사 학계도 좌파 일색」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국사 교과서 논란의 뿌리는 ‘불균형’이다. 현재 진보성향, 소위 ‘좌파 학자’들이 학계의 다수를 점하고 ‘학문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은 좌우 성향을 떠나 한국사학자와 연구자 대부분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는 1980년대 민주화 물결이 만들어낸 파장의 일부다. 군사정권에 맞선 반작용으로 학계의 방향이 급격하게 한쪽으로 쏠렸던 것. ‘외눈박이 사학’이 시작된 근원이다.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나눌 공론의 장이 쉽게 펼쳐질 수 없다. 한때 진보이론가였던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조차 이를 두고 “밥그릇 싸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국내 한국사학자들의 90%는 좌파 헤게모니 속에 있다”고 말한다.

학계의 세력 싸움에 학문·사상적으로 피해를 본 건 학생들이다. 편향적 시각의 학자들이 만든 교과서로 반쪽자리 역사만 배워야 했던 것. 정경희 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최근 ‘한국사 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비봉출판사)를 통해 “민중사학자들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치밀한 준비를 했고 역사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전환되고, 국사에서 근현대사가 분리된 시점부터 집필진으로 참여해 세력을 키웠다”고 분석한다. 정 위원은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보면서 한국사학자로서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며 좌편향 실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1090107093001700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국사 교과서 논란과 관련, 보수-진보로 나뉜 역사학계의 현실을 조명하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사 교과서 논란의 뿌리는 ‘불균형’이며, 『현재 진보성향, 소위 ‘좌파 학자’들이 학계의 다수를 점하고 ‘학문 세력’으로 군림하고 있는 것은 좌우 성향을 떠나 한국사학자와 연구자 대부분이 인정하는 사실이다』라는 것이다.

기사는 이를 근거로 본문에서 한국사 학계 다수가 ‘좌파’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제목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좌파 일색」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에서도 언급했듯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각’과 ‘의견’ 차이가 역사학계를 ‘좌파’ ‘우파’로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좌파’ ‘우파’란 법적 용어도 아니며 그 개념은 시대와 장소, 사용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상대적이다. 또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사안에 따라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기사는 별다른 설명 없이 역사학계를 뭉뚱그려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졌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제목에도 ‘좌파’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좌파 학자’들이 학계의 다수를 점하고』있다거나 이를 『한국사학자와 연구자 대부분이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점도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국내 한국사학자들의 90%는 좌파 헤게모니 속에 있다”는 권희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으나 이는 한국사 논란의 한 당사자인 권 교수 개인의 의견일 뿐 이를 ‘한국사학자와 연구자 대부분이 인정하는’ 객관화된 사실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불확실한 추측을 근거로 편견과 선입견을 앞세워 작성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①(보

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06 신문윤리강령 위반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주문〉

영남일보 2014년 1월 3일자 1면 「독도예산 칼질 “어느 나라 국회의원가”/26억 증액안 예결위서 20억이나 삭감/경북도 방파제 건설 비용 없어 속태위/日은 독도관련 예산 증액 대조적 행보」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영남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일본 정부의 ‘독도야욕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독도수호’ 예산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외교부는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이 48억3천5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해 12월10일 외교부가 제출한 독도 영유권 공고화 예산 42억3천500만원에 26억원을 보태 68억3천500만원을 책정했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국회 예결위는 증액된 26억원 중 20억원을 삭감하고 6억원만 추가 예산에 반영했다. 지난해에도 외통위는 독도 예산을 20억원 증액했지만 예결위의 막판 처리 과정에서 증액이 성사되지 못했다.

경북도는 2012년 12월 독도 방파제 건설을 위해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했지만, 여전히 국비 예산이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경북도는 방파제 건설 예산으로 100억원을 2012년 12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지난해 말에도 재차 요구했으나 결국 제외됐다.

총사업비 4천74억원이 드는 독도 방파제 건설사업은 독도 입도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영토 주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경북도의 입장이다.

문화재청은 독도 전체가 문화재보호시설이어서 방파제를 건설할 경우 훼손이 우려된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는 대외적인 명분일 뿐 실제로는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겠다는 게 외교부와 국방부의 속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독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1억9천만엔(약 19억원) 증액한 10억엔(100억원)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해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병석 국회부의장(포항북)은 “독도 예산 삭감은 일본이나 동북아 정세에 비춰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산상황이 어려울수록 영토수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아쉬워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독도 방파제 건설은 정부의 입장 정리가 관건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영토관리대책단에서 과감한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40103.01001070744000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영남일보는 1면 톱으로 내보낸 위 기사에서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이 국회 예결위에서 20억 원 삭감된 데 초점을 맞춰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는 지난 해 12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외교부가 제출한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 42억3천500만 원에 26억 원을 보태 68억3천500만 원으로 책정해 예결위에 넘겼지만 예결위는 20억 원을 삭감한 48억3천500만 원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최종

안은 정부안보다 6억 원이 많다.

그런데 예결위는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을 우려한 듯 곧이어 내놓은 해명자료를 통해 “영유권 공고화 사업 예산은 정부안보다 6억 원만을 증액했지만 독도 입도지원센터 신규 설치 등 (다른 정부 부처의) 독도 관련 3개 사업에 추가로 160억 원을 반영했다”면서 “2014년 (정부 전체) 독도 예산은 (외교부 증액분 6억 원을 포함해) 정부안보다 166억 원이 대폭 증액됐다”고 밝힌 것으로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영남일보는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을 기사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2012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독도 방파제 건설 예산 100억 원이 전액 삭감된 사례까지 함께 묶어 『우리나라의 ‘독도수호’ 예산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도 「독도예산 칼질 “어느 나라 국회인가”」라고 자극적으로 달았다. “어느 나라 국회인가”라는 표현은 기사 본문에는 없다.

이 같은 기사와 제목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편승, 취재기자와 편집자의 자의적 시각과 판단에 맞춰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보도 기사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10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매일 발행인 장 덕 수

〈주문〉

중부매일 2014년 1월 3일자 3면 「“시장 나와라” 초유의 인사 항명/청주시 사무관, 한 시장에 면담요구 … 말리는 직원에 폭행도」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중부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청주시청 한 사무관이 인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에서 항의 소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청 소속 K 과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10시께 자신의 인사 결과와 관련해 한범덕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집무실 안에서 고성이가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속실 직원은 “동석자가 없어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장님이 K 과장에게 ‘나가’라는 말이 들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속실 관계자는 집무실에서 나온 K 과장이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집기를 훼손하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K 과장은 오후에도 비서실을 찾아 부속실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를 말리는 직원들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과 시의회 모 의원은 K 과장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경미한 부상을 입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시 감사관실은 K과장과 부속실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진상 조사에 조만간 나설 계획이다.

징계 수위는 심층 조사 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상 초유의 인사 불복 항명이라는 점에 미뤄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전무후무한 인사 항명에 K 과장의 그간 행보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K 과장은 이번 소동 이전에도 한 시장에게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인사 불만사항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장도 ‘폭언·폭행’ 진위 여부 파악을 위한 증언이 필요할 경우 진술에 나설 뜻을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0373>)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매일의 위 기사는 청주시청의 K과장이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K과장은 지난 해 12월 31일 오전 청주시장 집무실에서 고성 이 오가는 가운데 한범덕 시장을 면담하고 나와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이어 그 날 오후에 다시 비서실로 찾아와 부속실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말리는 직원들을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과 모 시의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기사는 전했다.

기사는 그러나 K과장이 잘못했다는 쪽 목격담들만 묶어 전했다는 뿐 K과장이 불만스러워 한 인사 내용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폭력적 행동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기사가 K과장의 신분을 익명으로 처리하기는 했지만, 위 기사 내용만 보더라도 청주시청 관계자, 그리고 관련자들의 주변 사람이라면 K과장이 누구인지를 쉽게 알아 챌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사자인 K과장으로서의 명예는 차치하더라도 위 기사가 보도한 것처럼 사안 자체가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명이나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클 법한데도 기사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기사는 특히 K과장의 행위를 『사상 초유의 인사 불복 항명』 『전무후무한 인사 항명』이라고 거창하게 의미를 부여했지만 왜 ‘사상 초유’이며 ‘전무후무’인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 편집자는 큰 제목을 「“시장 나와라” 초유의 인사 항명」이라고 달았지만 기사 본문에는 “시장 나와라”라는 표현은 없다.

따라서 취재기와 편집자는 객관적 사실 보도를 위한 확인 과정은 소홀히 한 채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기사와 제목을 과장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보도의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

(답변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11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준식**

〈주문〉

스포츠조선 2014년 1월 3일자 10·11면 「내우외환-후계 경쟁 ... ‘위기의 롯데」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 롯데그룹은 내우외환이다. CJ그룹과 효성그룹에 이어 대기업 사정의 다음 타깃이 롯데라는 얘기가 수개월전부터 나돈다. 여기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8)이 야심차게 추진한 해외사업은 부진하다. 또한 형인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59)과 신동빈 회장이 잇따라 계열사 지분 매입으로 경영 주도권을 두고 형제간 경쟁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자아낸다.

▶사정당국의 다음 타깃은 롯데?

롯데는 CJ그룹의 검찰 조사와 이재현 회장 구속 이후 효성과 함께 사정 대상 기업으로 줄기차게 거론됐다. 최근 정부당국의 롯데에 대한 압박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우선 국세청 세무조사가 연장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13일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를 80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시 롯데쇼핑에 대해 120일간 세무조사를 해왔던 국세청이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무려 80일을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 측은 “사업이 다양하고 조사할 자료가 많아 연장한 것일 뿐이다. 정기 세무조사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롯데쇼핑은 31개의 백화점과 100여개의 대형마트, 500개에 달하는 슈퍼마켓, 여기에 90개의 영화관까지 거느린 롯데그룹의 최대 계열사다. 롯데쇼핑은 그간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높은 판매수수료,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아온 상황.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던진 박근혜 정부와는 여러가지 안전에서 대립각이다. 여기에 지난 정부때 롯데가 잠실월드타워 사업 허가를 받는 등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도 부담으로 작용된다.

▶ 해외사업의 부진

신동빈 회장이 2011년 취임후 롯데그룹 산하 계열사들은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등에 앞다퉈 진출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실적을 내는 해외 사업장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통부문은 중국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롯데는 2008년 중국 유통업체인 인타이와 5대 5 지분 비율로 합작회사인 인타이롯데백화점을 설립했지만 최근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5년간 누적적자가 13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한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총 260억원의 적자를 보았다. 또한 중국, 베트남 등에 진출한 롯데마트는 8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롯데제과는 중국에서만 2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롯데칠성음료 역시 중국 법인 4곳에서 72억원의 손실을 냈다. 롯데케미칼은 말레이시아 타이탄케미칼을 인수한 후 173억원의 손해를 봤다. 이와 관련 롯데 관계자는 “중국을 제외한 베트남 등지에서는 비교적 매출이 좋은 편”이라며 “진출한 지 얼마되지 않은 곳이 많다보니 성공 여부는 좀 더 시간이 지난 후 가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신 회장이 해외 시장의 공격적 투자를 통해 밝힌 ‘2018년 아시아 톱10 글로벌 그룹’이라는 비전과 ‘매출액 200조원 달성’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형제간 경영권 경쟁?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91)의 아들들인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과 신동빈 한국롯데 회장이 차기 후계자 자리를 놓고 물밑 경쟁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제기

되고 있다.

롯데그룹의 장남인 신동주 부회장은 지난해 8월부터 매달 롯데제과 주식 600여주 정도를 꾸준히 사들여 현재 지분율이 3.65%까지 늘어났다.

신 부회장의 경우 지난 2003년 이후 한국의 롯데 계열사 주식을 사들인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최근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동생인 신동빈 회장과 의 경영권 경쟁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신 회장도 지난해 6월 말 롯데제과 주식 6500주를 사들이면서 현재 지분율을 5.34%까지 늘린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 9월 롯데손해보험 주식을 사들여 100만주를 확보했다. 신 회장이 이번 주식 매입 이전 갖고 있던 롯데손해보험 주식은 전무했다. 아울러 신 회장은 지난해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롯데칠성 등의 지분율도 늘렸다. 이들 형제는 롯데그룹의 최대 계열사인 롯데쇼핑의 지분 보유율이 13% 수준으로 엇비슷하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선 두 형제의 지분 매입 경쟁은 사실상 롯데쇼핑에 대한 지배력 강화 작업의 일환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롯데쇼핑·롯데제과·롯데칠성 등이 상호 연계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즉, 이들 형제가 롯데제과·롯데칠성 등의 지분을 매입하면 자연스럽게 롯데쇼핑에 대한 지분확보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두 형제의 지분 매입이 그룹 내부 주도권 경쟁이라 보기에 너무 소규모라는 지적도 있다. 롯데 관계자는 “신동주 부회장의 주식 매입은 개인적인 단순 투자일 뿐이고, 신동빈 회장은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지분율을 늘린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신 회장의 경우 지난 1월 미도파를 합병하면서 발생한 롯데제과, 롯데칠성과의 상호출자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매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는 내수 침체와 불확실한 해외 경제 상황으로 모두에게 쉽지 않았던 한해였다.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사적인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했지만 아쉬움이 남는 한해였다”며 “올해는 과감한 혁신과 현장중심 경영으로 기존사업의 내실화

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및 지역상권과 동반성장하려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은 물론, 임직원 개개인이 겸허한 마음과 열린 자세로 외부의 소리를 수용하는 유연성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401030100022190000985&servicedate=2014010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롯데그룹이 안팎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보도하는 내용이다. 기사에서 거론된 문제점은 대기업 사정의 다음 타깃이 롯데라는 얘기가 나돌며, 주요 계열사의 해외 사업이 부진하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그의 형인 신동주 일본롯데 부회장이 경영권 경쟁을 벌인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CJ와 효성에 이어 사정 대상 기업으로 줄기차게 거론되며,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 연장 등 압박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납품가 후려치기 등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아 박근혜 정부와 여러 가지 안전에서 대립각이라는 점도 거론하고 있다. 또한 신동빈 회장 취임 후 계열사들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등에 앞다퉈 진출했지만 제대로 된 실적을 내는 해외 사업장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기사는 이 두 사안을 뭉뚱그려 제목에 ‘내외의 환’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했거나 진행 중인 대기업은 롯데 계열사 외에도 여럿이다. 골목상권 침해 등의 사안이 거론된 곳도 롯데를 포함해 여럿이다. 따라서 롯데그룹이 ‘사정당국의 다음 타깃’이라고 보도하는 것은 막연한 추정일 뿐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해외사업 부진도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세계 경기로 국내 기업들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롯데그룹만을 지목해 『제대로 된 실적을 내는

해외 사업장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며 몇몇 계열사의 부진한 실적을 나열한 것은 편견과 선입견을 앞세워 기사를 작성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또, 기사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6월 롯데제과 주식 6,500주, 9월 롯데손해보험 100만주를 사들이고, 롯데케미칼, 롯데칠성 등의 지분율도 늘렸다. 반면 신동주 부회장은 지난해 8월 이후 매달 롯데제과 주식 600여주를 사들이게 전부다. 기사에서도 언급했듯 두 사람의 지분 매입을 그룹 내부 주도권 경쟁이라 보기엔 너무 소규모이다. 기사는 그밖에는 경영권 경쟁 가능성에 대해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추측이 나오고 있다』 『것이라는 분석이다』 등의 추측성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데도 기사는 롯데그룹이 사정 대상 기업으로 거론되고 해외사업이 부진해 어려움을 겪는 데다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부회장의 경영권 경쟁을 벌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제목을 「내외외환-후계 경쟁...‘위기의 롯데」라고 단정적으로 달았다.

위 기사와 제목은 주관적 의도나 편견에 따라 과장되고 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25 신문윤리강령 위반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주 문〉

東亞日報 2014년 2월 4일자 1면 「규제법안 716개 쏟아낸 19대 국회」·A3면 「“운전사 딸린 렌터카, 일반인은 못합니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東亞日報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면=규제법안 716개...〉= 『2010년 말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된 A사는 수요가 많은 중소형 아파트를 많이 포함시켜 분양을 하려 했다. 하지만 외부 건축사무소에만 설계를 맡겨야 하는 건축법에 발목이 잡혔다.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측은 큰 아파트를 많이 넣어야 각종 건축규제를 통과할 수 있다며 버텼다.

A사는 회사 안에 건축사를 17명이나 두고 있었지만 자기 회사 아파트를 설계할 수 없는 ‘비정상의 벽’에 부딪혔던 것이다. 2012년 말에 겨우 설계를 변경했지만 아직도 아파트 분양은 못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외국처럼 내부 건축사를 활용할 수 있으면 분양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규제가 3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아 경제성장을 가로막는데도 2012년 5월 출범한 19대 국회가 새로 양산한 규제의 건수는 완화된 규제 건수의 5배가 넘었다. 3일 문을 연 2월 임시국회에서 새누리당이 경제 살리기 법안 통과에 주력하기로 했지만 야당의 도움 없이는 규제의 총량을 줄이기도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가 3일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국경제인연합회, 건설협회에 의뢰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기업 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만 있는 불합리한 ‘한국형 규제’는 모두 34건이었다. 규제 개혁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이들 규제가 모두 한국에만 있는 ‘별난 규제’여서 개혁의 대상이라고 봤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형 규제 중 단말기 보조금 규제,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처럼 기업 현장에서 투자를 방해하는 ‘손톱 밑 가시형 규제’가 23건이었다. 수도권 규제나 금산분리 규제 등 나머지 11건의 규제는 여러 산업과 행정기관에 두루 걸쳐 있어 금방 없애기 힘든 ‘덩어리 규제’였다. 손톱 밑 가시와 덩어리 규제 중 상당수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줄줄이 영향을 주면서

경제의 엔진을 늦추는 부정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종 규제가 우후죽순처럼 퍼진 것은 국회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규제 양산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전경련에 의뢰해 경제 관련 5개 상임위원회에 1월 말까지 의원들이 발의한 19대 국회 경제 관련 법안 1264개를 △규제 강화 △규제 완화 △기업 지원 육성으로 분류해 보니 규제 강화 법안이 716개(56.6%)인 반면 완화 법안은 135개(10.7%)에 그쳤다. 의원들이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5.3개 발의할 때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법안은 1개만 발의한 결과다. 국회에서 스포츠카가 질주하는 속도로 규제를 만드는 반면 자전거가 굴러가는 속도로 규제를 없앤 셈이다.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경제가 국민소득 4만 달러 수준으로 발달음하려면 한국형 규제 중 꼭 필요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40204/60554889/19>>

〈A3면= “운전사 딸린...”〉=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 로비 입구에 번쩍번쩍하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다. 독일인 우즈니 씨가 전날 국내 렌터카 업체의 ‘운전자 알선 서비스’를 통해 신청한 차량이다.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운전사 박모 씨(56)는 우즈니 씨를 태우고 행선지인 서울 강남구 코엑스로 향했다.

대표적인 한국형 규제	유래: 한미FTA(2011년), 한미FTA(2011년)	외국의 경우
수도권 규제	수도권 내 환경 산·농성 제한	영국 프랑스 등 수도권 규제 폐지
건설업종 간척이 규제	건설사의 설계업 계약 규정	미국 일본 등 계약 제한 없음
금선관리 규제	산업자원의 은행 지원 소송 제한	싱가포르 홍콩 등 산업자원의 은행 소유 허용
자동차 대매사업자 운영지 않던 금지	외국인 또는 종업원을 제외한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영지 않던 금지	미국 독일 등 관련 규제 없음
기업집단 규제	자산의 5% 이상을 소유하는 대기업집단인 상용차사업자 등 4대기업 규제 적용 없음	미국은 관련 규제 없고 일본은 2002년 폐지
자동차 규제	자동차사업자 출자 제한, 부채비율 제한 등 규제 적용	미국 독일 등 자동차사 규제 없음
시외버스 선형비율 규제	자산 100억 원 이상 상형비율은 전체 자산의 25%를 시외버스로 재투자 함	미국 일본은 시외버스 비율을 기업 자체에 맡김
사람을 항공기 취객	사람을 항공기에 2% 취객세 부과	프랑스 홍콩 등 취객세 부과세
통신요금 인가제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업자는 요금 변동 시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 관련 규제 없음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대형마트 휴일 영업 제한	일본 등 관련 규제 폐지



외국인에게 인기인점 - 내국인에게만 그치지 않음
 렌터카와 함께 최근에는 최근에는 렌터카업체의 운전자 알선 서비스, 여행이나 고령자를 위한 노인 전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제 특례도 확인되는 추세이다. (연경사 기자 news@donga.com)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는 차량을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어 관광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하지만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한국에만 있는 ‘운전자 알선 금지 규제’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획재정부 등의 도움을 받아 취합한 34건의 ‘한국형’ 규제는 대체로 규제 입법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만들어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다.

• 반기업 정서의 산물

외국에는 없는데 한국에만 있는 한국형 규제의 면면을 살펴보면 규제에 정치적 논리가 덧씌워져 치유가 어려운 ‘규제괴물’로 전락한 사례가 적지 않다. 규제를 개선하려 해도 ‘반(反)기업 정서’를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는 일부 정치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점도 한국형 규제를 없애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수도권 규제가 대표적인 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수도권 내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다. 환경보호나 수도권의 지나친 팽창을 막기 위해 규제를 만든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규제가 만들어졌다.

그렇다 보니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면 지방경제가 위축될 것이라는 편견이 생겼다. 정부로서도 19개 법률과 58개 규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이 덩어리 규제를 손댈 엄두도 못 내게 됐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은 기업 투자가 저해된다는 이유로 1982년과 2003년에 각각 수도권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규제와 기업집단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도 국내에서는 규제가 언제 개선될지 예상하기 힘든 한국형 규제로 꼽힌다.

‘운전자 알선 금지’처럼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대립으로 개선이 물 건너간 경우도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규제를 없애려고 시도는 했지만 손님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택시 업계의 입김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귀띔했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 시간을 관리하는 ‘셋다운제’ 등은 실효성 없이 관련 산업의 발전만 옥죄는 한국형 규제로 지적됐다.

• 규제 늘어 투자 위축 ... “대못 뽑아야”

한국형 규제는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지난해 말 기준 1만5269건으로 2010년보다 2000건가량 늘었다. 규제가 늘면서 기업 활동이 둔화돼 2011년에 80%였던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지난해 75%대로 하락했다.

국내 기업의 투자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도 급감했다. 최근 10년간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액 평균치를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231억 달러인 반면 한국은 88억 달러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소 진통이 있더라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한국형 규제의 ‘대못’을 뽑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려면 규제 개선과 기업 수익성 회복, 고용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태운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내 경제를 혈관이라고 보면 한국형 규제는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혈전에 해당한다”며 “규제를 대신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한국형 규제를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대표적인 한국형 규제인 수도권 규제가 폐지되면 약 15조 원의 기업투자와 함께 1만35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신홍국 경제위기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심리가 지나친 규제로 한 번 더 꺾일 수 있다”며 “개선할 수 있는 규제부터 개선해 나간다면 기업 수익성 회복과 고용 활성화 등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40204/60554846/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은 위 두 기사에서 ‘심층 탐사기획’으로 규제법안의 문제점을 다뤘다. 국회가 규제 법안을 양산해 기업 활동과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내용이다.

1면 기사는 선진국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는 불합리한 ‘한국형 규제’는 34건에 이르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2012년 5월 출범한 19대 국회는 716개의 규제 법안을 쏟아냈다고 보도했다.

A3면 기사는 불합리한 ‘한국형 규제’를 분석하고, 대표적인 법안을 표로 소개했다. 이러한 규제로 기업 활동 둔화 및 투자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 위 기사들이 제시한 불합리한 ‘한국형 규제’의 정보 출처는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 전국경제인연합회, 건설협회』다. 이들 기관과 단체에 의뢰해 34건의 ‘한국형 규제’를 분류했기 때문이다. 또 19대 국회가 716개 규제법안을 양산했다는 내용도 전경련에 의뢰해 얻은 결과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경제단체다. 건설협회 역시 건설업체의 이해와 권익 보호를 위한 설립된 이익단체다. 때문에 이들 단체에 의뢰해 얻은 조사결과는 이들 단체의 입장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나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 또한 정부의 특정한 정책지향이 반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실 불합리한 ‘한국형 규제’는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르다. 기사에 인용된 수도권 규제의 경우 기사는 수도권 규제를 대표적인 ‘규제 괴물’로 다뤘지만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불가피한 규제라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다. 비수도권 지역의 자치단체 소속 연구소들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모든 규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해당사자, 평가자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 그럼에도 기사는 단정적으로 ‘한국형 규제’로 34건을 분류하고, 이를 ‘규제괴물’, ‘동맥경화의 혈전’, 뽑아야 할 ‘가시’ ‘대못’으로 표현하고, 이와 다른 견해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기사 제목 역시 1면의 경우 「규제법안 716개 쏟아낸 19대 국회」로 큰 제목을 뽑고, A3면은 「한국에만 있는 규제가시», 「반기업 정서의 산물」, 「규제 늘어 투자 위축 … “대못 뽑아야”」, 「“한국형 규제” 일자리 창출도 막아」 등 작은 제목을 단정적으로 달았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제작태도는 신문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27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4년 2월 10일자 3면 「호남지지율 安신당 ‘천장’ 찍었고 민주당 ‘바닥’ 졌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야권 표심의 바로미터인 호남 지역에서 ‘안철수 신당’에 밀렸던 민주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반등하고 있다. 반면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의 ‘새정치신당(가칭)’은 고점을 찍고 급락하는 모양새다.

1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라도 지역에서 새정치신당 지지율은 27%로, 민주당(34%)에 뒤처졌다. 한 달 전에 비해 새정치신당은 18%포인트 급락하고, 민주당은 3%포인트 오른 결과다.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을 앞선 것은 갤럽이 ‘안철수 신당’을 조사에 넣은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안 의원이 독자적 정치세력을 선언,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던 지난해 12월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13%로 최저점을 기록했다. 당시 안철수 신당은 이보다 3배로 높은 44%를 기록했다. 이후 1월 안철수 신당은 호남에서 45%

지지율을 보이며 최고점을 기록했다.

이러한 ‘역전’ 경향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 뉴스원이 전북지역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2월 민주당 30.2%, 안철수 신당 39.6%였지만, 다음 달인 1월 민주당 42%, 안철수 신당 30.1%로 나타났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2100107032328500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는 위 기사에서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은 고점을 찍고 급락하는 모양새』인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바닥’을 치고 반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한국갤럽과 뉴스원의 여론조사결과를 그 근거로 삼았다. 기사는 한국갤럽의 광주 전라지역 여론조사 결과 『(최근)광주·전라도 지역에서 새정치신당 지지율은 27%로, 민주당(34%)에 뒤처졌다. 한 달 전에 비해 새정치신당은 18%포인트 급락하고, 민주당은 3%포인트 오른 결과』라고 전했다.

편집자는 이에 「호남지지율 安신당 ‘천장’찍었고 민주 ‘바닥’ 쳤다」고 단정적인 제목을 달았다.

아침저녁으로 변하는 것이 여론이다. 때문에 오르내리는 여론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미리 예단하는 것은 근거 없이 여론결과를 예측하는 것으로 불공정 보도에 해당된다 하겠다.

또 위 기사는 인용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실시 시기와 표본 크기 등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사 자료를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28 신문윤리강령 위반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주문〉

내일신문 2014년 2월 11일자 3면 「새누리, 지방선거 ‘박심 논란’ 확산」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새누리당 내에서 지방선거 후보경선을 앞두고 ‘박심(박근혜 대통령 의중)’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대선 이후 잠잠해졌던 ‘친박-비박’ 계파갈등으로 옮겨 붙을 태세다.

진원지는 서울시장 경선이었지만 경기, 인천, 부산, 울산 등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박심’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론에선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박심 논란은 주류인 친박계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밀고 있다는 관측에서 출발했다.

친박계인 당 지도부가 걸으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중진급 거물을 투입하겠다면 실제론 ‘비주류 대선후보’를 낙마시키려 한다는 의혹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정몽준 의원은 경선 들러리로 전략할 수 있다. 그러자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친박의 김황식 전 국무총리 지원설을 비판하면서 정몽준 의원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이 친박-친이 갈등으로 비화된 셈이다.

실제 “정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면 경쟁력은 있겠지만, 당선된다면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박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서며 여권을 흔들 것”이란 게 친박계의 우려다.

지난 9일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의 불출마선언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친박계 4선 중진인 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울산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가 13일만에 이를 뒤집었다. 당내에선 부산·경남권 공천의 계파 안배를 통해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친박계 서병수 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정리’란 해석이 나온다.

또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인 친이계 김기현 정책위의장에게 울산시장 출마의 길을 열어주고, 차기 당지도부를 친박계로 구성하기 위한 포석이란 말도 나온다.

친이계 중진인 김 정책위의장이 출마를 선언한다면 남경필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도 압박할 수 있다. 원내대표 경선을 준비 중인 남 의원은 당지도부로부터 경기지사 출마를 권유받고 있다. 여권의 경기지사 후보 가운데 인지도가 가장 높아, 김문수 지사 불출마 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거론된다.

또 비박계의 유력 원내대표 후보들이 지방선거에 차출될 경우 5월 원내대표 경선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에 이어 친박계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진다. 친박독식 비판을 피하고, 당 지도부도 장악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란 얘기가.

지난 10일 서울시장에 도전한 이해훈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심 마케팅’을 공개 비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비박계에서는 ‘박심 마케팅’ 당사자로 인천시장에 도전장을 낸 이학재 의원과 부산의 서병수 의원,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등을 거론하고 있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96397)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새누리당 내에서 지방선거 후보경선을 앞두고 ‘박심(박근혜 대통령 의중)’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박심’ 논란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과 가능성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는 『청와대와 당 지도부는 ‘박심’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권에선 이미 기

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친박계인 당 지도부가 걸으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중진급 거물을 투입하겠다면서 실제로 ‘비주류 대선후보’를 낙마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친박계 4선의 정갑윤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불출마 선언의 배경에 대해선 『부산·경남권 공천의 계파 안배를 통해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친박계 서병수 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정리’』와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인 친이계 김기현 정책위의장에게 울산시장 출마의 길을 열어줘 차기 당지도부를 친박계로 구성하기 위한 포석』의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 『친이계 중진인 김 정책위의장이 출마를 선언한다면 남경필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도 압박』할 수 있고, 『비박계의 유력 원내대표 후보들이 지방선거에 차출될 경우 5월 원내대표 경선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에 이어 친박계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도했다. 『친박독식 비판을 피하고, 당 지도부도 장악할 수 있는 ‘다목적 카드’』라고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의 맥락은 ‘비주류 대선후보 낙마’와 ‘친이계 지방선거 차출’로 ‘친박 독식 당 지도부 장악’이 ‘박심’과 닿아 있다는 내용인 셈이다.

기사는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러한 의혹이나 가능성들은 근거가 없고, 선입견을 앞세운 추측성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33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주문〉

서울경제 2014년 1월 27일자 A16면 「길 잃은 정식품 … 뒤로 가는 두유시장」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해 국내 두유시장 규모가 3,800억 원으로 지난 2012년보다 7% 줄어들며 지난 200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 감소세로 돌아선 가운데 1위 기업인 정식품이 연구 개발·투자에 소홀해 두유시장 침체에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정식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지난 2010년 1.01%에서 20011년 0.9%, 2012년 0.8%로 매년 감소세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출시한 두유 신제품 수도 2012년 11종의 절반 수준인 6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 두유업계 관계자는 “두유 생산분야에서 경쟁업체들의 기술개발로 정식품의 기술경쟁력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라며 “두유 시장은 지난 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우유 대체품으로 반사이익을 얻어 급성장하면서 4,000억원을 넘어섰으나 정식품이 신성장동력 확보에 소홀해 정체되면서 불황 못지 않게 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식품은 지난 1973년 창립 이래 40년 이상 두유시장 1위를 지켜왔다. 지난해 국내 두유시장에서 정식품이 44%의 점유율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그 뒤를 삼육식품(22%), 남양유업(10%), 매일유업(8%) 등이 잇고 있다. 정식품은 지난 2011년 1,908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2010년보다 18% 급증했으나 같은 기간 연구개발비는 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매출이 2011년보다 10% 늘어난 2012년에는 연구개발비가 오히려 4% 뒷걸음질쳤다.

이러한 연구개발비 축소는 성과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식품은 지난 2012년부터 두유 음용층을 20~30대 젊은 층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아래 ‘커피



두유', '냉장두유' 등 신제품들을 출시했으나 젊은 층 고객들의 주요 음료 구매 채널인 편의점에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A편의점에서는 1970~80년대에 출시된 주력 제품인 베지밀A·B의 비중은 여전히 지난해 정식품 매출의 77%에 달해 기존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두유 제품은 우유·음료 등 다른 제품군에 비해 매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A편의점에서 유음료 매출이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전년대비 20.8%, 8.8%씩 증가한 반면 두유 매출은 2012년 6.8% 늘어났다가 지난해에는 5.2% 감소했다. B대형마트에서도 전체 음료매출에서 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1년 20.8%에서 지난해 18.1%로 낮아졌고 두유매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난 2011년 26.1%에서 지난 2012년 -6.3%, 지난해 -11.3%로 다른 음료군과 비교할때 매출 감소폭이 커지는 추세다.

또 다른 두유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정식품 대표를 맡고 있는 손현수 사장이 중앙연구소장 출신임에도 최근 수년 사이 변변한 히트 신제품이 없다는 사실은 정식품이 연구개발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40년 이상 ‘베지밀’ 브랜드 하나에만 의존해오면서 타성에 젖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401/e20140126165251120210.htm>>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국내 두유시장 규모가 9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1위 기업인 정식품이 연구개발과 투자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두유시장 규모는 3,800억원으로 지난 2012년 4,100억원 보다 7% 감소했다. 지난 2005년 이후 9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 시기 정식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매년 감소세를 이어왔다. 정식품은 지난해 시장점유율이 44%에 이를 정도로 지난 1973년 창립 이래 40년 이상 두유시장 1위를 지켜왔다.

기사는 두유업계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정식품이 신성장동력 확보에 소홀해 정체되면서 불황 못지않게 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편집자는 더 나아가 「길 잃은 정식품 … 뒤로 가는 두유시장」으로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다. 또 연간 두유시장 규모와 정식품의 연간실적 및 연구개발비를 담은 표를 만들었다.

기사와 제목, 표대로라면 지난해 두유시장 침체의 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중이 줄어든 정식품의 연구개발비다. 그러나 이러한 논증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 연결고리가 약하다. 정식품이 업계 1위의 업체라 하더라도 연구개발비 비중 축소가 업계 전체의 시장 규모 축소로 이어진다는 논리적 설명이 없다.

기사 스스로 『“두유 시장은 지난 2011년 구제역 사태 당시 우유 대체품으로 반사이익을 얻어 급성장하면서 4,000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두유시장은 대체음료와 주변 여건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이 기간 정식품의 연구개발비는 매출 대비 비중은 3년 연속 줄어들었지만 총액은 그렇지 않다. 표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2010년 16억3000만원에서 2011년 17억8000만원으로 늘었고, 2012년에 이르러 1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8000만원 줄었을 뿐이다. 이 기간 정식품의 매출액이 늘면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기사는 또 다른 두유업계 관계자 말을 인용해 『“지난 2011년부터 정식품 대표를 맡고 있는 손헌수 사장이 중앙연구소장 출신임에도 최근 수년 사이 변변한 히트 신제품이 없다는 사실은 정식품이 연구개발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증거”』고 지적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위 기사는 정식품의 이미지와 당사자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 「길 잃은 정식품 …」이라는 제목도 기사 내용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불확실한 추측을 근거로 편견과 선입견을 앞세워 작성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34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주문〉

서울경제 2014년 2월 4일자 17면 「위기의 한샘 … 성장 집착하다 고객 신뢰 추락」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지난해 10월 초 한샘의 직영 인터넷몰인 한샘몰에서 자녀 방에 설치할 책장을 구매한 직장인 이 모(39) 씨는 시공 기사가 돌아간 후 책장 틈새가 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한샘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제품을 교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처리 중’이라는 얘기만 듣고 있다. 이 씨는 “제품 설치 후 4개월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어 제품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2년전 한샘 가구대리점에서 혼수를 장만한 직장인 정 모(42) 씨는 이사할 때 대리점으로 연락하면 불박이장 재설치비용을 받지 않겠다는 대리점주의 말만 믿었다가 낭패를 봤다. 막상 이사하기 위해 대리점에 연락하니 한샘 고객센터로 떠넘긴 것. 고객센터에서 요구한 재설치 비용은 20만원. 배신감을 느낀 정 씨는 결국 2년 밖에 못 쓴 불박이장을 싼 값에 팔고 새 장을 사기로 했다. 정 씨는 “가구업계 1위라는 회사가 이렇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게 영업을 한다면 누가 믿고 브랜드 가구를 살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매출 1조 클럽 가입을 앞둔 가구업계 1위사 한샘이 외형 지상주의에

매물돼 소비자들을 외면하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명품 브랜드로 우뚝 서기는커녕 질 낮은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신뢰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

2008년 이후 6년 만에 매출이 두배 이상 늘어나며 빠르게 사세를 확장하고 있지만 물류, 시공, 애프터서비스(AS) 등 서비스 전 부문의 수준이 성장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면서 오히려 가파른 성장이 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최양하(사진) 회장의 성장 제일주의 리더십이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평가한다.

진통이 가장 큰 곳은 온라인 부문이다. 한샘의 온라인 매출은 2008년 173억 원에서 지난해 1,065억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며 국내 가구 업체 온라인 사업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 시공, AS 등 대고객 서비스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프라인 매장 판매의 경우 대부분 여러 개 제품을 한꺼번에 배송·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 부담이 덜하지만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단품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샘 수준의 매출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가구업계에서는 한샘을 반면교사로 삼아 온라인 부문을 공격적으로 확장하기 이전에 서비스 수준부터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한샘의 서비스 품질 저하 현상은 내부에서도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들의 불만이 비등하자 최 회장은 올 초 신년 하례회에서 “영업, AS, 광고, 마케팅 외에도 물류·시공 서비스 수준이 높지 않다면 명품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며 전 사원의 서비스 역량 제고를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최 회장은 올 초 신년하례회에서 물류, 배송, AS 수준을 당장 끌어올리지 않으면 회사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대노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워낙 빠른 성장세에 인력을 한꺼번에 늘리기도 버거워 마땅한 대안도 없는 것이 한샘의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가구 업체 관계자는 “가구 시장에서 브랜드 가구 비중은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사제가구와 브랜드 가구를 차별화하는 것이 품질과 서비스 그리고 고객만족”이라며 “가구업계 1위인 한샘부터 품질과 서비

스 수준을 끌어올려 브랜드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연말 글로벌 가구 공룡 이케아 진출로 브랜드 가구사들이 차별화에 고심하고 있는데 지금의 서비스 수준으로는 이케아의 공세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며 “최 회장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402/e20140203174854120250.htm>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올해 매출 1조 클럽 가입을 앞둔 가구업계 1위사 한샘이 외형 지상주의에 매몰돼 소비자들을 외면하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명품 브랜드로 우뚝 서기는커녕 질 낮은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신뢰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편집자는 이를 토대로 「위기의 한샘 … 성장 집착하다 고객 신뢰 추락」으로 큰 제목을 달았다. 또 불이 붙은 도화선과 폭탄을 이미지 그림으로 넣어 곧 폭발할 것 같은 위기 상황을 보여줬다.

이처럼 기사와 제목, 이미지는 ‘심각한 위기’상황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사실상 모두에 소개된 2건의 사례다. 기사는 한샘 직영의 한샘몰에서 책장을 구입한 30대와 한샘 가구대리점에서 혼수를 장만한 40대의 불만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기사는 2건의 불만 사례만 소개했을 뿐 소비자 불만의 빈도를 알 수 있는 배경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즉, 어느 정도의 불만이 쌓였는지 가늠할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구체적 근거 없이 『물류, 시공, AS 등 대고객 서비스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기사는 이밖에 『한샘의 서비스 품질 저하 현상은 내부에서도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하면서 그 사례로 임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한 최양하 회장의 신년하례회 발언을 꼽았다. 그러나 이 발언은 오히려 물류, 배송, AS 수준 제고를 위한 위기감 조성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발언만으로 품질저하가 골칫거리로 등장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로 삼기엔 부족하다.

기사는 한샘의 처한 위기의 원인으로 『업계에서는 최양하(사진) 회장의 성장 제일주의 리더십이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표현과 ‘소비자들의 불만 사례’ 등은 한샘의 명예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불확실한 추측을 근거로 편견과 선입견을 앞세워 작성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35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매일 발행인 장 덕 수

〈주 문〉

중부매일 2014년 1월 24일자 3면 「승례문 부실공사 조사 교수·美 쇠고기 반대 박상표 국장/사망경위 유사 ‘음모론’ 제기」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중부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최근 승례문 부실공사를 조사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된 충북대학교 A(56) 교수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주장한 시민단체 박상표 정책국장 사망사건과 관련, 사망원인을 둘러싼 의문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는 이들의 사망경위와 방식이 유사한 것은 물론 민감한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것에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시 중구 을지로 모 호텔 객실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에 나섰던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45) 정책국장이 숨져있는 것을 호텔 종업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박 국장의 몸에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며, 객실에서 동물용 마취제와 주사기가 발견됐다. 또한 박 국장의 수첩에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유족과 합의하에 박 국장의 부검을 실시하지 않았다”며 “유족들과 주변인물들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타살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오후 3시 15분께 충북대 농과대학 한 학과 재료실에서 승례문 부실공사를 조사하던 A교수가 목을 맨 채 숨져있는 것을 그의 아내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교수의 몸에는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입고 있던 옷에서 ‘너무 힘들다,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하다’라고 적힌 수첩이 발견됐다.

경찰조사에서 아내는 “남편과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학교에 찾아가 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A교수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유족들과, 인근 CCTV를 분석했으나 A교수 외에는 자료실에 들어간 사람은 전혀 없었으며 타살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두 인물이 비슷한 시기에 숨진 채 발견된 점과, 자신의 수첩에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라는 유서를 남긴 것이 유사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승례문 부실공사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연관됐던 인물이 연이어 숨지면서 사망원인 규명이 더욱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박상표 국장과 승례문 교수 모두 단기간에 자살로 처리했다는 것이 의문점이 남는다”라며 “두 사건의 의문점이 풀리기 위해선 정확한 사건규

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4449>>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매일은 위 기사에서 승례문 부실공사를 조사 중이던 충북대 A교수와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 연대’의 박상표 정책국장이 하루 사이에 잇따라 자살로 추정되는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박 국장은 지난 1월 19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을지로 모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동물용 마취제와 주사기가 발견됐으며 박 국장의 수첩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남겨져 있었다.

또 A교수는 이보다 하루 앞선 1월 18일 오후 3시 15분쯤 충북대 농과대학 재료실에서 목을 매 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입고 있던 옷에서는 ‘너무 힘들다.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다’라고 적힌 수첩이 발견됐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두 사건 모두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자살 사건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취재기자는 『두 인물이 비슷한 시기에 숨진 채 발견된 점과, 자신의 수첩에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라는 유서를 남긴 것이 유사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두 사람의 사망 배경에 무슨 연관이라도 있는 양 보도했다. 하지만 유족들도 자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된 상황에서 사망 시기가 비슷하고 수첩에 유서를 남겼다는 사실 만을 놓고 의혹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

기사는 도입부 두 번째 문장에서 『온라인상에서는 이들의 사망경위와 방식이 유사한 것은 물론 민감한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것에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지만 ‘음모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객관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 「승례문 부실공사 조사 교수·美 쇠고

기 반대 박상표 국장/사망경위 유사 ‘음모론’ 제기」라고 달았다. 제목만 놓고 본다면 두 사람의 사망에 불순한 외부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기사는 두 사람이 『민감한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데 대해 주목했지만 박 국장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 앞장선 것은 2008년으로 6년 전 일이다. 박 국장은 그 후에도 사회활동에 몰입하느라 동물병원 운영에 실패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다른 언론에 보도됐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겨냥한 자의적 판단에다 선부른 선입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자살 보도의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66 신문윤리강령 위반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문〉

朝鮮日報 2014년 2월 25일자 1면 「10년 內需불황, 일자리 600만개 날렸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략) 수출과 더불어 한국 경제의 양대(兩大) 버팀목인 내수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은 미국발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계 7위를 달성하며 24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지만, 내수 시장은 푹푹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

24일 본지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 GDP(국내총생산)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 2003년 55.7%이던 소비 비중은 지난해 50.6%로 추락했다. 소비 비중은 최근 10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줄면서 '내수 불황'이 확산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GDP 대비 소비 비중이 커진 미국·일본 등 선진국과 대비된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GDP 대비 소비 비중은 25위였다.

'내수 불황'은 일자리 창출에도 직격탄을 던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전무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소비 증가율(연평균 2.6%)이 GDP 증가율(연평균 3.6%)과 동일했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63만5000개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내수 시장 육성을 방치한 결과 10년간 63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다.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은 "1991년 우리나라 제조업의 일자리가 500만개였는데 2012년에는 410만개로 90만개가 사라졌다"며 "내수 서비스 산업에서 획기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지 못한다면 수출은 계속 늘어도 다음 세대(世代)가 국내에서 취직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25/2014022500210.html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 위 1면 머릿기사는 '한국경제, 이젠 內需다'라는 기획의 첫 번째 기사로 내수시장이 얼어붙어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최근 10년간 GDP(국내총생산)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보도했다. 2003년 55.7%이던 소비 비중이 2013년에 이르러 50.6%로 추락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또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전무의 말을 인용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소비 증가율(연평균 2.6%)이 GDP 증가율(연평균 3.6%)과 동일했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63만5000개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를 근거로 『내수 시장 육성을 방치한 결과 10년간 635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셈』이라고 기술하고, 편집자도 큰 제목을 「10년 內需불황, 일자리 600만개 날렸다」라고 달았다.

그러나 기사에서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가 언급한 일자리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소비 증가율(연평균 2.6%)이 GDP 증가율(연평균 3.6%)과 동일했다'는 가정을 전제로 추정한 결과다. 설사 그러한 가정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또 내수시장 육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만큼 수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내수시장 육성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여 일정한 규모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기왕에 있었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10년간 635만개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기사 내용과 제목은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도 않았고, 그나마 정확하지도 않은 추정치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잘못 작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제작태도는 신문기사의 객관성, 정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 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67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4년 3월 3일자 1면 「野신당, 사실상 '親盧배제' 추진」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합의에 따라 통합신당이 창당에 들어가면서 민주당 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 그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두 사람은 창당과정에서 사실상의 ‘친노 배제’를 겨냥한 신당 내 ‘최대 지분 확보’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일단은 친노그룹과 함께 가겠지만 창당과정에서 안 의원측과 김한길 대표 측이 연대해 조직과 정책 면에서 ‘친노 지분에 대한 최대한의 축소’ 쪽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판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민주당이라는 호랑이굴로 들어가는 안 의원이나 친노와 지속적으로 갈등관계를 형성해 온 김 대표측으로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일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새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안 의원 쪽에서 주도권을 잡아도 좋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며 “전날 안 의원 측에서 새정치 부각을 위한 가칭 새정치비전선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고 우리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안 의원 측에서) 정강정책에 새정치 정신이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제안을 했고, 충분히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의 측근 인사도 “새정치의 명분과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을 했다”며 “우리와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김·안 합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한 인사는 “안 의원이 그 동안 정치 혁신과 함께 합리적 보수와 성찰적 진보를 아우르는 세력화를 추진해 왔다”면서 “안 의원 측이 이 같은 노선과 정책을 신당의 정강정책에 반영하도록 요구했고, 김 대표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대표가 안 의원의 생각을 수용한다는 것은 김 대표 역시 민주당 내 강경파 노선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친노 등 민주당 내 강경파들은 진보노선의 정체성을 강조해 왔고, 안 의원 측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정체성을 훼손하는 방향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3030103012318600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창당에 들어간 통합신당과 민주당 내 최대 계파인 친노(친노무현)그룹과의 관계 설정을 다룬 1면 머릿기사다. 내용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창당과정에서 사실상 ‘친노 배제’를 겨냥해 신당 내 ‘최대 지분 확보’에 나서기로 의견을 나눴다는 것이다.

기사는 『두 사람은 창당과정에서 사실상의 ‘친노 배제’를 겨냥한 신당 내 ‘최대 지분 확보’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들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또 이를 두고 『창당 과정에서 안 의원측과 김한길 대표 측이 연대해 조직과 정책 면에서 ‘친노 지분에 대한 최대한의 축소’ 쪽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민주당이라는 호랑이굴로 들어가는 안 의원이나 친노와 지속적으로 갈등관계를 형성해 온 김 대표측으로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이라고 분석했다.

기사는 이어 『“김 대표가 안 의원의 생각을 수용한다는 것은 김 대표 역시 민주당 내 강경파 노선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김·안 합의 과정에 깊숙이 참여한 한 인사’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편집자는 더 나아가 「野신당, 사실상 ‘親盧배제’ 추진」으로 큰 제목을 뽑았다.

그러나 기사의 이러한 내용들은 ‘親盧배제’ 기술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 김, 안 두 사람이 이와 관련해 생각을 나눴다는 내용은 ‘알려졌다’는 것일 뿐이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기사의 풀이나 분석, 그리고 ‘김·안 합의 과정에 깊숙이 참여한 한 인사’의 말도 ‘親盧배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논리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불확실한 정보나 막연한 추측과 주관적인 편견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 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68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주문〉

서울신문 2014년 3월 13일자 6면 「“安心 잡아라”…박지원 극비면담, 일부의원 충성 맹세도」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통합 신당의 대표주자로 부상하면서 민주당 내 친(親)안철수 성향의 의원들이 꿈틀대고 있다. 중진 박지원 의원이 최근 안 의원을 만난 것은 물론 안 의원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의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안 의원에게 우호적이면서도 당이 달라 거리를 뒀던 이들의 물밑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힘의 균형추가 이동함에 따라 당내 권력 재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12일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안 의원을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면서 교감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도 이날 부친상을 당한 이종걸 의원을 조문하는 등 민주당 의원들과의 스킨십 강화에 들어갔다. 김한길계를 비롯해 주로 비(非)노무현계 의원들이

안 의원에게 호의적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계, 정동영계, 김근태계 의원들이다. 그동안 구심점을 찾지 못했거나 세력이 약해진 계파들이 새로운 ‘주군’을 찾아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당내 최대 계파였던 친노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도 곁들여진다.

특히 박지원 의원은 지난 10일 안 의원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 비밀리에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안 의원에게 전남지사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안 의원에게 비판적 입장을 보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일종의 ‘러브콜’이었고 함께 하자는 의미였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그동안 안풍 차단을 위해서는 전남지사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것과 비교된다. 최규성·인재근 등 김근태계인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의원들도 안 의원의 우호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병두·최재천·최원식·김관영 의원 등 김 대표 측근들도 안 의원과 친밀감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친노 성향의 의원들 중에서도 안 의원에게 호감을 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친안철수 세력이 당내 최대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권주자인 문재인 의원과 손학규 상임고문이 활로를 모색하고 있고 잠재적 대권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방선거 재선 여부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313006004>〉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의 위 기사는 안철수 의원이 창당을 앞둔 통합신당의 대표주자로 부상하면서 안 의원과 함께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물밑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안 의원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의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구심점을 찾지 못했거나 세력이 약해진 계파들이 새로운 ‘주군’을 찾아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민주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기사는 그러나 ‘충성맹세’를 한 의원에 대해 『알려졌다』고만 적었을 뿐, 이를

직접 확인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고, 달리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이를 정치면 머릿기사로 다루고 「“安心 잡아라” ... 박지원 극비면담, 일부의원 충성 맹세도」라고 큰 제목을 뽑았다. 안의원의 마음을 사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일부 의원은 충성맹세까지 한 것으로 단정하는 제목을 단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보도행태는 신문기사의 객관성과 정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 ③(미확인 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69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 영 권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문〉

파이낸셜뉴스 2014년 2월 25일자 26면 「민주노총 오늘 ‘명분 없는’ 정치 총파업」 기사와 제목, 매일경제 3월 10일자 1면 「전공의까지 가세한/명분없는 의사파업」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이 25일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전국 12개 도시에서 국민 파업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명분 없는 정치파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이날 파업을 퇴근시간대에 걸쳐 진행키로 해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국민파업 투쟁과 관련, 정부는 도로 점거 및 불법 거리행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국민파업은 박근혜정부를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며 동시에 엄중한 투쟁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대선의 총체적 관권부정선거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지만 박근혜정부는 진실을 왜곡·은폐 축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노동자·농민·빈민·상인·학생들이 국민파업위원회로 더 크게 뭉쳐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또 “경찰이 지난 15일 청계광장 집회를 국민들이 볼 수 없도록 집회 장소 주변에 대형버스로 차벽을 설치했으며 내일 집회에서도 차벽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벽’ 설치를 막아달라는 긴급구제 진정을 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번 총파업은 투쟁의 시작일 뿐이며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을 때까지, 이 땅의 노동자들이 참다운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파업대회는 서울, 울산, 부산, 광주 등 전국 12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열린다. 서울·수도권 국민파업대회는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며 오후 7시 국민 촛불대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화물연대·철도노조 등 1만5000여명의 조합원들은 앞서 오후 2시께부터 서울광장, 보신각 앞 등 서울 도심 13곳에서 사전 집회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국민파업 대회에 전국적으로 총 20여만명의 조합원과 시민이 참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은 25일 서울 도심 등 대규모 집회로 퇴근시간대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또 시위대의 도로 점거 및 불법 거리행진,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미신고 행진을 강행할 경우 세종대로·을지로·남대문로·종로 주변에는 장시간 교통통제가 예상된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집회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전국철도노조가 25일 민주노총의 국민파업과 연계해 파업을 벌이기로 한 데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25일 하루 동안 총파업을 선언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철도파업 대상자 징계 철회와 2013년 임금교섭을 파업 돌입 이유로 내세웠다. 노조는 사측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국 5개 권역별 야간 총회에 이어 25일 제1차 경고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불법파업으로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혼란을 가져온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철도노조가 또다시 파업을 계획하고 있는데다 이번 파업은 별도의 찬반투표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흠이 있는 불법 파업이라며 ‘엄정 대처 하겠다’는 입장이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225010262860013549&cDateYear=2014&cDateMonth=02&cDateDay=24

(매일경제)= 『대한의사협회가 10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휴진이라는 총파업에 들어간다. 의사들의 총파업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이다. 당시 파업의 도화선이 됐던 대형 병원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도 이번 집단휴진에 동참키로 해 일부 병원에서 진료 파행도 우려된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9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들이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는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사 파업에는 경남·충남 등 일부 지역 의사회가 적극적인 참가 의사를 밝혔다. 또 전국 약 230개 대형병원 가운데 50여 곳의 전공의들이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대형 병원의 전공의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대형 병원들은 일부 전공의들이 집단휴

진을 강행하더라도 중환자실과 응급실에는 필수 진료 인력이 정상적인 진료를 이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을 ‘명분없는 집단행동’으로 규정짓고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 결정은 정부와 의사협회가 현안에 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벌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불법 휴진 강행 시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비상진료체계 등을 통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김·경은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법 원칙이 똑바로 세워지도록 단호히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도 의사들이 휴진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 한 더 이상 대화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 의료정책관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는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었기 때문에 의사들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었다”며 “원격진료는 부분적이고 이미 정부와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보완해 나가기로 한 점이라서 총파업을 벌일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한다. 복지부 측은 “복지부 홈페이지와 24시간 콜센터(129), 심평원·건보공단 콜센터와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문을 닫지 않은 지역별 병원급 의료기관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 약국도 운영시간을 연장해 집단휴진에 대비할 계획이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371963>〉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의 기사는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민파업’에 나선다는 민주노총의 기자회견 내용과 정부의 대처 방침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모두에 『민주노총이 25일 박근혜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전국 12개 도시에서 국민 파업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명분 없는 정치파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편집자도 더 나아가 「민주노총 오늘 ‘명분 없는’ 정치 총

파업」으로 큰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기사는 본문에 『명분 없는 정치파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는 모두의 기술 내용을 뒷받침할 내용은 전혀 적지 않았다.

매일경제의 기사는 ‘의사파업’에 나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기자회견 내용과 정부의 대처 방침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기사는 모두에 『대한의사협회가 10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불모로 집단휴진이라는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보도했다.

편집자는 더 나아가 「전공의까지 가세한/명분없는 의사파업」으로 큰 제목을 달았다. 이번 파업이 명분이 없다는 것은 정부 측 주장이고 입장이다. 의협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명분으로 삼고 있다. 기사는 이러한 의협의 주장이 왜 명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명분없는 의사파업’은 정부의 주장을 여과없이 그대로 옮긴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제목이다. 기사는 또 『의협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불모로 잡았다』고 적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두 기사와 제목은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제작태도는 신문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해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75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4년 3월 12일자 13면 「청계천 ‘MB 흔적지우기’ 논란 재점화」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서울시 자문위원회인 청계천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청계천의 인공적 복원을 지적하며 수표교(사진)와 백운동천 물길 복원 등 역사성·생태성을 살려야 한다고 시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흔적지우기’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문화일보 2013년 4월 10일자 10면 참조)

위원회는 12일 청계천을 역사문화가 담긴 생태하천으로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 ‘청계천 역사성 및 자연생태성 회복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2년 3월 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2년여 동안의 활동 결과물로, 그간 청계천 주변지역 조사·모니터링과 설문조사, 시민열린회의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수표교를 원위치에 중건해 역사성을 재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표교는 조선 세종 때 지어진 돌다리로, 지난 1958년 청계천 복개 당시 장충단공원으로 옮겨졌다. 위원회는 또 청계천 물길을 곡선화하고 하천에 설치된 보를 철거해 자연스러운 경관을 조성할 것도 주문했다. 이는 현재 청계천 물길을 그대로 두되, 저수로 중간중간에 굴곡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생태적 구간을 조성해 하천 스스로 자연 물길을 만들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시는 청계천 끝에 설치된 2개의 보를 철거 중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청계천 용수공급에 드는 유지관리비 18억 원을 절감하기 위해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3호선 경복궁역의 유출지하수와 청계천 상류 지천 계곡수를 청계천 유지 용수로 활용할 것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청계천 상류 지천 중 백운동천과 삼청동천의 물길을 복원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이들 지류는 도로로 덮여 있는 상태다. 이밖에도 위원회는 모전교 등 교차로 14곳에 크로스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청계천 보도 폭을 넓혀 보행자의 편의를 보장할 것도 건의했다.

하지만 이처럼 생태·역사성 복원을 강조한 위원회의 건의가 청계천 복원을

주도한 이 전 대통령의 흔적지우기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시 내부 회의 및 검토 과정에서도 청계천 재공사를 통한 생태성·역사성 부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미 공사가 완료됐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데 생태·역사를 위한 복원을 위해 공사를 재추진하는 것은 비용문제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MB 흔적지우기라는 오해도 살 수 있어 부담”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청계천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내부 의견과 여론 수렴 등 과정을 거친 의견”이라며 “생태·역사 복원에 투입되는 예산 등 현실적인 부분을 서울시가 검토해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31201071343175006>〉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서울시 자문위원회인 청계천시민위원회가 발표한 ‘청계천 역사성 및 자연생태성 회복안’을 보도한 것이다.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은 수표교의 원위치 중건, 물길의 곡선화 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경관 조성, 용수 공급 체계 개선, 보행자 편의 보장 등 청계천의 역사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접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기사는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한편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흔적지우기’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생태·역사성 복원을 강조한 위원회의 건의가 청계천 복원을 주도한 이 전 대통령의 흔적지우기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는 이러한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나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게 아니냐는 의견 제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라는 기술 바로 뒤에 『실제 시 내부 회의 및 검토 과정에서도 청계천 재공사를 통한 생태성·역사성 부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는 기술이 있기는 하나 내부 회의 및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논란에 불을 지피는 게 아니냐는 의견 제기’의 근거로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의견조차 청계천시민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내놓음으로써 종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고서의 내용도 기존 청계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것일 뿐, 청계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자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흔적지우기’와 연관 지어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사 본문에는 또 청계천시민위원회의 건의에 대한 익명의 ‘시 관계자’의 의견이 소개되고 있으나 그 같은 발언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흔적지우기’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는 기술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논란의 ‘재연’ 가능성을 기술하고, 편집자는 한발 더 나아가 큰 제목에 ‘논란 재점화’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넣어 논란이 이미 벌어진 사실인 양 왜곡했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기자 및 편집자의 선입견이나 주관적 가치 판단에 따라 과장·왜곡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논란을 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극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도 있다. 이 같은 제작 태도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책임·독립」 ③(사회적 책임),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76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인일보 발행인 송 광 석

〈주문〉

경인일보 2014년 3월 4일자 5면 「“유정복 인천시장 출마 어불성설”/김포 지

역사회 거센 반발 … 오늘 입장 표명할 듯」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경인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유정복 장관이 이틀간 휴가를 내고 인천시장 출마를 위한 장고에 들어가자 지역에서는 “그동안 애정을 쏟았던 김포를 떠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애정을 쏟아부었던 김포에서는 4선후에 천천히 정치일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은데 자칫 현 정치상황으로 희생양이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은 분위기에서다.

당에서 인천시장 출마 요구가 들어오고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내일 저녁때쯤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는가하는 예정에 대해 한 새누리당 당직자는 “현 정치상황이 소용돌이에 가깝게 심각하게 돌아가다 보니 유 장관 개인의 입장을 내세울 처지가 아니다. 내일쯤 공식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 장관은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마다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당에서 요구하면 인천시장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시각이다.

어떻든 대통령의 의중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관건이지만 엇그제만 해도 “장관 스스로도 선거에 엄격한 중립을 지키라고 당부했다”며 인천시장 출마는 재고돼야 한다는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814930>)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인일보는 위 기사에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천시장 출마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유 장관의 지역구인 김포에서는 『“그동안 애정을 쏟았던 김포를 떠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3선 의원인 유 장관이 4선을 한 뒤 다른 일을 도모하더라도 늦지 않을 텐데 자칫 이번엔 낙선하면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반발이라는 것이다. 사실인 즉슨 ‘반발’이라기보다는 애정 어린 ‘만류’인 셈이다.

편집자는 이에 맞춰 「“유정복 인천시장 출마 어불성설”, 「김포 지역사회 거센 반발」이라고 큰 제목과 작은 제목을 달았다.

하지만 기사에는 “그동안 애정을 쏟았던 김포를 떠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발언의 주체 등 누가,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반발’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다. 기사 첫 문장에서 『지역에서는』이라고 실체가 모호하게 ‘반발’의 주체를 표기했을 뿐 그 이후에는 주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추가 설명도 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의 의견이나 자의적 판단을 객관적 사실인 양 과장·왜곡했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보도 기사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77 신문윤리강령 위반

全羅日報 발행인 유 춘 택

〈주문〉

全羅日報 2014년 2월 24일자 5면 「“부도덕” ... 행정 공백 어찌나/‘돌연 명퇴’ 장상진 전주 부시장 뒷말 무성/송 시장과 동일시기 사퇴/사상 초유 사태 비난 여론」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全羅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돌연 명퇴를 신청한 장상진 전주부시장을 놓고 공무원 사회 안팎에서 뒷말이 무성하게 일고 있다.

우선 사퇴시한을 불과 6일 앞두고 전주 시장에 출마하기 위해 명퇴를 신청한 것은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장 부시장의 명퇴소식이 전해지자 전주시 공무원들은 황당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오래전부터 송하진 전주시장이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고 오는 28일 퇴임식까지 정해진 가운데 권한대행을 수행해야 할 부시장이 명퇴를 신청한 것은 도의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장상진 부시장은 최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명퇴신청 배경에 대해 “오래전부터 새정치를 고민해 왔고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전주시장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송하진 전주시장의 퇴임식이 예고된 이후 장 부시장마저 명퇴를 신청한 것은 전주시 사상 초유의 사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산적한 전주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은 물론 행정공백으로 까지 이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장 부시장이 오래전부터 새정치 꿈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는 배경을 설명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장 부시장이 출마를 위해서는 늦어도 지난달 명퇴를 신청했어야 한다는 점에서다. 더구나 장 부시장이 전주시장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송 시장과 도지사 자리를 놓고 대결하는 측과 교감이 오갔다는 점도 도리상 어긋난다는 안팎의 중론이다.

전주시 공무원 김모씨는 “지난 2012년 7월 부시장에 취임한 장부시장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명퇴를 신청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최소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빨리 명퇴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명연 전주시의회의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장 부시장의 출마시점 발표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시장과 부시장이 동일 시기에 사퇴, 시정 공백이 우려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진로만 중시 여기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 공직자로서 시민과 시의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결정이며 송하진 전주시장이 지방선거에 출마, 시정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부시장직을 사직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全羅日報는 위 기사에서 장상진 전주시장이 6·4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데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송하진 전주시장이 퇴임하는 마당에 『권한대행을 수행해야 할 부시장이 명퇴를 신청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것이다. 기사는 명퇴를 신청하려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일찍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도덕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이 기사의 취지다.

편집자는 부도덕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부도적” … 행정공백 어찌나」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시한에 맞춰 중앙 및 지방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퇴가 잇따랐고, 이에 따른 행정공백은 전국적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 부시장이 출마를 위해 사퇴하는 것을 두고 부시장으로서 책임이 우선이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일찍 사퇴했어야 한다는 지적은 일견 설득력이 있지만, 현직 공무원 처지로서는 공직사퇴라는 마지노선 위에서 출마 여부를 막판까지 고민하는 것이 대체적인 현실임을 감안할 때 이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객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 기사는 장 부시장의 향후 선거운동과 그 결과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장 부시장으로서는 해명이나 반론을 제기할 여지가 클 법한데도 기사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사는 편견이나 주관적 의도에 따라 불공정하게 부풀려 작성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79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문〉

스포츠조선 2014년 3월 4일자 12·13면 「LG생활건강 치약에 방부제 ‘파라벤’ 이라니…」·「양치질 횟수와 소변 중 농도?」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LG생활건강…〉= 『업계 1위인 LG생활건강의 치약에 파라벤이 함유된 사실이 단독 확인됐다.

생활용품 부문에서 35%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LG생활건강은 다수의 히트제품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중 페리오 토탈7 오리지널 플러스, 착한마일드, 스트롱과 페리오46 화이트 나우민트, 페리오46 마일드민트, 페리오 가글쿨과 죽염 호랑이풀 치약, 죽염 청신향 허브 치약 9928 등 다수 치약 제품에 파라벤이 함유된 것.

더욱이 이 ‘파라벤 치약’ 리스트엔 어린이용 대상인 페리오 키즈 플러스(3단계)도 이름을 올려놓아 충격을 안겨준다.

이와 관련 LG생활건강은 “치약에 보존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내용물의 안정성 향상 및 사용중 외부 미생물의 오염으로부터 제품을 안전하게 지켜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페리오 등 다수 제품에 함유된 파라벤의 경우 식약처 고시(2013-228호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중 치약제의 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한 보존제의 사용량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메틸 파라벤의 경우에는 블루베리 등의 과일에서도 자연 추출되는 성분으로 국내 식품에서도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음이 확인된 원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LG생활건강의 태도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 다른 키즈라인인 ‘안심키즈플러스’를 내놓으면서는 ‘무파라벤’이란 점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파라벤이 들어있는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을 하는가 하면, 막상 파라벤 성분이 문제가 되자 “미국 FDA에서도 식품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인정해주는 원료”라고 항변하는 것은 리딩 브랜드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LG생활건강은 현 자사 치약에 들어간 파라벤 성분에 문제가 없다면 서, 페리오 키즈 플러스 제품 3단계에서도 관련 성분을 빼는 조치를 슬며시 취했다. “지난 2월에 키즈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파라벤 성분을 뺐다. 3단계(‘키티’, ‘아이언맨’)에만 파라벤이 함유되어 있었지만, 2월에 키즈 전제품을 리뉴얼하면서 유해한 성분은 아니지만 엄마들의 심리적 우려가 있어 모두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선 분노스러운 지점인데 현재 페리오 키즈 플러스의 경우 2월 이전 제조품도 같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라벤 성분 함유 사실을 전혀 모른채 리뉴얼된 제품 마케팅 내용만을 믿고 치약을 골라들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

한편 이같은 LG생활건강의 ‘때에 따라 말이 바뀌는 마케팅’은 효자 상품

인 한방삼푸에서도 드러난다. 고급 한방삼푸 라인인 ‘리엔’을 광고하면서 LG 생활건강 측은 ‘100% 국산 한방성분 함유, 천연유래 계면활성제 사용, 석유계 성분 무첨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덕에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일이소치아졸리논) 등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이슈가 됐던 화학 성분이 포함된 점은 특별히 성분 리스트를 따져보는 소비자가 아니라면 알기 힘들 지경. 한발 더 나아가 공업용 실리콘의 일종인 디메치콘을 버젓이 첨가해놓고도 ‘석유계 성분 무첨가’라고 내세운 점은 소비자들을 오도하기 쉽다는 지적이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 4조원을 돌파했다. 영업이익은 4964억 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 늘어난 수치다. 순이익은 무려 전년대비 17.2% 성장했다. 특히나 생활용품 부문은 매출 1조4424억원과 영업이익 1582억원을 거뒀다. 저년 대비 각각 13.9%, 9.7% 성장한 규모다.

지난 2005년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차석용 LG 생활건강 부회장은 거침없는 M&A 행보를 통해 사업 다각화를 일궈냈다. 평소 “기업의 성공은 창의력을 바탕으로 ‘차별화(Different)’된 ‘더 좋은(Better)’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과 ‘특별한(Special)’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물론 LG생활건강 측이 항변하듯 ‘파라벤 치약’이나 ‘디메치콘 삼푸’가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업계 1위에 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되며, 보다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 더욱이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성분 마케팅’을 하면서 정작 논란이 되는 성분이 들어간 사실은 뒤로 하는 식은 업계 리딩브랜드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과연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식의 마케팅이 고객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한 최선의 방침인지 되묻고 싶다.』

〈양치질...〉= 『치약의 파라벤 함유 여부는 관련업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인데, 특히 올해 초엔 파라벤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소변에서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슈가 된 바 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만 3~18세 어린이와 청소년 1021명을 대상으로 파라벤류 4종의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메틸과 에틸, 프로필, 부틸파라벤이 각각 97.5, 89.6, 90.5, 26.8% 나

왔다고 밝혔다. 이중 연령별로는 모든 물질이 3~6세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3~6세의 파라벤류 검출농도는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이 각각 110.4, 16.9, 9.8, 0.7 $\mu\text{g/g}$ -크레아티닌으로 전체 평균 64.2, 10.5, 4.7, 0.5 $\mu\text{g/g}$ -크레아티닌보다 훨씬 높았다. 당시 일각에선 하루 양치질 횟수가 많을수록 소변 중 파라벤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영유아를 둔 가정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파라벤이 들어있는 제품 이름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파라벤 치약'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졌던 것이 사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소비자고발」 문패를 단 위 기사에서 LG생활건강의 다수 치약 제품에 보존제 파라벤이 함유되어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

기사 내용을 종합하면 LG생활건강의 치약에 파라벤이 함유된 사실이 단독 확인됐으며 여기엔 어린이용 제품도 포함됐다는 것. 기사는 이와 관련, 『더욱이 이 ‘파라벤 치약’ 리스트엔 어린이용 대상인 페리오 키즈 플러스(3단계)도 이름을 올려놓아 충격을 안겨준다』고까지 적었다. LG생활건강은 또다른 어린이용 제품을 내놓으면서는 ‘무파라벤’임을 부각시켰고, 기존의 어린이용 제품인 페리오 키즈 플러스 3단계에서도 지난 2월 파라벤 성분을 뺐는데, 파라벤 성분이 안전하다면서도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이며 리딩 브랜드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것이다.

기사는 또 ‘파라벤 치약’ 리스트에 어린이용 대상인 페리오 키즈 플러스(3단계)도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이 왜 충격을 안겨주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아 독자로 하여금 어린이용 치약에 파라벤이 들어 있는 것은 ‘충격적으로 위험한 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있다.

기사는 LG생활건강측은 보존제는 내용물의 안정성 향상 등을 위해 사용하며, 제품에 첨가된 메틸 파라벤은 안전성이 확인된 원료라는 요지로 설명했다고 적고 있다.

이와 관련, 기사는 파라벤이 안전하다는 LG생활건강측의 주장을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반박하는 기술은 하지 않았다.

기사는 『이같은 LG생활건강의 태도는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분노스러운 지점』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비난’하고 ‘분노’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기사는 또 LG생활건강에 대해 『리딩 브랜드로서 무책임한 태도라는 지적』 『젊은 소비자들을 오도하기 쉽다는 지적』 등 기사 곳곳에서 ‘지적’이란 표현을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누가 그렇게 지적했는지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물론 기사 전체를 살펴볼 때 LG생활건강측이 파라벤이 안전하다면서도 파라벤을 뺀 일부 어린이용 제품을 내놓고, 어떤 제품은 ‘무파라벤’임을 부각시키면서 파라벤이 함유된 기 출시 제품을 그대로 유통시키고 있는 점이나, 고급 한방삼푸 라인인 ‘리엔’을 광고하면서 공업용 실리콘의 일종인 디메치콘이 들어 있는데도 ‘석유계 성분 무첨가’라고 주장하는 점은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신뢰를 떨어트릴 수 있는 행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국내외에서 파라벤의 사용량에 따른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나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 있지는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들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이들 제품이나 이러한 제품을 내놓는 LG생활건강측의 행태를 문제삼으면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제3자가 문제 제기하는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사 보도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기사 마지막의 『과연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식의 마케팅이 고객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한 최선의 방침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기술한 부분은 이 기사가 사실 보도 기사인지 의견 기사인지 혼동을 줄 수 있다.

아울러 기사 큰 제목 「LG생활건강 치약에 방부제 ‘파라벤’(↓)이라니…」나 기사에 함께 실린 그래픽에 들어 있는 이미지(▲)도 근거없이 마치 이 회사의 치약 제품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방부제가 들어 있어 놀랍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위 기사는 스포츠조선이 LG생활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예단을 가진 상태에서 작심하고 기획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또한 지면에 함께 게재된 「양치질 횟수와 소변 중 농도?」 제목의 별도 기사는 세계일보 2013년 12월 30일자 2면에 ‘단독’이라며 보도된 「어린이·청소년 10명 중 9명 소변서 방부제 파라벤 검출」 제목의 기사를 부분적으로 수정해 전제한 것인데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다.

스포츠조선의 위 기사는 신문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객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②(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제8조 「출판물의 전제와 인용」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80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주문〉

스포츠조선 2014년 3월 12일자 11면 「▶‘제2롯데월드’ 온갖 구설수-사고에도 개장 서둘러 .../신격호 총괄회장 → ‘30년 집착’에 발목 잡히나?」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조선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93)의 좌우명은 거화취실(去華就實. 걸치례를 삼가고 실질을 추구한다)이다. 이 신 회장 필생의 좌우명은 경영 전

반에 녹아있어, 롯데그룹엔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단 한 푼이라도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런데 유독 ‘예외사항’이 있어왔으니, 바로 신 회장의 30년 프로젝트인 제2롯데월드다. 서울 송파구 잠실에 지어지고 있는 제2롯데월드는 지상 123층, 555m 높이로 국내 최고층 건물이다. 땅 매입 시점인 지난 1988년부터 123층 빌딩 완공 시점인 2016년까지 치면 정확히 28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다. 그러나 요즘 업계에선 이 필생의 대역사가 역으로 신 총괄 회장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신격호 회장 무리수 왜?

“세계적 명물 만드는게 마지막 꿈” ... 주위 반대에도 강행

롯데는 땅값만 3조원이 훌쩍 넘는 땅을 수십년간 놀리면서 길고 긴 인허가 과정을 기다려왔다. 교통 환경 문제 등은 차치하고라도, 단순 산술적으로 따져 봐도 제2롯데월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는 장사가 아니다. 제2롯데월드의 건축 비용은 일반 건축물의 3~4배가 넘는다. 건축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를 바꾸다보니 시공비 또한 만만치 않게 늘어났다.

더욱이 상권까지 겹쳐서 내부경쟁을 피할 수가 없다. 제2 롯데월드엔 명품 샵, 극장 호텔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잠실의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롯데시네마, 롯데마트와 내부 경쟁을 벌여야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룹내 임원들도 “채산성이 낮다”고 신 총괄회장에게 수차례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무엇도 신 총괄회장의 집념을 꺾지 못했다. 이미 잘 알려진바, 신 총괄회장은 이 사업을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구상해왔다. 세계적인 수준의 호텔과 쇼핑몰 극장 등을 망라해 이 일대를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만들고자 했던 것. 신 총괄회장은 일본 경제주간지 ‘슈칸다이아몬드’와 인터뷰에서 “서울에 세계 최고 높이의 제2롯데월드를 짓는 것이 여생의 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제2롯데월드에 이렇게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 임종원 서울대 교수가 쓴 ‘롯데와 신격호’ 등 관련 내용을 살펴 보면, 생전에 세상에 자랑할 만한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는 신 총괄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지금의 롯데월드는 규모가 너무 작다. 더 이상 확장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제2롯데월드를 지어 지금의 롯데월드와 연결하여 서울의 명물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 신 총괄회장은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21세기 첨단 산업 중 하나가 관광인데, 한국에는 구경거리가 별로 없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시설을 조국에 남기려는 뜻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룹 이름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따온 신 총괄회장은 평소 ‘기업은 예술’이라고 강조해왔다. ‘모든 제품을 예술작품 만들 듯 최고로 만들어 시장을 압도해야 한다’는 신 총괄회장이 생애 마지막 역작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이 온갖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제2롯데월드타워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현 시점까지 끌고온 근본적인 동력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 잇단 사건사고 ... 바벨탑 프로젝트로 전락하나

시민들 안전 우려에 서울시가 직접 점검나서기로

제2롯데월드는 롯데그룹이 지난 1988년 사유지 8만7770㎡(2만6550평)를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등기부상에는 87년 12월 4일 취득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뒤 대통령이 네 명이나 바뀌는 동안이나 인허가가 나지 않아 애를 태워야 했다. 국방부가 서울공항(공군 성남기지)의 항공기 비행 안전문제로 허가를 반대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한 두개가 아니었다.

그러나 롯데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분위기를 역전시키는데 성공, 일사천리로 달리기 시작했다. 2008년 저층부 건축 허가를 받아낸 롯데는 민관 합동회의와 두 번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2009년 3월 사실상 정부 승인을 받아냈다. 그리고 2010년 송파구청으로부터 최종 건축 허가를 받아냈다.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비행안전검증용역 발주 초기부터 불공정 시비가 제기된 것과 더불어, 검증 용역기간이 15일에 불과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른바 ‘짜 맞추기식’ 용역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롯데그룹은 이명박 정부 시절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기업으로 손꼽혀왔다.

여기에 이러한 특혜 시비에 더해, 요 몇년 사이엔 초고층 부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6월에는 고층부 43층 자동상승발

판거푸집(ACS폼) 추락사고, 같은 해 10월에는 저층부 철제 파이프 추락사고가 일어났다. 설상가상, 지난 2월엔 47층 용접 보관함 화재사고 등이 잇따르면서,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의 불안감이 고조됐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는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최근 “제2롯데월드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대책은 기대 이하의 땀질식 미봉책”이라며 강하게 꼬집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의 분위기가 한층 강경해지면서 직접 안전점검에 나서겠다고 지난달 말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고, 제2롯데월드를 향한 우려의 시선 또한 높아지고 있다.

▶ 5월 저층부 개장 위한 채용박람회 논란

부친 뜻 받은 신동빈 회장도 ‘강공 행보’ … 우려 목소리

부친의 뜻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제2롯데월드의 준공 전 과정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측근인 김치현 전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부사장)을 지난 1월 롯데건설 신입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명한 배경엔 이러한 신 회장의 의중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른바 ‘돌쇠형’으로 통하는 김치현 사장은 과감한 추진력으로 유명하다. 한번 맡은 업무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으로 알려진 김 사장은 일찍이 ‘당면한 과제인 잠실 롯데월드타워의 성공적 완공을 위해 현장 중심 경영 및 윤리 경영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지난달 화재 이후엔 직접 임직원 비상 회의를 소집해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그 파장을 잠재우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이 가운데 그룹 차원에서 강공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롯데월드몰 시행사인 롯데물산은 서울시의 임시사용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 인력 채용 박람회를 강행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6~7일 서울 송파구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2014 송파와 함께 하는 롯데월드몰 채용박람회’엔 제2롯데월드 입점 예정기업 100여개사가 참가했다. 업체 측은 고졸·청년·중장년층 구직자 1056명을 뽑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롯데물산 측은 최근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상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 “롯데월드몰의 개장 시기는 미정이다. 서울시와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층부 조기 개장설’에 대

해 일정정도 선을 그었으나, 사실상 채용박람회를 강행한 것 자체가 5월 저층부 개장을 위한 본격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어느새 그룹 내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은 제2롯데월드. 온갖 논란과 우려를 털어내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구상대로 아름다운 역작이 될지, 욕망끝에서 좌절하게 되는 바벨탑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403120100111850006892&serviceDate=2014031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조선은 「롯데의 무리수 ... 제2롯데월드 우려스럽다」라는 1면 제목과 함께 게재한 위 기사에서 롯데그룹에서 건축 중인 제2롯데월드가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발목을 잡게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신 총괄회장이 세계적 명물을 만들겠다고 123층 555m 높이의 국내 최고층 빌딩인 제2롯데월드 건립에 집착해 왔으나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저층부 개장을 위해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강행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사는 『롯데그룹엔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지출은 단 한 푼이라도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런데 유독 ‘예외사항’이 있어왔으니, 바로 신 회장의 30년 프로젝트인 제2롯데월드다.』 『단순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제2롯데월드는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는 장사가 아니다』라며 제2롯데월드 건립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제2롯데월드가 왜 ‘필요하지 않은 지출’인지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미래 수입구조에 대한 언급은 없이 땅값이 3조원이 넘고 건축비가 일반 건축물의 3~4배가 넘는다는 점 등을 들어 『수지타산이 맞는 장사가 아니다』고 비판한 것도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기사는 또 『신 총괄회장이 생애 마지막 역작을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이 온갖 무리수에도 불구하고 제2롯데월드타워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현 시점까지

끌고온 근본적인 동력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온갖 무리수’의 내용이나 ‘업계의 시선’이 무엇인지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6~7일 열린 채용박람회를 두고도 『강행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기업이 인력 수요에 대응해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왜 ‘강행’이며 ‘논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사는 또 제2롯데월드가 『어느새 그룹내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은』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제2롯데월드 건립이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 이를 뒷받침할 근거 역시 본문에는 없다.

스포츠크조선은 기사에서 시중 제2롯데월드를 비판하면서도 롯데월드몰 개장 시기에 대한 롯데측 해명만 게재했을 뿐 제2롯데월드 건립 의도와 최근 사건사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롯데 관계자들의 해명이나 반론을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중간 제목으로 「온갖 구설수-사고에도 개장 서둘러」, 「주위 반대에도 강행」, 「바벨탑 프로젝트로 전략하나」와 같은 신랄한 표현을 달고, 1면의 큰 제목은 한걸음 더 나아가 「롯데의 무리수」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넣어 달았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주관적 의도나 편견에 따라 과장되고 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다. 이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④(답변의 기회),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81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 문〉

일간스포츠 2014년 3월 13일자 1면 「투어 망치는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회장」·10면 「돈에 눈먼 KLPGA, 투어 황폐화시킨다」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투어 망치는...〉=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회장 구자용)가 ‘투어 중계권’을 장삿속으로 판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KLPGA는 지난해 말 중계권 계약을 갱신하면서 기존 대행사 제도를 폐기하고 직접 중계권 협상에 나섰고, 금액을 많이 써낸 방송사의 손을 들어 줬다. 채널 가입자 수나 시청률 등의 수치는 고려 사항이 되지 못했다. 본지 취재 결과 구자용 회장은 방송 중계권 결정 당시 이사회에서 무기명투표 대신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분위 기상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돈에 눈먼...〉= 『“176억 원을 적립해 놓은 여자 골프협회가 이것도 모자라 직접 나서 방송 중계권 장사를 한 것은 나중에 독이 될 것이다.”(전 KLPGA 모 이사) “15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여자 골프대회를 치르는데 한쪽 골프 채널만 중계방송을 하면 마케팅 효과는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 협회만 먹고살겠다는 발상 때문에 스폰서만 멍이 든다.”(A사 마케팅 상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회장 구자용)가 선수와 대회 개최 후원사의 권익을 외면하고 방송 중계권을 ‘장삿속’으로 판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미 176억원(2012년말 기준)의 협회 발전 기금을 적립해 놓은 여자프로골프협회는 지난 2월 SBS골프로부터 연간 48억5000만원(선수 복지 기금 3억5000만

원 포함)씩 3년간 145억5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KLPGA 투어 중계권을 팔았다. KLPGA 투어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J골프와 SBS골프가 공동으로 중계를 해 왔다.

구자용 회장, 계약 갱신 거수로 결정

협회는 지난해말 중계권 계약을 갱신하면서 대행사를 두지 않고 직접 협상에 나섰고, 금액을 많이 써낸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 채널 가입자 수나 시청률 등의 수치는 고려 사항이 되지 못했다.

본지 취재 결과 구자용 회장은 방송 중계권 결정 당시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 대신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협회장이 ‘그냥 돈(중계권료) 많이 주는 업체한테 넘기면 되지 않나요. 거수로 결정하죠’라고 말했다. 분위기상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 다른 입장을 표명하면 협회 이익에 반하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전 KLPGA 모 이사는 “미국(LPGA 투어)과 일본(JLPGA 투어) 여자 골프협회는 중계권 협상 때 협회가 직접 나서지 않는다”며 “협회가 직접 나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대행사에게 주는 수수료도 아까워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단법인이 필요 이상으로 돈을 쌓아둘 필요가 없다. 2011년 협회 기금을 관리하는 대표이사 자리를 놓고 분열이 생겨 회장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올해 여자 골프대회를 개최하는 후원 회사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두 방송사의 공동 중계방송을 전제로 대회 개최를 결정했던 A사는 “홍보 효과가 50% 가까이 떨어지면 반쪽짜리 대회가 된다. 굳이 15억씩이나 들여 골프 대회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대회 포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협회, 선수 권익보다 재정 불리기 혈안”

불뚝은 방송 광고를 집행해야 하는 골프 용품 업체로도 튀었다. 해당 방송사가 거액의 중계권료를 벌충하기 위해 광고료를 큰 폭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K

사의 마케팅 담당자는 “시즌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광고 단가 인상 폭이 상당히 크다”며 “본격적인 시즌이 되면 고객의 중계권료를 회수하기 위해 광고 단가를 얼마나 올릴지 겁이 난다”고 말했다.

현역 투어 프로인 C선수의 아버지는 “선수 입장에선 당연히 두 방송사에서 중계하는 게 좋다. 한 곳에서만 중계를 하면 홍보 효과가 반감될 테고 골프 팬들의 관심도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회가 선수들의 권익은 생각하지 않고 재정만 불리기 위해 중계권 장사를 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한 KLPGA의 입장을 듣기 위해 강춘자 수석부회장과 통화를 시도했지만 오는 7월에 열리는 대회의 골프장 코스 답사를 위해 중국에 머물고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KLPGA 김남진 사무국장은 “이사회 표결을 거수로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구 회장께서는 이사들 가운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소신 있게 직접 입장을 밝히도록 한 것이다”고 말했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141163)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스포츠는 위 기사에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SBS골프와 단독으로 방송 중계권 계약을 한 것을 두고 협회가 중계권 장사를 하고 있다며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KLPGA 투어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J골프와 SBS골프가 공동 중계를 해 왔는데 지난해 말 협회가 중계권 계약을 갱신하면서 대행사를 두지 않고 직접 협상에 나섰고, 채널 가입자 수나 시청률 등은 고려치 않고 금액을 많이 써낸 방송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그러자 올해 대회를 개최하는 후원 회사와 선수, 용품업체들이 홍보 효과가 떨어지고 광고료가 크게 올랐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는 대회 중계 채널이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든 것에 대한 관계자들의 반발과 우려를 전하면서 제목을 「투어 망치는 KLPGA 회장」과 「돈에 눈먼 KLPGA, 투어 황폐화시킨다」로 단정적으로 달았다. 회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가 전한 “협회장이 ‘그냥 돈(중계권료) 많이 주는 업체한테 넘기면 되지 않나요. 거수로 결정하죠’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전부다. 회장이 투어를 망친다고 볼 객관적인 논리나 구체적인 근거는 없다. 중계권 고액 낙찰을 두고 돈에 눈이 멀었다고 비판하는 것도 객관적인 논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비록 대회 중계 채널이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들어서 홍보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투어가 망쳐진다고나 황폐화된다고 보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투어 망치는’ ‘황폐화시킨다’와 같은 표현은 기사 본문에도 없다.

이러한 제목은 객관적 근거 없이 편집자의 편견이나 선입견에 맞춰 작성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 2013-1103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문〉

헤럴드경제 2013년 4월 3일자 11면 「‘알바카페’ 청소년 성매매 창구 전략」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제가 원하는 것은 교복 그대로 입고 키스터치 가능했으면 하구요. 가능하시면 금액이랑 알려주세요”(아이디 ha****) “발바닥 꼼지락 거리는 영상과 실 생각 있으신가요?”(아이디 Ka****)』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인터넷 카페가 성매매 등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

헤럴드경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모집 카페가 성매매 탈선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지난 2일 국내 유명 포털에 개설돼 있는 청소년 알바 카페에 “16세 여학생입니다. 뭐든 다합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메시지를 기다렸다. 그 결과, 불과 수시간 만에 수십건에 이르는 성매매 요구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다.

글을 올린 지 30분 만인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먹골역 근처에 있다고 밝힌 남성은 30~40분 정도 시간을 내줄 수 있는지를 물은 뒤 선금을 내어 줄 테니 교복 차림으로 성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낮뜨거운 내용이 쪽지가 쇄도했다. “섹스나 애무 알바도 해?”, “키알(키스 알바), 섹알(섹스 알바) 알바해요?”, “비건(비건전 알바)인가요” 등의 쪽지들이 쉴 새 없이 날아왔다.

노골적으로 대화를 거는 사람도 있었다. 아이디 ze****를 사용하는 한 남성은 “s○(섹스 알바) 10만 보고 더 드려요, k○(키스 알바) 5만 이것도 보고 좋으시면 더 드리구요, 아 그렇다고 막 아저씨는 아니구여”라며 말을 걸기도 했다.

이 가운데 10여명은 ‘16세 소녀’에게 자신의 나이를 밝히면서 노골적인 성매매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청소년 알바 카페가 탈선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은어 등을 활용하면서 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청소년 알바 카페를 찾은 한 회원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은어를 통해 노골적인 성매매를 조장하는 글이 수백건 게시되고 있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이 게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유인수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성매매에 응한 사람도 처벌하는 것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이 같은 유인수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던 까닭에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의 청소년 성매매 알선 등으로 입건된 건수는 3158건, 입건자는 4457명에 달한다. 일부 전문가는 청소년 성매매의 해악을 감안해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유인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정보를 교환하는 인터넷 카페가 청소년 대상의 성매매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기사다. 성매매를 조장하는 글이 수백 건 게시되고 있다는 익명의 '회원'의 주장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가 제시한 사례는 취재기자가 16세 여학생으로 위장해 성매매까지도 가능한 것처럼 '미끼'를 달아 카페에 올린 글에 따른 메시지들과 쪽지들의 내용밖에 없다. 실제로 익명의 '회원'의 주장대로 성매매를 의심케 할 만한 내용의 회원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글의 실체를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고발 내용과 같은 글들이 게시되고 당사자들 간에 메시지나 쪽지가 오고 간다고 해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반드시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결국 이 기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인터넷 카페가 성매매 등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고발이나 '알바 카페'에 성매매 관련 글이 수백 건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기사는 특히 『“제가 원하는 것은 교복 그대로 입고 키스터치 가능했으면 하구요. 가능하시면 금액이랑 알려주세요”』 『“섹스나 애무 알바도 해?”』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메시지 내용도 여과 없이 상세하게 소개했다.

따라서 위 기사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모든 인터넷 카페가 성매매 등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처럼 기술해 사회면 머릿기사로까지 올리고, 「‘알바카페’ 청소년 성매매 창구 전략」이라는 제목을 단 것은 과장되고 선정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사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②(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04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연합뉴스 발행인 송 현 승
2.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4.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5. 한국일보 발행인 박 진 열

〈주문〉

연합뉴스 2013년 3월 22일 18:53 송고 「박시후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거짓’」 기사와 제목, 국민일보 3월 23일자 12면 「경찰, 박시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검토/거짓말탐지기 조사서 불리한 반응 나온 것으로 알려져」 기사와 제목, 매일경제 3월 23일자 A17면 「박시후씨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 기사와 제목, 서울신문 3월 23일자 7면 「박시후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검토/朴측 “전혀 확인된 사실 아냐”」 기사와 제목, 한국일보 3월 23일자 8면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박시후 거짓말”」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연합뉴스 및 위 4개 신문들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합뉴스)= 『연예인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텔런트 박시후(36)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박씨와 피해여성 A씨간에 진술이 엇갈리는 문항에 대해 ‘박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부경찰서 윤태봉 형사과장은 “결과를 확인해줄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며 정황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경찰은 당시 박씨와 함께 피소된 연예인 김모(24)씨와 피해여성 A씨에 대해서도 같은 문항을 놓고 거짓말탐지기조사를 했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포함, 지금까지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번 사건을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씨는 지난달 15일 술에 취한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박씨와 김씨는 A씨와 A씨의 선배, 박씨의 전 소속사 대표 황모씨가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함께 모의해 사건을 꾸렸다며 지난 4일 이들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황씨는 박씨와 A씨의 선배를 무고로 맞고소했다.』

(국민일보)=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6)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거짓말’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포함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정리한 뒤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시후는 지난달 14일 후배 K씨의 소개로 만난 연예인 지망생 A씨와 술을 마셨고 이후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A씨는 박씨, K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으며 다음날 깨 보니 박씨에게 성폭행당한 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씨는 성폭행이 아니었다고 맞서 지난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A씨와 함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박씨에게 불리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이번 결과는 절대적 증거가 아닌 참고자료”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담당할 서울 서부경찰서 윤태봉 형사과장은 “결과를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박씨와 A씨의 진실 공방은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 관련해 1, 2차 수사를 마친 상태여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씨의 변호인 측은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대해 알려진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변호인이 작성한 최종 의견서 및 핵심적인 추가 증거자료들을 오늘 서부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텔런트 박시후씨(36·사진)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피해여성 A씨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박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시후 측은 “경찰로부터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통보받은 바가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결과를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이달 안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 못하고 정황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박씨는 지난달 15일 술에 취한 여성 A씨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신문)=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텔런트 박시후(36)씨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거짓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박씨와 피해 여성 A씨 간에 진술이 엇갈리는 문항에 대해 ‘박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씨와 함께 피소된 연예인 김모(24)씨와 A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통보받았으나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서부서 윤태봉 형사과장은 “박씨를 비롯한 어느 누구의 결과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참고 자료로만 이용된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포함,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정리해 이번 사건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씨의 법률대리인 푸르메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것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는 것도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오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36)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13일 박씨를 상대로 진행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박씨와 피해 여성 간 진술이 엇갈리는 문항에서 ‘박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박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공개하기 어렵다”며 “하나의 참고자료”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후배 김모씨, 김씨의 소개로 만난 여성 A씨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들은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 씨가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기소의견을 달아 박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골자다.

위 매체들은 ‘알려졌다’, ‘전해졌다’ 식의 간접인용 방식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취재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 취재원을 알수가 없다. 게다가 위 기사들이 기술했듯이 담당 수사책임자도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에 대한 확인을 거부해 사실 여부조차 불분명하다.

위 기사들이 보도되기 직전인 지난 3월 22일 인터넷매체인 스포츠서울닷컴은 박 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거짓말 반응’이 나왔다고 단독으로 보도했다. 또 다른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스타는 비슷한 시간에 박 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역시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위 기사들에 일부 소개된 대로 『“거짓말탐지기 결과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것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는 것도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따라서 연합뉴스 및 위 신문들은 스포츠서울닷컴과 오마이스타의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알려졌다’, ‘전해졌다’는 식의 간접 인용 형식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위 매체들 중 한국일보를 제외한 다른 매체들은 제목에서 이러한 내용이 마치 확인된 사실인 양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했다.

경찰은 위 기사 내용이 처음으로 보도된 지 열흘 가량이 지난 4월 2일 박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들은 사실 확인은 소홀히 한 채 선부른 추측과 예단에 따라 작성됐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 같은 제작태도는 신문의 객관성

과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②(미확인 보도 명시 원칙), 제10조 「편집지침」 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94 신문윤리강령 위반
내일신문 발행인 장 명 국**

〈주문〉

내일신문 2013년 7월 26일자 21면 「박연차 가석방 불허, 청와대 지시?/가석방 심사위 결정에도 법무부장관 취소 결정」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가석방이 불허된 것이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22일 위원회를 열고 박 전 회장이 수감 태도가 양호해 모범수로 분류됐고 형기를 80% 이상 마친 점 등을 감안해 가석방 건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5일 이들의 가석방을 최종 불허했다.

통상적으로는 위원회가 투표로 가석방 의견을 결정하면 법무부장관이 이를 수용해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도층 인사와 고위 공직자에 대해 가석방 적용을 엄격히 하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해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참석한 한 민간위원은 “교정시설에서 가석방을 건의해 의견을 듣고 심사한 것과 법무부 장관의 최종 정치적 결정은 다를 수 있다”며 “당시 위원으로 참여한 법무부 간부들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석방 불허 과정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작

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심사위원회에는 법무부 차관(위원장)을 비롯해 검찰국장, 범죄예방 정책국장, 교정본부장 등 주요 간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심사 위원으로 참여하는 법무부 간부들이 장관의 제도개선과 불허 입장을 알았다면 위원회가 박 전 회장 등에 대해 가석방 의견을 낼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와 법무부 장관은 당초 가석방 의견에 동의했지만, 이후 청와대 보고 등에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 불허 입장이 전달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한 야당 의원측은 “황 장관의 입장 변화는 전 정권측 비리 인사에 대해 용서는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의견을 낸 박연차 전 태광 회장은 노무현 정부의 주요 경제계 인사로 분류된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시부터 의견과 비서를 담당해 온 MB의 ‘문고리 권력’으로 통한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um=722568&sid=E&tid=0>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내일신문은 위 기사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으며 현재 복역 중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가석방이 불허된 것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는 요지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박 전 회장이 형기의 80% 이상을 마친 점 등을 감안해 가석방 건의 의견을 내기로 했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불허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위 기사에 보도된 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도층 인사와 고위 공직자에 대해 가석방 적용을 엄격히 하는 제도의 변화가 필요해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그런데 이 같은 가석방 불허과정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 위 기사의 골자다.

위 기사처럼 ‘~알려졌다’ 등 간접인용 방식의 보도에서는 어떤 경위를 통해 그 같은 내용을 취재했다는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 이는 기사의 신뢰를 위한 보도윤리의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기사는 ‘청와대의 지시’나 ‘박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사 중간에 『심사위원회와 법무부 장관은 당초 가석방 의견에 동의했지만, 이후 청와대 보고 등에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 불허 입장이 전달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기사 표현 그대로 ‘관측’일 뿐 객관적 근거와는 거리가 있다.

또 기사 말미에 있는 『“황 장관의 입장 변화는 전 정권측 비리 인사에 대해 용서는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겠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도 추측과 추정일 뿐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②(미확인보도 명시 원칙)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31 신문윤리강령 위반
한국일보 발행인 고 낙 현**

〈주문〉

한국일보 2013년 8월 27일자 8면 「고립이 폐륜 부른다 … 다시 늘어나는 존속살해」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모(22)씨는 고교 동창 홍모(21)씨와 함께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 혼자 사는 아버지(55)를 찾아갔다. 이들 손에는 쇠파이프와 흉기가 들려 있었다. 얼마 후 이들은 콜택시를 불러 여행용 가방에 아버지 시신을 담아 사전에 물색한 전남 나주시의 한 저수지에 유기했다. 이씨는 아버지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소에 매물로 내놓았고 황금열쇠 등 귀금속도 처분했다. 홍씨에게는 아버지 카드로 1,000만원 상당의 국산 중고승용차를 사줬다.(중략)

부모를 살해하는 패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건은 지난 2008년 45건에서 2009년 58건, 2010년 66건, 2011년 6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50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이달 20일 서울 강동구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조모(23)씨가 붙잡히는 등 최근 다시 증가 추세다. 직업 없이 빈둥거리는 20~30대 빈대족이 존속 살해의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2008년부터 5년간 존속살해로 검거된 305명(공범포함) 중 20~40세는 157명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경제활동 주체가 돼야 할 연령대가 사실상 존속살해의 주범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존속살해범 가운데 111명은 경찰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했다. 가정불화(55명)와 현실불만(19명)도 주요 살해동기였다. 통계상으로 금품 등 이욕에 눈이 먼 존속살해범이 10명뿐이다.

하지만 이를 한꺼풀 벗겨보면,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단절된 무직자들이 가족과 오랜 갈등을 누적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가정폭력이나 금전적 문제 등을 둘러싼 불화와 갈등이 한 순간 범행으로 비화한다는 것이다. 수원시 이씨와 마찬가지로 서울 강동구 조씨도 무직이었고, 사채 빚 독촉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쳤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물질만능주의, 배금주의, 극단적 이기

주의가 만연하며 가족들이 돈 앞에서 원수가 되고 아이들은 자기 위주의 생각이 매우 강해졌다”며 “다른 사람과의 문제는 회피하면 되지만 가족은 오랜 시간 함께 있어야 해 감정 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분석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결국 경제적 궁핍과 이혼, 가정폭력 등 가정을 쪼개는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끌어 안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복지기능을 가정복원에 맞추는 정책 방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8/h2013082703375721950.htm>)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20대 아들이 친구와 짜고 홀로 사는 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을 대표 사례로 내세워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패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기획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존속 살해 사건은 지난 2008년 45건에서 2009년 58건, 2010년 66건, 2011년 6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50건으로 줄었고, 올해 발생 건수는 기사에는 없다.

그런데 취재기자는 『이달 20일 서울 강동구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조모(23)씨가 붙잡히는 등 최근 다시 증가 추세다』라고 썼고, 편집자도 「고립이 패륜 부른다 … 다시 늘어나는 존속살해」라고 큰 제목을 달았다. 기사에는 왜 ‘증가 추세’로 봤는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고, 객관적인 근거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선부른 선입견이나 기획 의도에 지나치게 얽매인 나머지 과장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②(미확인보도 명시 원칙), 제10조 「편집지침」 ③(미확인 사실 과대편집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선정보도의 금지

▲ 2013-1108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일보 발행인 김 병 수

<주문>

세계일보 2013년 3월 23일자 9면 「신종 마약 ... 성폭행에 자주 이용/윤씨 차량서 나온 '로라제팜'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세계일보는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사회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 (52)씨의 강원 원주 별장에서 나온 '로라제팜(사진)'은 어떤 약일까.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22일 “A씨가 지난해 11월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씨 별장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로라제팜 알약 1개를 찾아냈고, A씨의 머리카락에서는 로라제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윤씨가 약을 먹이고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A씨 진술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A씨의 머리카락에서 나온 로라제팜 성분은 6개월 전에 먹은 것으로 나타나 성폭행당했다는 시점(2011년 11월)과 일치하지 않아 성폭행 증거가 되지 못했다.

신경안정제인 로라제팜은 우울증 치료제로 강력한 진정·수면 효과를 낸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고 강한 중독성을 지녔다. 처방 없이 소지하거나 복용하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된다. 2009년 사망한 미국 팝가수 마이클 잭슨의 시신에서 로라제팜 찌꺼기가 나오면서 사망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로라제팜이 합성대마나 크라툼, 알프라졸람 등과 함께 신종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에게 몰래 먹인 뒤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성폭행하는 데 자주 쓰여 ‘강간 마약’으로 불린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윤씨가 성접대 과정에서 마약 등 불법 약물을 사용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경찰청이 출국금지한 윤씨 등 3명의 명단에는 윤씨에게 불법약물을 공급한 B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이날 성접대에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여성 3명 중 1명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고 나머지 2명에게서도 약물성분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약물검사를 의뢰한 바 없고, 서초서가 지난해 윤씨와 A씨 2명에 대해 검사를 의뢰한 건이 전부”라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는 위 기사를 통해 사회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모씨의 별장 등에서 나온 ‘로라제팜’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신경안정제인 ‘로라제팜’은 강력한 진정·수면 효과와 더불어 강한 중독성을 지녔다. 기사는 윤 씨가 자신에게 약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한 A씨의 머리카락에서도 ‘로라제팜’ 성분이 검출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세계일보는 이 같은 설명에 그치지 않고 『국내에서는 로라제팜이 합성대마나 크라툼, 알프라졸람 등과 함께 신종 마약으로 알려져 있다』고 불필요하게 다른 ‘신종 마약’들까지 실명으로 소개한 뒤 『여성에게 몰래 먹인 뒤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타 성폭행하는 데 자주 쓰여 ‘강간 마약’으로 불린다』는 내용까지 덧붙였다. 이는 대중의 불건전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유사 범죄를 충동질할 수 있다.

위 기사는 건전한 여론 형성에 앞장서야 할 책임 있는 언론의 범주를 벗어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

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09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남신문 발행인 정 총 건

<주문>

경남신문 2013년 4월 4일자 5면 「창원 유흥가 성매매업소 대거 적발」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경남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창원 상남동과 중앙동의 유사성매매 업소와 신·변종 음란물 상영 업소가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4월 초까지 3개월여간 불법 풍속업소 및 성매매 유해업소 등에 대한 단속을 벌여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 13명을 입건하고, 불법광고 전단을 부착·배포한 11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창원 상남동의 한 빌딩에 위치한 신변종 유사성매매업소인 속칭 '대팔방' 내부 전경/창원중부경찰서 제공/>

경찰은 지난 2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건물에 입주한 A안마시술소를 단속해 손님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명의상 사장 B(46) 씨와 실제 업주 C(42) 씨, 종업원 D(47·여) 씨 등 3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1회 안마에 9만 원을 받고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17만 원의 요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지난달 28일에는 상남동의 한 빌딩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손님도 적발됐다. 업주 E(38) 씨는 시간당 9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종업원이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상남동에서 신변중 유사성매매 업소인 속칭 ‘귀청소방’을 운영한 업주 F(32) 씨와 종업원 G(25·여) 씨 등 5명, 손님 H(36) 씨 등 2명 등 총 7명이 적발됐다. F 씨는 귀청소방을 운영하면서 4만 원을 받고 종업원을 시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남성전용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고객에게 1만 원을 받고 음란 동영상 상영한 휴게텔 업주 I(40) 씨가 입건됐다.

경찰은 이 외 상남동과 중앙동 일대 건물 주변과 주차차량 등에 불법광고 전단을 부착·배포한 혐의로 J(41) 씨 등 11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전단 살포를 사주한 업주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남신문의 위 기사는 창원 상남동과 중앙동의 유사성매매 업소와 신·변중 음란물 상영 업소가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는 내용이다.

위 기사는 경찰수사 결과를 전하면서 유사성행위의 방법과 가격 등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기술했다. 또한 경찰에서 제공한 속칭 ‘대딸방’의 내부 사진까지 게재했다.

위 기사와 사진은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독자들에게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에 관한 호기심을 부추기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

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1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상일보 발행인 배 명 철
2.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4. 大田日報 발행인 남 상 현
5. 서울신문 발행인 이 철 휘
6.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울
7.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8.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응
9. 한국일보 발행인 박 진 열

〈주문〉

경상일보 2013년 4월 17일자 1면 「보스턴서 폭탄테러 … 9·11 악몽 재연」 제목의 기사의 관련 사진, 경향신문 4월 17일자 5면 「피투성이 현장」 제목의 사진, 매일경제 4월 17일자 1면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 … 180명 사상」 제목의 사진, 大田日報 4월 17일자 1면 「아수라장」 제목의 사진, 서울신문 4월 17일자 1면 「유혈낭자 테러현장」 제목의 사진, 중부일보 4월 17일자 1면 「'보스턴 폭탄' … 美, 12년만에 또 테러 공포」 제목의 사진, 한겨레 4월 17일자 2면 「아빠의 완주 축하해주려는데 '꽁' … 8살 마틴 목숨 잃어」 제목의 기사의 관련 사진, 한국경제 4월 17일자 A2면 「“제발 도와주세요.”」 제목의 사진, 한국일보 4월 17일자 3면 「보스턴 폭탄테러」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사진은 지난 4월 15일(현지 시간)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 결승선 근처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의 참혹한 현장을 AP통신이 찍어 전송한 것이다.

위 신문들은 선혈이 낭자한 도로 위에 부상자들이 피범벅 상태로 쓰러져 있는 처참한 모습을 별다른 여과 조치 없이 적나라하게 보도했다.

‘유혈의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충격과 섬뜩함, 거부감 등을 감안해 컬러가 아닌 흑백사진으로 내보내거나 민감한 부분은 모자이크로 처리해 온 언론 관행에 비추어보면 위 신문들은 독자들의 호기심을 겨냥해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30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2013년 5월 1일자 11면 「마일리지·할인 ... ‘성매매 VIP마케팅’/단골고객 무료 서비스 등/운영난 업소 각종 이벤트」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쌓아 두신 마일리지, 오피스텔에서 현금처럼 사용하세요.” ‘우수 고객분들에게 코스프레(게임이나 만화 등장인물로 분장하는 것) 서비스 추가됩니다.’

30대 직장인 정모 씨는 최근 성매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A 사이트에 접속했다. VIP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업소 50% 할인 행사에 당첨된 사실을 확인했다. 친구들과 해당 사이트 아이디를 공유했던 정 씨는 자신과 친구들의 사이트 방문 및 게시글 작성으로 마일리지가 쌓여 자신도 모르는 새 VIP 회원이 된 것이었다. 주머니 사정 등으로 한동안 성매매업소에 발길을 끊었던 정 씨는 50% 할인이라는 말에 솔깃해 결국 해당 업소를 찾았다.

최근 불황 속에 운영난을 겪는 성매매업소들이 늘면서 관련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할인, 마일리지 적립 등 이색 마케팅을 펼치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 1일 경찰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주요 유흥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매달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혹은 계절성으로 행사를 개최하며 성매매업소 50% 할인 쿠폰과 무료이용권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스포츠토토처럼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회원에게 할인쿠폰을 주는 등 다양한 판촉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항공사나 카드사처럼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성매매업소도 등장했다. A인터넷 사이트는 지난 4월 마일리지가 2200점이 넘는 회원을 대상으로 500점을 5만 원으로 환산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2500점이 넘는 회원에게는 성매매여성들이 교복, 승무원복 등을 입고 서비스하는 코스프레 서비스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이나 성매매 관련 인터넷 사이트 대부분이 홍보성 행사를 진행하는 데다 단골 고객들을 대상으로 음성적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도 많아 적발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경기 불황 속에 운영난을 겪고 있는 성매매 업소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할인이나 마일리지 적립 등 마케팅 행사를 펼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기사다.

그러나 기사는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은 거의 없이 성매매 업소들의 마케팅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특히 『2500점이 넘는 회원에게는 성매매여성들이 교복, 승무원복 등을 입고 서비스하는 코스프레 서비스를 추가했다』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도 여과 없이 상세하게 소개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취재 의도와 경위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는 불건전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성 짙은 기사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59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연재소설 「徐遊記(서유기)」(글 이원호 그림 김재학) 2013년 4월 29일자 25면 123회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위 적시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자기야, 뭐해?”

비음 섞인 목소리가 울렸으므로 서동수가 시선을 들었다. 빈 술잔을 든 윤지

영이 눈을 흘겼다.

“자기 얼굴에 쓰여진 글자 읽어줘?”

“응, 그래.”

서동수는 갈라진 제 목소리를 듣고는 헛기침을 했다. 그러자 윤지영이 눈을 가늘게 뜨고 속삭이듯 말했다.

“널 갖고 싶어.”

“더 세계.”

“널 안고 키스할거야.”

“더, 더.”

“벗기고 넣을거야.”

“더 무지막지하게.”

“막 박을거야.”

마침내 서동수가 어깨를 늘어뜨리고는 의자에 등을 붙였다. 라운지 안은 떠들썩하다. 외국인들도 술에 취했다. 연휴여서 한국인 메이커들도 다 떠난 바람에 쓸쓸해졌을 것이다. 그때 윤지영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서동수 옆자리로 옮겨 앉았다. 라운지의 조명은 어두운 데다 아무도 창가의 구석진 이곳에 신경 쓰지 않는다. 윤지영이 거침없이 서동수의 지퍼 부분을 움켜쥐었다. 그러더니 숨을 들이켜면서 웃는다.

“셨네.”

“지영아.”

“으응?”

윤지영이 지퍼 부분을 조물락거리면서 콧소리로 대답했다. 머리를 든 윤지영이 서동수를 보았다. 어느덧 얼굴의 웃음기가 가셔졌고 두 눈이 반들거리고 있다.

“자기도 내 거 만져.”

윤지영이 다리를 벌려 보이면서 말했다. 이 콧소리, 그 순간 서동수가 어금니를 물었다. 치밀어오른 성욕으로 진저리가 쳐지려고 했기 때문이다. 진저리는 막은 대신 윤지영에게 잡힌 남성이 용틀임을 했다. 놀란 윤지영이 바지 위로

취었던 남성을 놓치고는 말했다.

“엄마, 깜짝이야.”

서동수의 손이 윤지영의 스커트를 밑에서 찢히고 팬티를 끌어내렸다. 거침 없다. 그러고는 손으로 골짜기를 덮었다.

“아, 자기야.”

중지가 쭈욱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윤지영이 탄성 같은 비명을 뿜는다. 동굴 안은 이미 흘러 넘치고 있다. 중지가 동굴을 휘젓자 윤지영이 다리를 오므리면서 말했다.

“자기, 이젠 방에 가자.”

서동수의 중지는 더 들어갔다.

“으응? 방에서 해.”

윤지영이 움켜쥔 남성을 흔들었다.

“술 가지고 방으로, 응?”

그때 서동수가 동굴 속의 손가락을 빼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화장실에 갔다올게.”』

2. 위 소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소설은 남녀가 호텔 라운지에서 은밀하게 상대방 성기를 애무하며 음란 행위를 하는 장면을 자극적인 대사와 표현을 섞어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이는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및 신문소설 심의기준(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60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문〉

일간스포츠 연재만화 「강안남자」(원작 이원호/글·그림 김성모) 2013년 4월 26·27일자 19면 SeasonVI<960> 제1화 여우사냥 8회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적시 만화는 직장 상사인 여성 임원이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과 유사 성행위를 하면서 보고를 받는 장면을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장면 중에는 “아...”라는 신음 소리와 더불어 〈주물 주물〉, 〈숙 숙〉 등 자극적인 의태·의성어들도 섞여 있다.

문제 부위는 보이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불건전한 상황 설정과 음란한 장면 묘사는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독자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충동을 일으키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62 신문윤리강령 위반
대구일보 발행인 이 태 열

〈주문〉

대구일보 2013년 5월 28일자 5면 「군대 안가려 멀미약 눈에 바르고 혈압 올리고 ...」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대구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009년 서울에 사는 김모(28)씨는 붙이는 멀미약을 눈에 바르면 동공이 커진다는 얘기를 들었다.

군대에 가기 싫어 입대를 계속 미뤘던 김씨는 이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바로 실행에 옮겼고 어렵잖게 동공운동장애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회사 동료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1~2급 현역 입영 대상이었던 김씨 등 9명은 2009~2010년 같은 수법으로 병원에서 받아 낸 동공운동장애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완전범죄를 꿈꾸던 이들의 바람은 병무청의 치밀한 조사에 물거품이 됐다.

지난해 4월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한 병무청이 병역 기피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6일 검찰은 이들 중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병역기피는 하루가 다르게 그 수법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어깨 탈골’은 기본이고 ‘치아 뽑기’, ‘혈압 올리기’에다 ‘환자 바꿔치기’까지 다양한 병역기피 수법이 등장하고 있다.

또 병역기피 분위기를 부추기는 인터넷 사이트도 부쩍 늘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기피 관련 인터넷 사이트 수가 최근 5년간 58배나 급증했다. 2008년에 22개이던 병역기피 사이트가 지난해 1천266개가 된 것.

이들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병역회피 수법이 총망라돼 있다.

몇 개월간 목직한 아령으로 어깨 내려치기, 손으로 의자 앞부분을 잡고 앉아 뒤로 젖히기 등의 어깨탈골 수법은 물론 신체검사 전 며칠간 잠을 자지 않거나 검사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 배와 팔에 힘을 주고 혈압을 올리는 수법 등이 있다.

또 커피가루 등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팔약근에 힘을 쥐 혈압을 높이는 방법

도 있다. 몸무게를 늘이거나 문신을 하는 방법은 이미 유행이 한참 지났다.

진화된 병역기피 수법도 병무청의 치밀한 수사에 결국 덜미를 잡히고 있다.

병역을 피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행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고, 신체를 손상하는 등의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병무청에 병역기피 수사권이 부여됐다. 부당한 수법으로 병역면제를 받더라도 공소시효 7년이 지나기 전에 대부분을 적발하고 있다”며 “병역기피가 밝혀지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일보는 위 기사를 통해 ‘병역회피 백태’를 보도했다.

기사는 병역기피 수법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고, 이를 부추기는 인터넷 사이트 수도 최근 5년간 58배나 급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현역입영 대상인 20대가 ‘붙이는 멀미약을 눈에 발라’ 병원에서 동공운동장애 진단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기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몇 개월간 목직한 아령으로 어깨 내려치기, 손으로 의자 앞부분을 잡고 앉아 뒤로 젖히기 등의 어깨탈골 수법은 물론 신체검사 전 며칠간 잠을 자지 않거나 검사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 배와 팔에 힘을 주고 혈압을 올리는 수법』 등이 있고, 『커피가루 등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팔약근에 힘을 쥐 혈압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하는 등 병역기피 수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이밖에 병역기피 관련 인터넷 사이트가 지난해 기준으로 1천266개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내용은 대중의 불건전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유사 범죄를 충동질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건전한 여론 형성에 앞장서야 할 책임 있는 언론 보도의 범주를 벗어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70 신문윤리강령 위반
대구일보 발행인 이 태 열**

〈주문〉

대구일보 2013년 6월 4일자 6면 「미셸위 누드사진」 해프닝」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대구일보는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미셸위 누드 사진』이 메신저와 인터넷 등에서 화제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미셸위 누드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20여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프로골퍼 미셸위(23) 선수와 닮은 한 여성이 알몸을 드러낸 채 다양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은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급속도로 퍼져 나갔다.

이 사진이 메신저와 인터넷 등에 게재되자 ‘미셸위가 아닌 이유’, ‘미셸위 누드 사진의 진위’라는 제목 등으로 일부 누리꾼들은 미셸위가 아님을 알리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사진 속 주인공이 미셸위가 맞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미셸위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미셸위 누드 사진’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대단하다’, ‘얼굴은 조금 닮았지만 딱 봐도 미셸위 선수가 아니다’, ‘일단 외모만 봐도 미셸위보다 키가 10cm 이상은 작아보인다’, ‘미셸위가 뭐가 아쉽다고 누드를?’,

‘합성을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작성자는 안면인식장애를 갖고 계신가’, ‘골프를 친 몸매가 아니다’, ‘ㅋㅋ기력지만 봐도 판사람인 게 티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일보의 위 기사는 ‘미셸 위 누드사진’이 메신저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고, 진위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는 내용이다. 기사의 전체 흐름상 누드 사진의 주인공은 프로골퍼 미셸 위가 아니다. 기사는 이 사진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이 미셸 위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하면서 이들이 제시한 근거를 상세히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기사는 사진 속 주인공이 미셸 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지는 않았다.



편집자는 위 기사의 큰 제목을 「‘미셸 위 누드사진’ 해프닝」으로 달았다. 이 제목만으론 누드 사진의 주인공이 미셸 위가 아니라는 점이 불명확하고, 오히려 미셸 위가 누드사진을 찍은 것으로 오해를 하게 할 수 있다. 또 작은 제목도 「진위논란 … 누리꾼 “닮은 사람”」이라고 달아 미셸 위일 가능성을 열어뒀다.

편집자는 또 미셸 위 선수를 닮은 여성의 누드 사진을 함께 실었다. 신문에 게재한 사진은 얼굴은 그대로 두고, 알몸의 주요 신체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것이다. 때문에 이 사진 역시 미셸 위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위 기사는 이처럼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오히려 미셸 위일 가능성을 열어둔 채 작성됐다. 이는 부정확한 보도로 개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위 기사 제목 역시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비록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누드사진’은 대중의 불건전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건전한 여론 형성에 앞장서야 할 책임 있는 언론의 범주를 벗어난 선정적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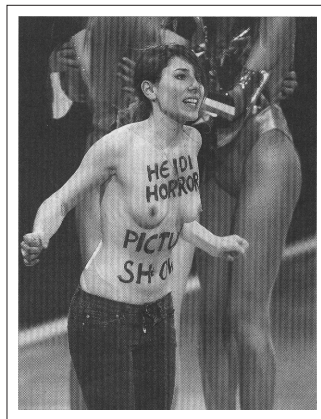
▲ 2013-1171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문〉

헤럴드경제 2013년 6월 3일자 23면 「여권 신장하라 ... 나체 시위」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사진은 우크라이나 여성 인권단체인 피멘(FEMEN)의 한 여성 활동가가 지난 5월 30일 독일 남부 만하임에서 열린 모델 캐스팅 프로그램 생방송 현장에 난입해 상의를 벗은 채 반라 상태로 시위를 하는 모습을 AFP통신이 찍어 전송한 것이다. 여성의 반라 또는 전라 사진의 무분별한 게재는 신문의 품위를 해

치고 성적 충동을 자극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은 모자이크로 처리해 온 보도 관행에 비추어볼 때 헤럴드경제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겨냥해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72 신문윤리강령 위반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울

〈주문〉

중부일보 2013년 6월 13일자 5면 「성남시의원, 공개석상서 “새누리 X할 놈들”」 제목의 기사의 삽화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중부일보는 다음과 같이 기사와 관련 삽화를 게재하였다.

『○…2011년 주민센터 직원에게 폭언을 해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성남 시의회서 또 다시 이와 유사한 막말 사건이 발생해 성남시의원의 자질이 도마 위에 올라.

12일 새누리당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50분께 분당구청장이 주관한 분당구 시의원과의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 성남시의회 민주당합당 김모 의원이 참석 의원들에게 막말과 추태 등을 부렸다는 것.

이날 김 의원은 ‘새누리당 X할 놈들, X까지마, X말’ 등 욕설과 막말 그리고 수차례 기물을 던지려 하는 행동으로 공식석상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새누리당협의회는 김 의원에게 공개석상에서의 진심어린 사과와 당직 박탈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후략)』

2. 위 삽화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의 위 기사는 성남시의회의 민주당 모 의원이 분당구 시의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막말과 추태를 부렸다는 내용이다. 중부 일보는 또 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를 게재했다. 삽화는 이번 사건으로 해당 성남시议원의 자질이 도마 위에 올랐다는 기사 내용을 토대로 도마 위에 시의원을 세우고, 머리 위에 칼을 들이대는 내용으로 그려졌다. 삽화 속에는 몸집보다 큰 칼이 서서히 내려오고 시의원은 도마 위에서 잔뜩 움츠려있는 모습이 있다. 칼과 도마의 상징성으로 끔찍한 상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또 이번 사건은 그 내용상 해당 시의회와 공직사회에 알려졌을 것이다. 익명의 이 시의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 경우 위 삽화는 해당 시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1조 「명예와 신용 존중」 ②(저속한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92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연재소설 「徐遊記(서유기)」(글 이원호 그림 김재학) 2013년 5월 22일자 26면 139회, 6월 17일자 156회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위 적시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9회)= 『뜨겁다, 지친 호흡을 뱉으면서 서동수는 문득 비린 정액 냄새를 맡는다. 금방 잡힌 문어처럼 화란은 온몸을 밀착시킨 채 비명을 질러대고 있다. 다 잊었다. 머릿속은 텅 빈 채로 꿈틀거렸으며 그때마다 번져오는 자극, 쾌락을 맞아 비명이 나온다. 둘의 몸은 땀으로 젖었다. 벌써 몇 번 절정에 올랐는지 화란은 말할 것도 없고 서동수도 세지 않았다. 그저 끈질기게, 참고, 또 참으면서 화란과 엉겨 있다. 방 안은 습한 열기로 가득 찼다. 화란은 아직 서툴다. 말과는 달리 몸은 굳어졌고 수동적이다. 그러나 지금은 수줍음이 다 사라졌다. 이제 또 다시 화란은 절정으로 오르고 있다. 벌써 한 시간이 지난 것이다. 두 다리를 추켜올렸던 화란이 서동수의 하반신을 빈틈없이 감으면서 또 폭발했다. 이번에는 더 길다. 숨이 끊어진 것처럼 똑 멈췄다가 내뿜었는데 울음소리가 섞여 있다. 격렬한 절정이다. 그 순간 서동수도 참았던 대포를 터뜨렸고 화란이 맞았다. 포탄의 폭발을 느낀 화란의 절정이 더 길어졌다. 이윽고 둘의 호흡이 가라앉기 시작한 것은 10분쯤이나 지난 후였다. 그때까지 둘은 서로의 몸을 어루만졌고 땀에 젖은 머리칼을 젖혀 두었으며 시선만 마주치면 키스를 했다. 아직도 합쳐진 몸을 확인한 듯이 허리를 흔들어 보기도 했으며 수줍음을 되찾은 화란이 눈을 흘기기도 했다.

“사랑해요.”

문득 화란이 말했으므로 위에 엮드린 서동수가 시선을 주었다. 눈과의 거리는 10센티미터도 안 된다. 화란이 서동수의 등을 손바닥으로 쓸면서 말을 잇는다.

“행복해요.”

서동수는 대답 대신 화란의 입술에 키스했다. 화란이 두 팔로 서동수의 목을 감으면서 입을 열어 혀를 내밀어 주었다. 다시 하반신이 꿈틀거리다 아직 합쳐져 있던 서동수의 몸이 다시 딱딱해졌다. 그러자 놀란 화란이 입을 떼고는 서동수를 보았다. 두 눈이 크게 떠졌다.

“보스, 이제 그만.”

그러나 서동수는 다시 입을 막았고 화란의 두 다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하 반신을 감는다. 탁상시계가 오전 4시를 가리키고 있다. 입술이 잠깐 떼어졌을 때 화란이 거친 숨을 뱉으며 말했다. 서동수를 보았지만 눈동자의 초점은 멀다.

“사랑해요.”

다시 방 안에 비명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서로의 몸놀림에 익숙한 터라 둘은 빈틈없이 움직인다. 뜨겁다. 뜨겁고 긴 밤이다. 서동수는 머리를 숙여 화란에게 입을 맞췄다. 비명을 질러대던 화란이 온몸으로 영키며 입을 받는다. 서동수의 온몸은 활기가 충전되고 있다. 마치 화란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것 같다. 이윽고 둘의 몸이 떨어졌을 때는 또다시 30분쯤이 지난 후였다.『후략』

(156회)= 『전략』 방으로 들어선 서동수가 문을 닫는 오정미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았다.

“아유, 서두르긴.”

했지만 몸을 돌린 오정미가 두 팔로 서동수의 목을 감아 안고 얼굴을 내밀었다. 빈 틈 없이 붙어선 서동수가 오정미의 입술을 빨았다. 곧 오정미의 입술이 열리면서 뜨거운 숨결과 함께 말랑한 혀가 빠져 나왔다. 서동수는 갈증 난 것처럼 오정미의 혀를 빨아 삼킨다. 뜨거운 뱀 같은 혀가 서동수의 입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오정미는 씻고 가운 차림이었는데 어느덧 허리띠가 풀어져서 젓가슴이 드러났다. 서동수의 손이 가운을 찢히고는 젓가슴을 움켜쥐었고 오정미는 서둘러 서동수의 혀대를 푼다. 선 채고 바지와 팬티가 흘러 떨어지자 서동수는 오정미의 몸을 번쩍 안아들었다. 서너 걸음을 걸어 침대로 가는 동안에도 둘의 입은 떼어지지 않는다. 침대 위로 오정미를 던진 서동수가 가운을 찢히자 알몸이 드러났다. 오정미는 가운만 걸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오정미가 혈떡이며 말했다.

“자기야 그냥 해!”

이미 머리 끝까지 열이 오른 서동수가 몸위에 오르자 오정미는 남성을 잡아 제 동굴 위에 붙였다. 그러나 넣지는 않는다.

“세계!”

두 팔을 뻗어 서동수의 어깨를 움켜쥔 오정미가 무릎을 세우면서 발바닥으

로 침대를 짚는다. 이제 자세가 갖춰졌다. 서동수를 향한 오정미의 두 눈동자가 번들거리고 있다. 그러나 이미 초점은 멀다. 반쯤 벌린 입에서 가쁜 숨소리가 흘러나왔고 얼굴을 상기되었다. 오정미의 그런 모습을 흘린 듯이 내려다보던 서동수가 숨을 들이켜더니 거칠게 돌진했다.

“아악.”

와락 턱을 치켜든 오정미의 입에서 굵은 신음이 뱉어졌다. 그 순간 서동수도 머리 끝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으면서 어금니를 물었다. 오정미의 동굴은 이미 뜨거운 용암으로 넘쳐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탄력이 강하고 좁다. 끝까지 들어갔던 서동수의 몸이 천천히 빠져나올 때 다시 오정미의 신음이 터져 나왔다. 이번은 더 높고 길다.

“아아아아.”

오정미의 두 다리가 서동수의 하반신을 감았다가 풀려졌다.

“아이구, 나 죽어.”

오정미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부르짖는다.

“자기야, 나 어떡해.”

서동수는 오정미의 입술을 입으로 막는다. 그러자 오정미가 혀를 내밀었다가 다시 비명 같은 신음을 뱉었다. 방안은 이제 뜨겁고 비린 열기로 가득 찼다. 반쯤 열린 베란다 창문으로부터 바람이 밀려왔다. 그렇다. 대륙의 훈풍이다.』

2. 위 소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소설은 남녀가 정사를 나누는 장면을 자극적이고 음란한 표현과 대사를 섞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이는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19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연합뉴스 발행인 송 현 승
2.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3. 경기일보 발행인 임 창 열
4.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5.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6. 중부일보 발행인 임 재 울

〈주문〉

연합뉴스 2013년 7월 10일 11:36 송고 「성폭행하려다 살해·시신훼손 ‘엽기 범행’ 10대 검거」 제목의 기사, 문화일보 7월 10일자 13면 「性폭행하려다 살해, 시신 엽기훼손한 10대」 제목의 기사, 경기일보 7월 11일자 6면 「10대가 맨정신에 … 여성 살해 후 시신 훼손·장롱에 보관」 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7월 11일자 A12면 「‘10대 오원춘’ … 소녀 성폭행후 토막살인 “호러영화 흥내”」 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7월 11일자 A25면 「용인서 ‘제2오원춘’… 범인은 10대」 제목의 기사, 중부일보 7월 11일자 1면 「10대여 살해 후 16시간 시신훼손/용인 ‘제2의 오원춘’ 고작 19세」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상기 5개 신문, 통신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력하려다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집 장롱에 보관한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0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심모(19·무직·교 중퇴)군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심군은 지난 8일 오후 9시께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A(17·여)양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죽인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군은 모텔 화장실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시신을 무참히 훼손했다. 시신을 옮기기 쉽게 하려고 살점을 잔혹하게 도려낸 뒤 변기에 버렸다.

엽기적인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심군은 살을 도려낸 후 20여 개로 추린 뼈를 김장용 비닐봉투에 담아 다음 날인 9일 오후 2시 7분께 모텔을 빠져 나왔다. 이후 택시를 타고 용인 집으로 귀가했다.(후략)』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7/10/0200000000AKR20130710043451061.HTML?from=search>>

(문화일보)= 『(전략) 심 군은 모텔 화장실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뼈를 29등 분한 뒤 살점과 내장 등은 변기에 버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뼈는 비닐봉투에 담아 다음 날 오후 2시 7분쯤 모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도 없는 심 군이 술에 취하지도 않은 맨정신으로 이 같은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경찰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후략)』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71001071343051001>>

(경기일보)= 『(전략)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살해 후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로 모텔 화장실에서 약 10시간에 걸쳐 A양의 시신을 무참히 훼손했다. 시신을 쉽게 옮기기 위해서였다.

S씨는 살점을 도려내 화장실 변기에 버렸으며 20여개로 추린 뼈를 김장용 비닐봉투에 담았다. 피가 묻은 옷가지와 수건 등을 모두 가방에 넣고 화장실을 깔끔히 청소했다.

더욱이 S씨는 공업용 커터칼로 시신을 훼손하다 부러지자 9일 새벽 1시37분께 인근 편의점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추가로 구입했다.(후략)』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90653>>

(東亞日報)= 『이때부터 그는 김 양의 시신을 훼손했다. 시신을 육조로 옮긴 뒤 공업용 커터칼로 토막을 내려다 여의치 않자 살점을 도려내기 시작했다. 사

용하던 칼이 부러지자 9일 오전 1시 반경 모텔 인근의 편의점에서 손잡이 길이 17cm, 날 길이 8cm의 공업용 커터칼을 새로 구입해 계속 시신을 훼손했다. 9일 오후 1시 16분. 약 16시간에 걸친 시신 훼손이 대략 마무리됐다. 그는 검은 대용량 비닐봉투를 구입해 시체를 옮겨 담았다. 도려낸 살점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유기했다. 수습 차례 같은 일을 반복했다. 나머지 뼈는 비닐봉투에 담기 좋게 토막을 냈다. 그는 곧바로 할머니 부모 형과 함께 살고 있는 용인시 이동면의 집으로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시체를 담은 비닐봉투는 본채 옆에 자신이 거주하는 이동식 컨테이너 주택 장롱에 감췄다. 모두 맨 정신에 벌인 일이었다.

심 군은 김 양의 시신을 훼손하던 9일 0시경 최 군에게 ‘작업 중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최 군이 ‘무슨 개소리냐’고 묻자 심 군은 ‘지금 피 뽑고 있다’며 사진을 보냈다. 사진은 욕조 안에 김 양의 시신이 누어 있고, 피부가 벗겨진 상태로 복부의 장기가 들여다보이는 끔찍한 모습이었다. 심 군은 이어 김 양 시신의 자세를 바꿔 비슷한 사진 한 장을 다시 보냈다. 최 군은 인터넷 호러물 캡처 사진 정도로 알고 ‘장난치지 마’라고 답을 보낸 뒤 잠자리에 들었다.(중략)

심 군이 토막 낸 시신의 뼈는 모두 29조각이었다. 살을 도려내 뼈만 남은 상태로 15kg가량 무게였다. 심 군은 경찰에서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을까 봐 죽인 뒤 시체를 가져나갈 방법이 없어 살점을 도려냈다”고 진술했다.(후략)』

<<http://news.donga.com/3/all/20130711/56395567/1>>

(매일경제)= 『(전략) 최군이 오후 7시 38분께 모텔을 나가자 심군은 김양을 칼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했다.

이후 심군 행동은 더 엽기적이었다. 시신을 쉽게 옮기려 9일 오후 1시 16분까지 16시간여 동안 모텔 화장실에서 김양 시신을 훼손했다.

살점과 장기를 커터칼로 도려내 변기에 버리는가 하면 추린 뼈 20여 개를 김장용 비닐봉투에 담아 용인시 이동면 자기 집으로 옮겨 장롱 속에 숨기기도 했다.

사체 훼손 과정에서 칼이 부러지자 심군은 새로운 커터칼을 추가로 구입해

사체를 마저 훼손하기도 했다.(후략)』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565370>〉

(중부일보)= 『(전략) 그는 모텔 화장실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시신을 무참히 훼손했다. 시신을 옮기기 쉽게 하려고 살점을 잔혹하게 도려낸 뒤 변기에 버렸다.

조사결과, 심군은 모텔 욕조에서 16기간 동안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엽기적인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심군은 살을 도려낸 후 20여개로 쪼갠 뼈를 김장용 비닐봉투에 담아 다음 날인 9일 오후 2시 7분께 모텔을 빠져나와 콜택시를 불러 용인 집으로 갔다.(중략)

경찰은 모텔 정화조에서 발견된 A양의 살점과 장기로 추정되는 15kg 상당의 신체 일부를 회수해 조사 중이다.(후략)』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478>〉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19살 남자가 17세 여성을 모텔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엽기적으로 훼손한 충격적인 사건을 보도한 스트레이트 기사들이다.

이들 가운데 특히 東亞日報 기사는 『도려낸 살점은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유기했다. 수습 차례 같은 일을 반복했다. 나머지 뼈는 비닐봉투에 담기 좋게 토막을 냈다.』 『토막 낸 시신의 뼈는 모두 29조각이었다. 살을 도려내 뼈만 남은 상태로 15kg가량 무게였다』 등 잔인하고 끔찍스런 일련의 범행과정을 지나치게 상세히 기술했다.

다른 매체들도 『모텔 화장실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뼈를 29등분한 뒤 살점과 내장 등은 변기에 버리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뼈는 비닐봉투에 담아 다음 날 오후 2시 7분쯤 모텔을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문화일보) 등 참혹한 시신 훼손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했다.

이 같은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주는 정서적 악영향과 더불어 특히 피해자 가

죽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중의 충격과 고통을 줄 수 있는 과잉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범죄행위를 보도할 때에는 잔인한 내용을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 (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07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영남일보 발행인 손 인 락
2. 국제신문 발행인 차 승 민

〈주문〉

영남일보 2013년 8월 6일자 6면 「범행현장 CCTV에 젖은 휴지 붙여 독서실 등 돌며 상습 절도」 제목의 기사, 국제신문 8월 8일자 6면 「범죄 부추기는 10만원대 위치추적기」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영남일보, 국제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영남일보)= 『A씨(35)는 절도죄로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후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서른 중반의 나이였지만 어느덧 전과는 8범. A씨는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새 출발을 하리라 굳게 다짐했다.(중략)

A씨는 올 초까지도 일용직 노동일을 하며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불경기 탓에 일감은 줄어들었고, 직업소개소에 출근 도장을 찍어도 허탕을 치기 일쑤였다.

수중에 돈이 줄어들면서 희망도 점차 희미해졌다.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 A씨는 또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중략) 이후 A씨는 독서실과 입시학원, 직업소개소 등 감시가 소홀한 곳을 대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범행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기발한 생각을 했다. 그는 화장실에 비치된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해 손바닥 크기로 여러 겹을 포개 접은 후 물을 적셨다. 자신의 범행 현장을 비추는 CC(폐쇄회로)TV의 '눈'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A씨는 젖은 휴지를 CCTV에 붙여 감시망을 무력화시킨 뒤 독서실 등지에 설치된 자판기를 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 그는 총 17차례에 걸쳐 빈 사무실을 털거나 자판기에서 금품을 빼내는 수법으로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었다.

그러나 꼬리가 너무 길었다. 경찰은 해당 독서실에서만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는 신고를 받고 CCTV를 지켜보며 잠복근무에 나선 끝에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후략)』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30806.010060802060001>>

(국제신문)= 『누구든 손쉽게 사들일 수 있는 GPS 위치추적기(추적기)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3년 3월 16일 오전 6시46분27초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번지 ○○아파트’ ‘48분27초 ○○지하차도’ 이모(여·46) 씨의 위치는 실시간으로 김모(여·41) 씨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됐다. 2분 단위로 경위도를 나타내는 정확한 위치와 차량 속도, 이동거리까지 포함됐다.



김씨는 2개월 전 크게 다투고 가출한 남편 박모(55)씨의 불륜을 의심했다. 박 씨가 새 거처를 마련한 북구 구포동 원룸 주차장에 3일 연속 주차하고 있는 이 씨를 의심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4일 이 씨의 차량에 추적기를 부착, 5월 7일까지 이 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7일 김 씨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정비공장에 들렀다가 추적기를 발견했다. 이 씨는 박 씨의 집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해 같은 주차장을 썼을 뿐 박 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처럼 누구든 손쉽게 추적기를 구매해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사용 목적을 확인하지도 않고 10만~50만 원이면 인터넷에서 살 수 있고 누군가를 감시할 수 있다. 특히 남편과 애인 등의 불륜 현장을 적발하려고 추적기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달 남부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감시하기 위해 여성의 차량에 추적기를 부착한 이모(41)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지난 6월 금정경찰서는 고급 차를 타고 모텔에 출입하는 불륜 커플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 가족에게 불륜 사실을 알려주는 대가로 이익을 챙긴 정모(40) 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북부경찰서 윤한희 지능팀장은 “치매 노인 실종 예방을 위해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더 크다. 인터넷 판매를 중단하고 목적에 따라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30808.22006205830>>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영남일보의 기사는 전과 8범인 30대의 절도행각과 구체적인 범행 수법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범인은 독서실과 입시학원, 직업소개소 등 감시가 소홀한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17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었다. 기사는 범인이 이 과정에서 CCTV 감시망을 무력화시켰다며 『화장실에 비치된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해 손바닥 크기로 여러 겹을 포개 접은 후 물을 적셨다. 자신의 범행 현장을 비추는 CC(폐쇄회로)TV의 ‘눈’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 수법을 상세히 보도했다.

국제신문의 기사는 GPS 위치추적기(추적기)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실태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기사는 『“2013년 3월 16일 오전 6시 46분27초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번지 ○○아파트’ 48분27초 ○○지하차도’ 이모(여·46) 씨의 위치는 실시간으로 김모(여·41) 씨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됐다. 2분 단위로 경위도를 나타내는 정확한 위치와 차량 속도, 이동거리까지 포함됐다.』며 범행에 악용된 위치추적기의 구체적인 성능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편집자는 경찰이 제공한 GPS 위치추적기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실어 문제의 위치추적기 제품명이 ‘SOREM’이라는 사실을 노출시켰다.

이들 신문의 기사는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어린이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 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25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연재소설 「徐遊記(서유기)」(글 이원호 그림 김재학) 2013년 7월 25일자 25면 184회, 7월 31일자 188회, 8월 13일자 197회에 대하여 ‘경고’한다.

〈이유〉

1. 위 적시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4회)= 『(전략) 박서현의 몸을 반듯이 펼친 서동수가 먼저 입술을 빨았다. 이제 서동수는 박서현의 옆에 딱 붙은 채 한 손은 젓가슴을, 다른 한 손이 허벅지로 뻗어졌다. 박서현이 두 팔로 서동수의 목을 감싸 안으면서 입을 벌려

혀를 내밀어준다. 그리고는 아래로 내려간 서동수의 손이 골짜기에 깊숙이 닿도록 다리 한쪽을 올렸다.

“나쁜 놈.”

잠깐 입이 떴어졌을 때 박서현이 헐떡이며 말했다. 눈을 치켜떴지만 눈동자의 초점이 멀다. 그때 서동수의 손가락 하나가 박서현의 동굴 안을 휘저었다.

“아이구 나 몰라.”

번쩍 허리를 치켜든 박서현이 비명을 질렀다. 벌써 동굴 안의 샘이 터져서 뜨거운 물줄기가 흘러나온다. 다시 서동수가 입을 막자 박서현의 혀가 거칠게 꿈틀거렸다. 서동수의 손가락이 더 깊게 동굴 안을 탐험한다.

“아파.”

박서현이 비명을 질렀지만 행동은 그 반대다. 허리를 치켜드는 바람에 손가락은 더 깊게 들어갔다.

“아이구 아파.”

비명은 탄성이나 같다. 외마디 탄성보다 더 자극적인 것이다. 이제 서동수의 입술이 박서현의 목을 훑고 내려와 젓가슴에 닿았다. 박서현의 젓가슴은 풍만하다. 젓꼭지는 땅콩 알만 했는데 검게 물들어졌고 이미 발딱 세워졌다. 서동수는 한쪽 젓가슴을 입안에 가득 넣었다.

“아아.”

만족한 탄성이 박서현의 입에서 터지면서 손으로 서동수의 머리칼을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신음소리와 함께 말한다.

“자기야, 더 깊게.”

“뭘?”

“손가락.”

엉덩이를 흔들면서 박서현이 신음했다.

“너무 좋아.”

“땀 났고도 이러니?”

마침내 서동수가 입안에서 뱅뱅 돌던 말을 뱉자 박서현은 신음과 함께 대답했다.

“빙신아, 너한테만 그래.”

서동수는 다시 입안에 젖가슴을 넣고 혀로 젖꼭지를 굴렀다.

“아유, 더 세계.”

이제 박서현의 몸은 절정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엉덩이의 움직임이 빨라졌고 허리를 치켜들었다가 떨어졌는데 신음이 점점 더 커졌다. 온몸은 땀이 배어나와 번들거렸으며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박서현이 허리를 힘껏 치켜들면서 소리쳤다.

“나, 터졌어!”

서동수는 문득 박서현의 이런 절정이 처음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변했다.』

(188회)=『(전략) 조은희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움켜쥔 서동수가 귓불을 씹으면서 웃었다.

“전혀 달라. 이럴 때의 당신이 말야.”

“그래, 난 색골이야.”

하반신을 비벼대면서 조은희가 서동수의 어깨를 물었다가 풀었다.

“미치겠어. 나 어떻게 하지?”

“그럼 가지 마.”

“안 돼.”

서동수가 조은희의 다리 한 쪽을 들어 올리자 적당한 자세가 되었다. 조은희가 서동수의 남성을 잡더니 제 동굴 앞에 붙이고는 혈떡이며 말한다.

“넣어!”

서동수는 조은희의 몸을 벽에 붙이면서 거침없이 진입했다.

“아이구머니.”

조은희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졌다. 이제 한 쪽 다리가 서동수의 다리에 담쟁이덩굴처럼 꼬여 매달리는 바람에 자세가 불안정해졌다. 서동수는 조은희의 두 다리를 두 팔로 들어 올렸다. 그러자 조은희가 안긴 채로 몸을 흔들었다.

“아, 아.”

조은희의 입에서 움직임에 따라 비명이 터졌다. 두 손을 치켜들고 입을 딱

벌린 조은희의 얼굴로 샤워물이 쏟아지고 있다. 입 안에 든 물을 뱉으면서 조은희가 소리쳤다.

“여보, 세계!”

서동수는 조은희의 몸을 벽에 세계 밀어붙였다. 그러자 남성에 강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욕실 안에서 비명이 이어지고 있다. 격렬해서 마치 누가 고문을 당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방 안에서 엉켰을 때 조은희는 마음껏 신음을 뱉는 것 같았지만 미현을 잠재적으로 의식했을 것이었다. 미현은 방문 두 개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욕실은 문이 하나 더 있다.

“아이구, 아야, 나 죽어.”

쾌감이 더 강해진 것이 분명했다. 조은희의 비명이 점점 높아졌다. 조은희의 몸무게를 남성이 치켜 받치고 있는 셈이다. 그만큼 동굴이 받는 느낌도 강할 것이었다. 서동수는 한 덩이가 된 조은희의 몸을 안고 열중했다. 조은희는 이제 쾌감만을 받는 한 덩어리의 몸이 되었다. 두 다리가 오그라졌고 두 팔은 빈틈없이 서동수의 목을 감은 채 비명을 질러대던 조은희가 마침내 폭발했다. 물에 젖은 얼굴을 치켜들면서 조은희가 울부짖었다. 그러다가 서동수의 어깨를 물어뜯는다.』

(197회)= 『“뭐해? 빨리!”

다시 정재민이 소리쳤을 때 서동수는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정재민의 젖가슴을 입안에 가득 넣었다. 놀란 정재민이 엉겁결에 서동수의 머리칼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곧 덮쳐온 쾌감으로 입을 딱 벌리고 신음했다.

“아아아.”

거침없는 신음이다. 서동수가 혀로 젖꼭지를 놀리면서 골짜기를 덮은 손이 현란하게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미 질퍽해진 동굴 안에서 서동수의 손가락이 갖가지 재주를 부리고 있다. 정재민이 안달을 했지만 서동수는 서들지 않았다.

“아이구 아야.”

정재민의 신음이 높아졌다. 허리를 들썩였다가 치켜세웠던 두 다리를 꼬면서 정재민이 두 손으로 서동수의 머리칼을 움켜쥐었다. 서동수의 입술이 배꼽으로 내려가자 정재민은 긴장했다. 가쁜 숨을 뱉더니 두 다리를 딱 붙였다.

“싫어. 거긴.”

입술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 같다. 그러나 이번에도 서동수는 말을 듣지 않는다. 아랫배를 훑고 간 입술이 골짜기에 닿자 정재민이 몸을 비틀었다.

“이제 그만.”

그러고는 서동수의 어깨를 잡고 끌어올리려는 시늉을 했다. 정재민의 샘은 흘러넘치고 있다. 서동수는 정재민의 손을 뿌리치고 샘에 입술을 붙였다. 그 순간 정재민의 저항이 그쳐졌다. 입에서 앓는 소리만 뱉어낼 뿐 온몸이 늘어져 있다. 서동수의 입술이 정재민의 샘 끝을 애무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다시 정재민의 몸이 꿈틀거렸고 금방 달아올랐다. 애무는 몸을 달아오르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벽을 허물어주는 효과도 있는 것이다. 이제 정재민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서동수에게 몸을 맡긴 것이다. 이윽고 정재민이 폭발했다. 정재민의 절정은 독특하다. 온몸을 쭈욱 뻗고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 마치 숨이 넘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동작이 꽤 오래가는 것이다. 서동수는 정재민의 샘에 얼굴을 붙인 채 참을성 있게 경련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여자의 절정은 모두 다르다. 얼굴이 다르듯이 같은 절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같은 여자의 절정도 매일, 매번 다르다.(중략)

그래서 정재민의 몸 위로 올라 거칠게 다리를 짓히고는 여유도 주지 않고 몸을 부딪쳤다.

“아악.”

정재민이 비명 같은 외침을 뱉더니 두 손으로 서동수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눈을 치켜떴지만 이미 초점은 멀다. 서동수가 난폭하게 몸을 움직이며 말했다.

“입 닥치고 있어.”

정재민의 입에서는 이제 외마디 신음만 터져 나왔다. 그러나 온몸은 빈틈없이 서동수의 몸을 받아들이고 있다. 두 다리가 번갈아 쳐들렀다가 소파를 짚고는 서동수의 몸을 강하게 받아 올린다.』

2. 위 소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소설은 주인공이 이혼한 전처를 비롯한 몇 여성들과 정사를 나누는 장면을 자극적이고 음란한 표현과 대사를 섞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문화일보는 위 소설의 선정성과 관련해 올 들어서만 모두 3차례에 걸쳐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위 소설은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32 신문윤리강령 위반

大田日報 발행인 남 상 현

〈주문〉

大田日報 2013년 8월 30일자 6면 「현장르포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동행 해보니/방안 가득 性기구 ‘홍등가’ 뺨쳐」 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大田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28일 오후 8시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의 한 오피스텔 건물. 초등학교와 불과 100m 남짓 떨어진 이 오피스텔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대전 둔산경찰서 생활질서계 오상욱 팀장과 안기현 형사는 424호 현관문에 귀를 기울였다. 방안에서 남녀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이른바 오피스텔 성매매. 오피스텔을 임대해놓고 그 공간을 이용해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 두 경찰관이 문을 두드렸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문을 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안 형사는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밝힌 후 “이 방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단속에 나왔다”고 말했다.

경찰관들이 오피스텔 방안으로 들어가자 성매수남으로 보이는 남성이 방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안 형사가 “여기서 성매매 하셨죠”라고 묻자 이 남성은 “아니다”고 잡아 뗐다. 두 경관이 방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방안은 성매매 업소와 별반 다를게 없었다. 차곡차곡 쌓인 수건과 냉장고 가득한 음료수, 피임기구까지 일반 가정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한 모습이었다. 심지어 업소 쿠폰도 발견됐다.

안 형사는 “요즘은 이렇게 쿠폰도 사용한다”며 “단골손님(?)이 있어 자주오면 할인 쿠폰 등의 혜택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두 경관이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여성과 남성의 휴대폰을 조사했다. 오피스텔 성매매의 특성상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성매매 알선 업주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다. 안 형사가 남성의 휴대폰을 조사한 결과, 남성의 휴대폰에서 성매매 알선 업주로 알려진 사람의 번호가 발견됐다.

또 여성의 휴대폰에서는 그 번호로부터 ‘424호실 7시’ 등의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가 나왔다. 그제서야 남성이 두 경관에게 성매매를 하러 왔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성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경관들은 증거물을 통해 이들의 성매매 사실을 확인했다.

안 형사는 성매수남에게 “어떻게 이 곳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고 물었다.



대전 서구 탄방동 일대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
방안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용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남성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됐다”며 “여러 사이트를 들어가봐서 정확하게 사이트 이름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안 형사는 여성에게 “금액은 어떻게 책정이 되고 얼마를 받느냐”고 묻자 이 여성은 “13만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중 9만원을 자신이 갖고 4만원을 알선 업자에게 준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급한 돈이 필요해서 ‘인터넷 알바’ 사이트를 통해 이 일을 알게 됐으며 “정말 죄송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터뜨렸다. 이후 이들은 본인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자술서를 쓰고 모두 귀가 조치됐다. 안 형사는 성매매 업주의 것으로 여겨지는 번호로 전화를 걸고 현장으로 나오라고 요구했으나 업주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오 팀장은 “이런 것이 힘들다”며 “성매매가 이뤄지는 순간을 포착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 업주를 잡기는 더욱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종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 이면에는 변화한 풍속도 있다”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성매매 여성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일반인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반 여성들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성매매 택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죄의식 없다는 것. 게다가 성매수남들도 용의주도함을 보여 검거하기가 쉽지 않다.

안 형사는 “적발의 어려움이 따르지만 관할구역 내 성매매 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한 번 적발을 위해서 둔산권 내 오피스텔을 모두 훑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http://www.daeje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080130〉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大田日報의 위 기사는 대전시 서구 탄방동 일대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가 이뤄지는 현장을 고발한 르포기사다. 기자는 경찰관과 동행해 성매매 현장을 취재했다. 또 르포기사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 단속과정을 생동감있게 보도했다.

기사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정보를 입수했다는 성매수남의 진술을 포함해 성매매가 이뤄지는 구체적인 과정과 가격, 성매매 현장의 내부 모습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현장 내부 사진까지 게재하는 등 독자들의 부적절한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내용을 필요 이상으로 상세하게 기술했다.

위 기사와 사진은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독자들에게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에 관한 호기심을 부추기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48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연재소설 「徐遊記(서유기)」(글 이원호 그림 김재학) 2013년 9월 9일자 24면 215회, 9월 10일자 216회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유〉

1. 위 적시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5회)= 『(전략) 진영아의 몸은 목이 멎 정도로 자극적이었다. 예쁘다기보다 성적(性的) 매력으로 가득찬 몸이었다. 둥근 어깨에 단단한 팔, 근살이 없고 마르지도 않은 몸매, 허리의 부드러운 곡선이 아랫배에 닿아서 약간 볼록해졌고 곧 짙은 숲에 덮인 건강한 허벅지로 내려간다. 힘찬 허벅지다. 두 다리를 조금 벌리고 서 있어서 숲 안쪽의 골짜기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선홍빛 골짜기 걸쭉은 검푸른 빛이었고 위쪽에 젓꼭지만 한 클리토리스가 매달렸다. 진영아가 서동수의 거침없는 시선을 받더니 곧 두 다리를 오므렸다. 얼굴에 웃음기가 떠올라 있다.(중략)

그러면서 진영아가 한 걸음 물러나 온몸을 다 드러내었다.

“자, 봐요.”

“침대 위에 다리 하나를 올려놓고.”

그것은 동굴 안을 더 잘 들여다보려는 의도다. 진영아가 거침없이 다리 하나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고 곧 숲이 벌려지면서 동굴 안이 드러났다.

“으음.”

탄성을 뱉은 서동수가 몸을 덮은 시트를 치우자 알몸이 드러났다. 그 순간 진영아의 눈빛이 강해졌다. 서동수의 남성이 곧두서 있었기 때문이다.

“아유, 죽겠어.”

혀로 아래위 입술을 적시면서 진영아가 말했다. 목소리에 물기가 빠져 갈라진 소리가 난다. 진영아가 서동수의 남성에 시선을 준 채 물었다.

“오럴 해드려요?”

“넌 언제?”

“난 좋아요.”

“해주는 거? 하는 거?”

“해주는 거, 내가 하는 건 싫어.”

“그럼 이리 와.”

마침내 진영아가 침대 위에 었혔던 다리에 힘 한번 주고 올라와 서동수 옆에 눕는다. 몸이 부딪치자 더운 숨결과 함께 달아오른 피부가 느껴졌다. 상반신을 일으킨 서동수가 곧 진영아의 입술에 키스했다. 진영아가 두 손으로 서동수의 목을 감싸 안더니 곧 혀를 내밀었다. 서동수는 매끄럽고 탄력있는 진영아의 혀를 애무했다. 키스는 섹스의 인사 같은 역할을 한다. 키스로써 경계심이 무너지고 두려움이 해소되며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고는 곧 도화선 구실을 한다. 혀를 비비면서 서동수의 손이 진영아의 젖가슴과 아랫배, 그리고 숲에 닿았다. 손끝이 클리토리스에 닿자 진영아의 하반신이 찢끔하더니 곧 두 다리가 벌어졌다. 서동수의 손이 거침없이 숲을 뚫더니 손가락 하나가 동굴 안으로 탐색하듯이 진입했다.

“으응.”

진영아의 입에서 신음이 터졌다. 서동수는 손가락이 흥건하게 젖은 것을 느끼고는 진영아의 입에서 얼굴을 떼었다. 진영아의 숨결이 가쁘다. 눈동자의 초점도 멀다.』

(216회)= 『“으으으.”』

진영아가 그렇게 신음을 뱉으면서 터졌다. 절정에 오르는 모습은 다 다르다. 자세히 보면 같은 여자의 절정도 매번 다른 것이다. 그러나 진영아의 터지는 순간은 독특했다. 마치 상처받은 짐승처럼 길고 굵은 신음을 뱉으면서 온몸을 오그린 것이다. 서동수는 진영아의 골짜기에서 머리를 들었다. 진영아의 신음과 오르가슴은 계속되고 있다. 온몸을 새우처럼 굽히고는 떨면서 신음한다. 이것이 진영아가 터졌을 때의 모습이다. 그때 서동수가 진영아를 돌려 바로 눕히면서 몸 위에 오른다. 마치 응급실 의사처럼 정확하고 빠른 몸놀림이다. 그러고는 진영아의 다리를 벌리고는 곧장 몸을 합쳤다. 그 순간이다. 진영아가 입을 딱 벌리더니 두 손으로 서동수의 팔을 움켜쥐었다. 그러고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아이고 여보, 좋아.”

한국어다. 그 순간 서동수는 피가 머리끝으로 솟는 느낌을 받는다. 한국어에 익숙해진 뇌가 바로 자극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서동수가 거칠게 몸을 움직

이자 진영아가 신음하며 말했다.

“여보, 천천히, 천천히.”

서동수는 움직임을 늦췄다. 그러자 진영아가 허리를 들어 올려 서동수와 리듬을 맞추면서 소리쳤다.

“아, 좋아, 여보, 너무 좋아.”(중략)

“좋아서 그래요, 참을 수가 없어!”

진영아의 몸은 뜨겁고 샘은 용암이 넘쳐흐르고 있다. 그때 절정으로 오르던 진영아가 다시 소리쳤다.

“자세 바꾸지 않아도 돼?”

여자마다 다 다르다. 그래야 인간이다. 같으면 로봇이지 인간인가? 같다면 오입하는 남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진영아는 독특했다. 물론 주변 환경의 영향도 있었을 테지만 이 와중에도 자세 걱정해주는 여자는 처음이다. 모두 쾌락의 시간을 늦추려는 시도인 것이다. 움직임을 멈춘 서동수가 진영아의 허리를 잡고 돌리는 시늉을 했더니 금방 눈치를 채고 옆드렸다. 얼굴은 침대에 붙이고는 상반신을 납작 엎드린 채 엉덩이를 뒤로 내민다. 서동수는 진영아의 희고 풍만한 엉덩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아아아!”

다시 두 몸이 합쳐졌을 때 이제 진영아의 입에서 커다란 탄성이 터졌다. 전위로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다. 서동수가 거칠게 허리를 움직일 때마다 진영아의 탄성이 점점 더 커졌다. 그래서 서동수가 다시 움직임을 멈춰야만 했다.(중략)

“여보, 어서요, 빨리.”

다시 서동수가 움직였고 서너 번의 신음소리가 이어지더니 바로 진영아가 폭발했다. 엄청난 폭발이다. 진영아가 침대 시트를 입으로 물어뜯으면서 몸을 웅크리고 있다. 서동수는 진영아의 허리를 뒤에서 부둥켜안았다. 계속해서 진영아의 신음이 이어지고 있었으므로 서동수는 기다렸다. 이윽고 진영아의 몸이 늘어진 것은 5분쯤이 지난 후였다. 땀으로 범벅이 된 등에 찬 기운이 느껴지고 있다.』

2. 위 소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소설은 이틀 치 신문에 걸쳐 주인공이 중국의 의류 매장 책임자로 고용한 여성과 정사를 나누는 장면을 자극적이고 음란한 표현과 대사, 신음소리를 섞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문화일보는 위 소설의 선정성과 관련해 올해 들어서만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3차례 '주의' 조치를 받은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경고'를 받았다.

위 소설은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55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이 영 만

〈주문〉

헤럴드경제 2013년 10월 1일자 10면 「“모델출신 男이 토닥여 줍니다” ... 여성 대상 신종마사지 기승」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남친과 싸운 후 토닥이를 받았어요. 카카오톡으로 트레이너 프로필과 전신 사진이 왔고, 혼자 모텔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한 시간 정도 후 훈남 마사지사도 도착했습니다. 이후 샤워를 하고 관계는 없는 건전마사지를 받았어요. 다음에는 건전마사지 말고 다른 서비스에도 도전을 해봐야겠어요. 남성 프로필은

키 185에 25살의 에이스급이었습니다.”

최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남성 출장마사지가 성행 중이다. 여성들 사이에서 ‘토닥이’(몸과 마음을 토닥거리려 준다는 뜻)로 불리는 이 서비스는 헬스트레이너, 모텔 출신 훈남들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간다’며 여성들 사이에서 은밀히 퍼지고 있다.

실제 여성전용 커뮤니티 등에는 토닥이 서비스를 받았으며 후기글이 여럿 올라오고 있다.

후기글에 따르면 마사지는 A, B, C 세 가지 코스로 나뉜다. A 코스는 아로마, 경락마사지 등 건전마사지, B 코스는 유사성행위까지, C 코스는 성관계까지 가능한 마사지로 금액은 기본이 10만원이라고 한다. 성행위 시에는 요금 협상이 필요하고 그때 그때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이 업체로 신청을 하면 업체 측은 관리하고 있는 남성들의 프로필과 전신사진 등을 고객에게 보내 마음에 드는 남성을 선택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업체 측은 “모텔은 물론 여성이 사는 집 등 원하는 곳 어디든 출장이 가능하고, 고객의 연락처를 따로 관리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비밀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며 홍보하고 있다.

경찰도 이런 여성전용 출장마사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고 있지만 워낙 은밀히 이뤄지고 있어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실제 호텔을 잡고 여경을 통해 출장마사지를 불렀지만 오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출장마사지의 경우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불법일 뿐 아니라 성폭행은 물론 강력범죄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001000330&md=20131004004159_AT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남성 출장 마사지가 성행 중이라는 내용의 고발기사다.

기사는 그러나 경각심을 일깨우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남성 출장 마사지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사는 첫 머리에서 『“남친과 싸운 후 토다이를 받았어요. 카카오톡으로 트레이너 프로필과 전신사진이 왔고, 혼자 모텔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한 시간 정도 후 훈남 마사지가 도착했습니다. 이후 샤워를 하고 관계는 없는 건전마사지를 받았어요. 다음에는 건전마사지 말고 다른 서비스에도 도전을 해봐야겠어요. 남성 프로필은 키 185에 25살의 에이스급이었습니다.”』라는 인터넷에 실린 해당업자의 ‘뉘시성 글’로 의심할만한 내용의 ‘이용 후기’를 여과 없이 소개했다.

이어 『이 서비스는 헬스트레이너, 모텔 출신 훈남들이 ‘부르면 어디든 달려간다’며 여성들 사이에서 은밀히 퍼지고 있다』는 자극적인 내용과 더불어 『마사지는 A, B, C 세 가지 코스로 나뉜다. A 코스는 아로마, 경락마사지 등 건전마사지, B 코스는 유사성행위까지, C 코스는 성관계까지 가능한 마사지로 금액은 기본이 10만원이라고 한다. 성행위 시에는 요금 협상이 필요하고 그때 그때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등 마사지 종류와 금액 등 선정적인 내용을 지나치게 상세히 전했다.

따라서 이 기사는 취재 의도와 경위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불건전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성 짙은 기사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77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연재소설 「徐遊記(서유기)」(글 이원호 그림 김재학) 2013년 10월 10일자 26면 233회, 10월 11일자 234회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유〉

1. 위 적시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33회)= 『(전략) 서동수는 손을 뺀 오정미의 섶에 손가락을 넣었다. 갑작스러운 행동이었고 마침 오정미가 다리를 벌린 상태였다. 서동수는 자신의 손가락이 뜨거운 섶 안으로 들어간 느낌을 받았다. 섶은 흘러넘칠 정도다.

“자. 잔디밭에서 한번.”

서동수가 일어서는 바람에 모자가 벗겨졌다. 몸을 비튼 오정미가 잔디밭 쪽으로 뒷걸음질을 치면서 머리를 저었다.

“싫어, 여기선.”

“이리 와.”

몸을 돌린 오정미가 알몸으로 두어 발짝 뛰었지만 금방 서동수에게 어깨가 잡혔다. 몸을 비튼 오정미가 다시 옆으로 뛰다가 서동수가 발을 거는 바람에 잔디밭 위로 넘어졌다.

“아야.”

오정미가 비명을 질렀지만 엄살이다. 서동수는 오정미를 덮어 눌렀다. 어둠 속에서 두 알몸이 잔디밭 위를 뒹굴었다.

그러나 순식간에 오정미를 제압한 서동수가 깔고 앉았다. 두 다리를 거칠게 벌렸을 때 오정미가 다시 비명을 질렀다.

“아유, 등이 따가워!”

서동수의 남성이 골짜기 위에 붙었다. 오정미는 뱀에 잡힌 쥐처럼 순식간에 굳어졌다. 가쁜 숨소리가 잔디밭 위를 덮는다. 그 자세에서 오정미가 헐떡이며 말했다.

“세계 해줘.”

그 순간 서동수의 남성이 거칠게 진입했다. 뜨거운 용암 속으로 뛰어든 것이다.

“아악.”

입을 딱 벌린 오정미의 외침이 잔디밭 위에 울려 퍼졌다.

“아이고, 여보.”

잔디밭에 단단히 두 발을 디딘 오정미가 허리를 숙구치면서 소리쳤다.

“나 죽어!”

머리를 숙였던 서동수는 짙은 땅 냄새를 맡는다. 풀 냄새가 섞인 땅의 냄새다. 맵고도 싱그러운 땅 냄새를 맡으면서 서동수는 거칠게 움직였다. 대지는 단단하다. 오정미의 비명 같은 탄성이 계속해서 울리고 있다. 서동수는 오정미의 허리를 비틀어 자세를 바꾸었다. 오정미가 익숙한 동작으로 잔디밭 위로 납작 엎드린다. 이제는 따갑다는 소리가 쑥 들어갔다. 얼굴 한쪽을 잔디 위에 붙였고 납작 엎드린 채 엉덩이는 추켜올렸다.

“아아악.”

잔디에 대고 뺨는 오정미의 신음이 다시 울렸다. 오정미도 이제 잔디 냄새를 맡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뺨은 오정미의 두 손이 잔디를 쥐어뜯고 있다. 서동수는 오정미의 풍만한 엉덩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었다.

“아아, 여보! 여보!”

오정미가 엉덩이를 흔들면서 소리쳤다.

거친 행동이어서 리듬이 맞지 않는다. 터지려는 것이다. 일찍 터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서동수는 잠자코 오정미에게 맞췄다. 땀 냄새를 맡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순간 오정미가 비명을 지르며 터졌다.』

(234회)=『“아유 너무 좋아.”

알몸으로 사지를 큰 대자로 벌린 오정미가 잔디밭에 누워 하늘을 보았다. 아직 목소리에 열기가 띄워져 있었지만 밝다. 몸을 굴린 오정미가 서동수의 팔에 머리를 베고 안긴다.

“자기하고 그거 끝나면 몸이 가벼워져.”

“말도 안 되는 소리.”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서동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지난번에는 거기가 무거워져서 발을 떼기도 힘들다고 했으면서.”

“내가 언제?”

오정미가 손을 뺀어 서동수의 남성을 감싸 안았다. 남성은 이제 늘어져 있다.

“쌌어?”

“응.”

“난 정신없어서 몰랐어.”(중략)

오정미의 얼굴에 웃음이 떠올라 있었으므로 서동수는 몸을 세워 오정미의 몸 위에 올랐다. 놀란 듯 오정미가 눈을 크게 떴다.

“또?”

“네가 세워놓았잖아?”

“이번에는 천천히, 여보, 아깐 너무 정신이 없었…….”

말을 잊지 못한 오정미가 입을 딱 벌렸다. 서동수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아이구 아파.”

오정미가 비명을 질렀지만 섶 안은 아직도 젖은 상태여서 적당했다. 두 다리로 서동수의 하반신을 감아 안은 오정미가 헐떡이며 말했다.

“자기야, 화내지 마.”

서동수가 거칠게 허리를 움직였으므로 말을 잊지 못한 오정미의 입에서 신음이 터졌다.

“아, 아, 아파.”

다시 잔디밭 위에서 둘의 거친 몸부림이 시작되었다. 비명 같은 쾌락의 탄성이 허공으로 솟아올라 별에 부딪쳐서 산산조각이 되어 흩어지는 것 같다. 서동수는 집중했지만 머릿속에 떠오른 박서현의 영상이 지워지지 않는다. 참 복이 없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문득 가슴이 서늘해진다. 나한테도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지 않겠는가? 오정미의 신음이 점점 더 높아졌고 움직임도 격렬해졌다. 또 빠르다.』

2. 위 소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소설은 이틀 치 신문에 걸쳐 주인공이 사업상 알게 된 여성과 바닷가 별장 잔디밭에서 알몸 상태로 술을 마시다 정사를 나누는 장면을 자극적이고 음란한 표현과 대사, 신음소리를 섞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이는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화일보는 위 소설의 선정성과 관련해 올 들어서만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3차례 ‘주의’ 조치를 받은 데 이어 지난 8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경고’를 받았다.

문화일보가 세 차례에 걸친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공개경고’ 등 더욱 강한 제재와 함께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제재) ①항 제7호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2013-1278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문〉

일간스포츠 연재만화 「강안남자」(원작 이원호/글·그림 김성모) 2013년 10월 10일자 17면 SeasonVI<1076> 제3화 인간의 조건 9회, 10월 18·19일자 19면 SeasonVI <1082> 제3화 인간의 조건 15회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적시 만화는 남녀가 정사를 나누는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장면 중에는 “아아아아!” 등 신음 소리와 “끼아아아~” 등 비명소리와 더불어 〈떡 떡〉, 〈숙〉, 〈꼭〉 등 자극적인 의태·의성어들과 함께 “저…물건 어찌할꼬…”

등 음란한 대사가 섞여 있다.

문제 부위는 보이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선정적이고 음란한 장면 묘사는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독자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충동을 일으키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309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문〉

문화일보 연재소설 「徐遊記(서유기)」(글 이원호 그림 김재학) 2013년 11월 14일자 27면 258회, 11월 15일자 28면 259회에 대하여 ‘경고’ 한다. 문화일보는 이 ‘결정 주문과 이유 부분의 요지’를 자사 지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유〉

1. 위 적시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58회)= 『전략』 서동수는 먼저 이은실의 젖가슴 한쪽을 입안에 가득 넣었다. 그 순간 놀란 이은실이 두 손으로 서동수의 머리를 움켜쥐었지만 밀지도 당기지도 않는다. 서동수는 입안에 든 이은실의 젖꼭지를 혀로 굴렀다. 그리고 손 하나를 뺀어 허벅지와 무릎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이은실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젖꼭지는 땅콩 알만 했는데 어느새 발딱 일어섰고 허벅지 안쪽을 손바닥이 훑고 지나갈 때마다 이은실은 무릎을 세웠다가 내린다. 서동수의 입이 다른 젖꼭지로 옮겨졌다. 허벅지를 쓸던 손이 이제는 엉덩이와 무릎 뒤쪽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여자의 성감대는 수십 군데다, 분위기가 뜨거워졌을 때는 성감대가 아닌 곳이 없다. 발가락과 발바닥, 발뒤꿈치에서 목덜미와

겨드랑이, 등과 치골, 동굴과 항문 사이의 계곡까지 전류를 일으킨다. 이제 서동수의 입이 아랫배로 옮겨졌다.

“아유, 선생님.”

이제는 이은실이 서동수의 머리칼을 두 손으로 움켜쥐면서 신음했다. 두 무릎을 세워 서동수의 머리를 조이려고 했다가 다시 뺀 동작을 되풀이한다. 서동수의 손이 아래쪽의 골짜기로 밀려 내려간 순간 이은실이 비명을 질렀다.

“그만 해요. 그만.”

그러나 골짜기를 덮은 서동수의 손은 금방 젖었다. 뜨거운 애액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몸이 사랑한다는 증거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몸이 사랑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다. 서동수의 손이 동굴을 건드리자 이은실의 신음은 더 높아졌다. 이제는 서동수의 어깨를 잡아 몸을 일으키려는 시늉을 하더니 마침내 소리쳤다.

“선생님, 빨리요.”

“아직 멀었어.”

서동수는 두 시간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손가락 하나가 동굴 안으로 진입한 순간 긴장한 이은실의 몸이 굳어졌다가 금방 받아들였다. 엉덩이를 치켜들어 손가락과 리듬을 맞추면서 이은실이 절정으로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서동수는 상반신을 일으켜 이은실의 입술에 키스했다. 이은실이 두 손으로 서동수의 목을 감아 안더니 혀를 내밀었다. 서동수는 달콤하고 말랑한 이은실의 혀를 빨았다. 이제 되었다. 잠깐 입술을 떼자 이은실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손가락의 움직임이 거칠고 깊어지면서 이은실이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윽고 이은실이 허리를 힘껏 치켜 올리면서 폭발했다. 절정의 외침은 비명 같다.』

(259회)= 『(전략) 서동수의 어깨를 두 손으로 움켜쥐면서 이은실이 올려다 보았다. 조금 벌린 입에서 품어진 숨결이 가슴에 닿는다. 서동수는 남성을 동굴 끝에 붙였다. 심장 박동이 거칠어지면서 온몸의 에너지가 상승했다. 긴장한 이은실의 허리가 꿈틀거리자 호흡을 가는 서동수가 천천히 남성을 진입시켰다.

“으으으.”

이를 악문 이은실이 서동수의 어깨를 힘껏 움켜쥐었다.

“어이구 아파.”

이은실이 비명처럼 말했지만 서동수는 환호하며 반기는 동굴을 느낀다.

“으음.”

서동수의 입에서도 탄성 같은 신음이 터졌다. 용암으로 가득찬 이은실의 동굴 안 탄력이 강했기 때문이다. 강하면 강할수록 남성은 접촉면의 쾌감이 증대되는 법이다. 동굴을 가득 채웠던 서동수의 남성이 빠져나가는 순간이다. 턱을 짚힌 이은실의 입이 짹 벌어졌으므로 다급해진 서동수가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 그때 이은실이 두 다리를 들어 서동수의 하반신을 감는다. 얼굴을 흔들며 손바닥을 때어낸 이은실의 비명이 방안에 퍼졌다.

두어 번 같은 동작을 하고 나서 두 몸의 움직임이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올리고 내리면서 받고 치솟는 것이다. 네 쌍의 사지가 빈틈없이 엉켰다가 헤어졌고 자세를 바꾸면서 다시 리듬을 맞춘다. 이제 서동수도 이은실의 외침을 상관하지 않았다. 다 잊고 몰두한 것이다. 이윽고 이은실이 다시 터졌다. 들은 방바닥에 떨어져 있었는데 이은실이 상위 자세다. 상반신을 번쩍 세운 이은실이 머리까지 젖히고 비명을 질렀을 때 서동수는 두 손으로 젖가슴을 움켜쥐었다. 두 몸은 땀으로 젖었고 방안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 같다.(후략)』

2. 위 소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소설은 이틀 치 신문에 걸쳐 주인공 서동수가 북한 출신 여성과 정사를 나누는 장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소설은 여러 가지 성행위 동작과 이에 따른 신체의 반응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성행위 과정에서 주고 받는 자극적인 대화 내용을 드문드문 곁들이는 등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음란한 표현으로 일관했다.

이 같은 선정적인 내용은 자칫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의 성적 호

기심을 충동질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위 소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문화일보는 위 소설의 선정성과 관련해 올 들어서만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3차례 ‘주의’ 조치를 받은 데 이어 제867~제869차 회의에서 3회 연속 ‘경고’를 받았다.



▲ 2014-1024 신문윤리강령 위반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주 문>

문화일보 연재소설 「徐遊記(서유기)」(글 이원호 그림 김재학) 2014년 1월 7일자 22면 294회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위 적시 소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욕조는 두 사람이 나란히 눕고도 남을 만큼 컸다. 서동수는 레이와 욕조에 나란히 앉았다. 레이의 어깨를 감아 안은 서동수가 다른 손으로 젓가슴을 감싸 쥐었다. 레이의 선흥빛 젓꼭지는 땅콩알만 했고 이미 단단해져 있다.

“레이, 내 현지처로 소문이 나면 결혼에도 지장이 있을 텐데.”

젓가슴을 애무하면서 서동수가 말하자 레이가 손을 뺀어 남성을 쥐었다.

“난 보스의 현지처로 살거예요.”

레이가 서동수의 남성을 부드럽게 애무했다.

“그 소문이 났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스.”

“넌 나를 잘 모르지 않아?”

“이만하면 많이 아는 편이죠.”

이제 서동수의 손도 레이의 골짜기로 내려왔다. 레이가 입을 벌리더니 낮은 신음을 뱉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눈동자의 초점은 흐려져 있다. 서동수의 손가락이 골짜기를 문지르자 레이의 신음은 더 높아졌다.

“보스, 걱정하실 것 없어요.”

몸을 비틀면서 레이가 말했다.

“난 현지처를 내세워 업무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제 레이의 몸 위로 올라와 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레이가 꿈틀대는 바람에 욕조의 물이 넘쳐흘렀다. 레이가 서동수의 목을 두 팔로 감아 안으면서 물었다.

“보스, 여기서?”

서동수는 레이를 안고 몸을 일으켰다.

“침대에서.”

그러자 레이가 몸을 비틀어 떼더니 타월을 집어 서동수의 몸을 닦았다. 날렵한 행동이다. 욕실을 나온 둘은 침대에 올라 다시 영켰다. 흰 시트 위에 반듯이 누운 레이의 몸은 기름을 칠한 것처럼 윤기가 났다. 서동수는 레이의 입술에 다시 키스했다. 이미 반쯤 열려진 레이의 입술에서 살구 맛이 났다. 금방 뽀뽀나 온 혀는 달콤했다. 그 사이에 젓가슴을 지나 아랫배로, 다시 골짜기로 훑고 내려간 손바닥은 샘에서 흘러내린 뜨거운 생수를 만난다. 레이의 샘은 넘치고 있

다. 서동수의 입술이 입술에서 젓가슴으로 내려왔다. 젓가슴을 입안에 넣은 서동수가 혀로 젓꼭지를 굴리자 레이의 신음이 다시 터졌다.

“어서요.”

레이가 그렇게 말했다.

“해주세요.”

두 다리를 꼬면서 레이가 재촉했다. 서동수는 마침내 레이의 몸 위로 올랐다. 기다렸다는 듯이 레이가 팔을 뻗어 서동수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골짜기 끝에 닿은 남성을 느끼고는 허리를 꿈틀거리고 있다. 그 순간 둘의 몸이 합쳐졌다.

“아아아.”

턱을 뒤로 젖힌 레이가 거침없이 신음을 뱉는다. 두 다리가 서동수의 허리를 감았다가 곧 떼어지더니 온몸을 딱 붙인다. 서동수는 남성에게 전해진 압박감을 견디려고 어금니를 물었다. 레이의 동굴은 좁고, 탄력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청난 자극을 참으려는 의도다. 서동수가 천천히 몸을 빼니 레이의 신음이 더 높아졌다.

“아아아아.”

레이가 허리를 좌우로 비틀면서 상하로 흔들었다. 두 손으로 서동수의 허리를 끌어당기더니 목을 감싸 안는다. 서동수는 다시 힘껏 레이의 몸 안으로 진입했다. 방 안에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비명 같은 탄성이 울려 퍼졌고 가쁜 숨소리에 섞여 뜻 모를 외침이 이어지고 있다. 서동수는 열중했다. 레이의 뜨겁고 깊은 동굴 안으로 끝없이 빨려 들어간다.』

2. 위 소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소설은 주인공 서동수가 부하 직원과 정사를 나누는 장면을 자극적이고 음란한 표현과 대사를 섞어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했다.

이 같은 선정적인 내용은 청소년을 포함한 광범위한 독자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왜곡된 성의식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

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신문소설 심의기준 6(성행위 장면을 선정적, 음란하게 묘사한 것)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107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문〉

일간스포츠 2014년 2월 27일자 17면 연재만화 「강안남자」(원작 이원호/글·그림 김성모) Season VII <1173> 제2화 대천사 ②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일간스포츠의 위 연재만화는 폭력배들이 빛을 갓지 못한 채무자를 납치해 잔인하게 청부살해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폭력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만화에서 폭력배들은 채무자의 손발을 묶은 뒤 칼로 찢러 상처를 내고, 피와 내장을 먹도록 훈련받은 쥐를 풀어놓아 상처를 뚫고 들어가 먹게 해 살해한다.

일부 장면을 보이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처리하긴 했지만 이러한 일련의 스토리를 누구나 알 수 있게 표현한 그림은 지나치게 잔인하고 폭력적이며 비윤리적이다. 이는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독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신문의 품위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02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인스닷컴 발행인 박 상 순

〈주문〉

조인스닷컴 2013년 8월 9일자 「[사진] '귀마개? 헤어밴드?' 주요 부위만 감싸주는 '씨 팬티」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조인스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한 여성이 '씨 팬티(C-pants)' 혹은 '씨 스트링(C-String)'이라 불리는 특이한 속옷을 입고 해변을 뛰거나 태닝을 하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 계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씨 팬티는 허리끈을 아예 없애고 탄성이 있는 와이어를 이용해 엉덩이 사이에 끼워 입는 팬티다. 모양이 알파벳 C과 비슷해 붙여진 이름이다.

영상 속 여성은 해변에서 태닝을 하고 있다. 속옷에 가려지는 부위까지 예쁘게 태우고 싶은 욕망에 사로 잡힌 여성은 바로 씨 팬티를 착용한다. 여성은 주요 부위만을 가린 채 태닝을 즐기거나 해변을 질주하는 과감함을 보여준다.

씨 팬티의 용도는 다양하다. 레드카펫 행사에서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여배우들에게 필수품으로 종종 등장한다. 허리끈이 있는 ‘티팬티(T-pants)’의 대안으로 매끈한 허리라인을 강조해야할 때 착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사진 유튜브 캡처]

(http://pic.joins.com/photo/article/article.asp?total_id=12296753)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인스닷컴은 허리끈을 아예 없애고 탄성이 있는 와이어를 이용해 엉덩이 사이에 끼워 입는 알파벳 C와 비슷한 형태의 일명 ‘씨 팬티’(C-pants)를 소개하며 해당 동영상과 캡처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또 네이버 자사 뉴스스탠드 난에 “주요 부위 가린...” 무슨 물건?” 제목 아래 상의 탈의한 여성의 사진을 올려놓아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여성의 국부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게재하고 여성의 유두가 그대로 드러난 동영상을 게재하는 것은 선정적인 편집에 해당하며,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03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인스닷컴 발행인 박 상 순

〈주문〉

조인스닷컴 2013년 7월 8일자 「‘그만 만져!’ 축제 중 흥분男들 스킨십에 ...」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조인스닷컴은 포토뉴스 난에 스페인 산페르민 축제에서 남성들이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였다.

http://pic.joins.com/photogallery/photoslide.asp?m_id=357446&preM_ID=359679&w_size=M&tab_id=new_tab&n_pagenum=1&s_speed=5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모자이크 등의 처리 없이 여성의 유두가 드러난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04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주문〉

스포츠동아 2013년 7월 31일자 「대학교내 성행위 일파만파, 대낮 알몸 뒤엎겨 소파에서 ‘아동찍나」」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스포츠동아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대학 내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포착한 사진이 확산돼 충격을 주고 있다.

7월 29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 서울 소재 모 대학 내에서 한 커플이 성행위를 하는 사진이 게재됐다.

이 사진 속엔 사건 장소를 서울 소재 모 대학 법학관 안의 라운지라고 자세히 밝혔으며 사건 시간은 7월 24일 이전 오후 낮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다.

사진엔 한 남녀커플이 옷을 모두 벗고 대낮에 성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은 위층의 공간에서 내려다보며 촬영한 것으로, 남녀가 뒤엉켜 소파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 옆으로 이들이 벗어놓은 옷가지가 널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진엔 남성의 엉덩이 부분과 여성의 다리 부분이 담겼으나 얼굴은 나오지 않았다.

이 사진을 게재한 네티즌은 이 공간이 학교 내에서 재학생들이 과제 해결을 위해 모이는 장소로 쓰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방학 중이라 이용자가 거의 없는 대학교 법학관 내 라운지에서 그들만의 시간을 즐겼다.

대학교 내 성행위 사진에 네티즌들은 “막장 대학생들이네”, “학교에선 이들을 그냥 돌건가요?”, “진짜 낮뜨겁다. 대놓고 야동을 찍네”, “어떻게 저런 공개된 장소에서 성행위를 할 생각을 ... 제정신인가”, “아직 이 학교 학생으로 밝혀진 것도 아닌데 학교 자체를 매도하는건 성급한 것 같다”, “외국인줄 알았더니 한국이었네” 등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뉴스엔』

<http://photo.donga.com/view.php?idxn=201307310019&category=0033&no=1&tag=?%E4%BD%A0%EC%A4%9C%9C%27%2C%20%20%20%20%27%20%20%20%20%27>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동아는 서울 소재 모 대학 내에서 한 커플이 성행위를 하는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신문 '뉴스엔'의 기사를 전재하였다. 그러나 뉴스엔은 해당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한 반면, 스포츠동아는 남녀가 뒤엉켜 소파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는 충격적인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소파에는 이들이 벗어놓은 옷가지와 남성의 엉덩이 부분과 여성의 다리 부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매체들도 이 기사를 게재했으나 해당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하여 성행위 장면을 알아 볼 수 없도록 하였고, 아예 사진을 게재하지 않은 언론사도 상당수였다. 특히 세계닷컴은 기사 게재 후 삭제하였다.

비록 신체 주요 부위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녀가 성행위하는 음란 사진을 모자이크 등의 처리 없이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선정적 편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05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주 문〉

동아닷컴 2013년 7월 22일자 「마일리 사이러스, 쇼핑 중 치마 속 적나라한 노출 … ‘노팬티’ 의혹」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 유〉

1.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마일리 사이러스 (사진=영상/사진제공 -TOPIC / Splash News)

미국의 톱스타 마일리 사이러스가 또 치마 속을 노출하며 화제가 됐다.

미국 연예매체 스플래쉬닷컴은 7월 21일(현지 시간) 팝스타 마일리 사이러스의 치마 속을 촬영한 파파라치 사진을 단독 공개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이날 영국 런던 메이페어에 위치한 샤넬 매장에서 쇼핑을 즐긴 마일리 사이러스는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차량에서 내리던 중 다리 한 쪽을 들어올렸다.

주변에 있던 파파라치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의 플래시를 터뜨

렸다. 이 상황에서 마일리 사이러스의 치마 속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것.

이로 인해 마일리 사이러스는 또 한번 노출 사진을 온 천하에 공개하게 됐다. 마일리 사이러스는 이전에도 파파라치들에 의해 치마 속이 종종 노출된 경험에 있다.

한편 마일리 사이러스는 올해 남성잡지 맥심이 선정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여성' 1위에 오른 바 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http://photo.donga.com/view.php?idxno=201307220004&category=0006>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동아닷컴은 팝스타 마일리 사이러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진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하여 게재하였다.

비록 모자이크 처리했다하더라도 노팬티 차림의 여성 국부를 충분히 가리지 않은 것은 오히려 성적 호기심을 강화할 우려가 있고,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06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서울닷컴 발행인 김 상 규

〈주문〉

스포츠서울닷컴 2013년 7월 30일자 「화나면 옷 벗어?」…中 커플, 거리에서 나체 말다툼 '경악'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서울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스포츠서울닷컴 | e뉴스팀』 중국의 한 커플이 거리 한복판에서 알몸으로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24일(현지시각)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은 “중국 광둥성 둥관의 한 도로 가운데서 젊은 남녀가 옷을 벗으며 싸워 일대 교통이 혼잡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커플은 길가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도로로 이동하며 싸움을 계속했고, 남자가 흥분해 윗옷을 벗자 여자도 옷을 벗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사진 속 여성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도로에 서있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이 커플은 요란한 싸움 뒤 바로 화해해 다정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마지막에 찍힌 사진에서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한 채 거리를 이동하고 있다. 여성은 남자 친구의 셔츠로 몸을 대충 가린 채 걷고 있다.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창피한 줄 모르나?”, “속옷 차림도 아니고 충격이다”, “금방 화해한 것도 신기하다”, “엄청난 다혈질 커플인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광둥성의 한 커플이 길거리에서 알몸 싸움을 벌여 관심을 끌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콘텐츠운영팀 sseoul@media.sportsseoul.com』

<<http://news.sportsseoul.com/read/life/1216421.htm>>

2. 위 사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서울닷컴은 중국의 한 커플이 거리 한복판에서 알몸으로 말다툼을 벌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동영상 캡처한 사진 3장을 게재하였다. 근거리에서 촬영한 사진은 여성의 둔부를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원거리에서 잡힌 여성의 둔부는 그대로 두었고, 정면 사진도 국부만 약간 모자이크 처리한 채 게재하였다.

신체 일부를 모자이크 등의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여성의 나체 사진 3장을 게재한 것은 여성을 성상품화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어린이의 건전한 인격 형성과 정서 함양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08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주문〉

동아닷컴 2013 8월 16일자 「러시아 섹시女들, 누드로 제한속도 지키기 캠페인 열!» 제목의 사진 및 동영상 게시물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동아닷컴의 1인 블로거 카테고리 ‘저널로그’에 게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http://blog.donga.com/sjdhksk/archives/52497>>

2. 위 게시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동아닷컴은 자사 사이트에 한 블로거가 러시아 여성들이 토폴리스 차림으로 도로에서 제한속도 지키기 캠페인에 나섰다라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여성의 가슴을 드러낸 모습의 사진과 동영상은 게재하였음에도 모자이크 등의 처리 없이 그대로 두었다.

여성의 유두나 성기 등 은밀한 신체 부위가 드러난 사진을 별도의 처리 없이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어린이 및 청소년층에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정서함양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비록 자사 기자가 작성한 것이 아닌 블로그의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09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주문〉

스포츠동아 2013년 8월 25일자 「총리 딸’ 스테파니 키, 문어를 은밀한 곳에 ... ‘파격’」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동아는 인터넷판 보도에서 다음과 같은 사진을 게재하였다.

『입력 2013-08-25 20:34:56



존 키 뉴질랜드 총리의 딸이 파격적인 사진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25일(현지시간) 존 키 뉴질랜드 총리의 딸인 스테파니 키(20)가 최근 가슴을 드러낸 애로틱한 자기인물 사진을 여러 편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문어로 주요부위만을 가린 ‘nudie 스시’를 표현하는 가하면 체리를 입에 물고 총을 든 포즈도 있다.

스테파니 키는 현재 파리에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오는 9월 8일부터 시작되는 ‘파리 디자인 주간’을 프로모션 하기 위해 자화상 사진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녀의 자화상 사진 가운데 스시를 이용한 작품은 파리 디자인주간 동안 전시될 예정이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빠의 생각이 궁금하다” “넌시랭이 생각나네” “정말 파격적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출처 | 데일리메일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

<<http://sports.donga.com/home/3/all/20130825/57216193/2>>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동아는 뉴질랜드 총리의 딸이자 파리에술학교 학생인 스테파니 키가 ‘파리 디자인 주간’을 홍보하기 위해 자신의 nudie 사진을 찍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사진을 함께 게재하였다.

비록 예술을 전공하는 학생이 시도한 전위적인 작품이라 하더라도 팬티만 걸친 채 체리를 입에 물고 장난감 권총으로 자신의 머리를 겨누는 모습과 문어로 자신의 성기를 가린 채 전라 상태로 누운 모습을 담은 사진은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혐오감마저 주고 있다. 가슴을 모자이크 처리했다고는 하나 전체 이미지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어린이 및 청소년층에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정서함양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16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인스닷컴 발행인 박 상 순

〈주문〉

조인스닷컴 2013년 9월 5일자 「[사진] 반라의 女權투사들 베니스영화제 등장」 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조인스닷컴이 게재한 위 적시 사진은 다음과 같다.

『[사진] 반라의 女權투사들 베니스영화제 등장

[뉴스1] 입력 2013.09.05 12:09 / 수정 2013.09.05 13:51



영화감독 키티 그린(오른쪽 2번째)이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고 있는 제70회베니스영화제에서 우크라이나출신으로 구성된 여성운동단

체 페멘(Femen) 회원 인나 세브첸코(왼쪽 4번째), 사샤 세브첸코(오른쪽) 등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반라의 페멘 회원들은 비경쟁부문 출판작 ‘우크라이나는 갈보집이 아니다’라는 작품 소개시간에 이러한 퍼포먼스를 벌였는데 드레스 차림의 키티 그린 감독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페멘은 가슴을 드러내는 돌발시위로 유명한 여성운동그룹이다.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joongang.joins.com/article/642/12530642.html?ctg=1306&cloc=joongang|article|hotclick>>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인스닷컴은 여성운동가단체 페멘 회원들이 베니스영화제에서 벌인 누드 퍼포먼스 사진을 모자이크 등의 처리 없이 그대로 게재하였다.

우크라이나 출신인 이 단체 회원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소재로 한 비경쟁부문 출판작 ‘우크라이나는 갈보집이 아니다’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소개시간에 이러한 토플리스 차림의 퍼포먼스를 벌인 것은 그 목적성이 뚜렷해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선정성과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런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여성의 유두가 드러난 사진을 별도의 처리 없이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어린이 및 청소년층에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정서함양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도 행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 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18 신문윤리강령 위반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경문

〈주문〉

일간스포츠 2013년 9월 11일자 「미란다 커, 또 가슴 노출 사고 … ‘너무 잦은데?’」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일간스포츠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미란다 커, 또 가슴 노출 사고 … ‘너무 잦은데?’』

[스타데일리뉴스] 입력 2013.09.11 06:09

국내 주요 포털 검색어 1위, 인기 유감없이 과시



출처: 스플래시뉴스 캡처

[스타데일리뉴스=이○○ 기자] 미란다 커의 가슴 노출 사고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그녀의 과거 사진들까지 함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톱 모델인 미란다 커는 지난 금요일 미국 뉴욕의 플로렌스 골드 홀에서 열린 영화 ‘마드모아젤 C’ 프리미어 시사회에서 가슴 노출 사고를 겪었다.

이를 공개한 미국의 연예매체인 스플래시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돌체 앤 가

바나의 검정 시스루 드레스를 입은 미란다 커가 머리 정리를 위해 팔을 들어올린 순간 드레스 케이프가 함께 올라가 가슴이 노출됐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이번 가슴 노출 사고에 대해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미란다 커는 지난 5월 미국 마이애미 해변에서 화보 촬영 도중 역시 가슴 노출 사고를 겪기도 했다.

한편 미란다 커는 내내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이번 노출 사건을 비롯한 미란다 커에 대한 국내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스타데일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Lid=12578913>〉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일간스포츠는 배우 미란다 커가 한 영화 시사회에서 가슴노출 사고를 겪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유두 부위가 보이는 사진을 게재한 ‘스타데일리뉴스’의 기사를 전재하였다.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는 하나 충분히 가리지 않아 여성의 유방의 전체적인 모습과 유륜(乳輪)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어린이 및 청소년층에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정서함양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위 사진을 보도한 다른 매체의 경우 유두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색을 덧입혀 식별할 수 없도록 하였다.

특히 위 사진은 연예전문보도매체 ‘스플래시 뉴스’에 저작권이 있는 것으로, 국내 언론에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캡처해 사용하는 것은 관련법률에도 위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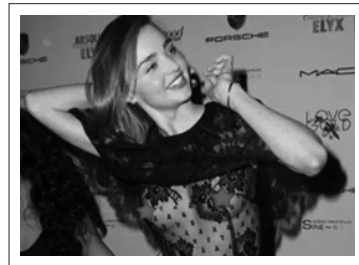
비록 타사 기사를 전재했다 하더라도 게시에 대한 책임은 해당 언론사에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8조 「출판물의 전재와 인용」 ④(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http://www.dailymail.co.uk/tvshowbiz/article-2415773/Miranda-Kerr-ensures-eyes-US-Open-goes-bra-skimpy-black-top.html?ito=feeds-newsx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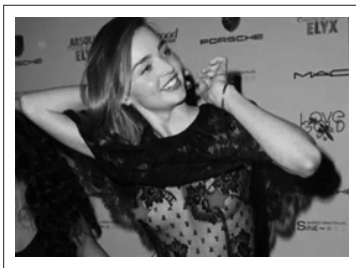
■ 참고 : 다른 언론사의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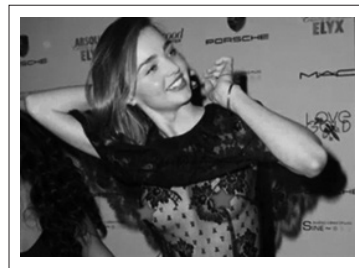
스포츠서울



스포츠동아



매경닷컴



한국경제TV

▲ 2013-2019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인스닷컴 발행인 박 상 순

<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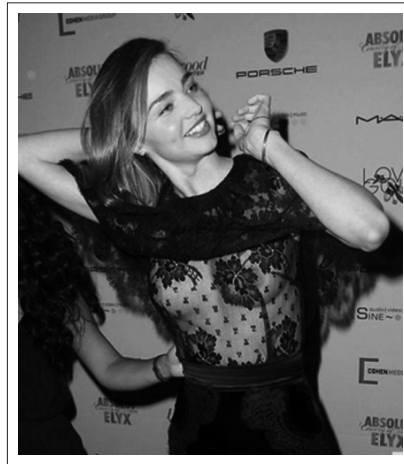
조인스닷컴 2013년 9월 29일자 「[사진] 미란다 커, 가슴노출 “이런 일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조인스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사진] 미란다 커, 가슴노출 “이런 일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3.09.29 14:27 / 수정 2013.09.29 14:29



호주출신 톱모델 미란다 커(30)의 가슴노출 관련 영상이 최근 유튜브에 올라왔다.

커는 최근 미국에서 열린 영화 ‘마드모아젤 C(Mademoiselle C)’ 프리미어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다 가슴이 노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이날 커는 블랙 시스루 드레스를 입어 관능미를 과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커가 머리를 쓸어 올리자 검은 레이스가 같이 올라가면서 가슴 부위가 모두 드러났다.

파비앙 콩스탕트 감독의 ‘마드모아젤 C’는 패션 거장 칼 라커펠드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로, 칼 라커펠드, 톰 포트 등 패션계 유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사진 유튜브 캡처]

<<http://joongang.joins.com/article/005/12716005.html?ctg=>>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인스닷컴은 배우 미란다 커가 한 영화 시사회에서 가슴노출 사고를 겪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동영상에서 캡처한 유두 부위가 보이는 여러장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일부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위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유방의 전체적인 모습과 유륜(乳輪)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어린이 및 청소년층에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건전한 정서함양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20 신문윤리강령 위반
조인스닷컴 발행인 박 상 순

〈주문〉

조인스닷컴 2013년 9월 13일자 「[사진] '1만원 내고 가슴 만지고 가세요~' 日 이색 기부 日이색기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조인스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일본에서 돈을 기부하면 여성의 가슴을 만지게 하는 모금행사 영상이 최근 유튜브에 올라왔다.

일본의 성인방송 '파라다이스 TV'는 최근 '스톱 에이즈'라는 모금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에이즈를 예방 및 치료 기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주최측은 이틀간 열린 행사에 약 4500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약 1000엔(약 1만4400원)을 기부하면 행사 현장에서 여배우들의 가슴을 만질 수 있다. 여배우들은 속옷을 입지 않고 티셔츠 차림으로 행사장에 일렬로 서서 기부자들을 맞이했다. 행사 주최 측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참가할 수 없고, 위생을 위해 손을 깨끗이 소독하도록 했다.

파라다이스 TV 측은 "4690명이 참가해 기부금 420만4836엔(약 6100만원)이 모였다"며 "모금액 전부를 공익재단법인 에이즈예방재단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사진 유튜브 캡처]

<http://pic.joins.com/photo/article/article.asp?total_id=12601298>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인스닷컴은 일본에서 에이즈 예방 및 치료 목적의 기금 마련을 위해 한 성인 방송에서 소액의 기부금을 내면 여성의 가슴을 만질 수 있도록 한 이벤트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동영상을 캡처한 여러장의 사진을 게재하였다. 위 행사는 겉으로는 에이즈 모금을 목적으로 열렸지만, 성인TV방송이 주최했고 발상이 매우 선정적이고 자극적이어서 당초부터 대중의 성적 호기심을 끌어모으기 위해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이벤트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돈을 내고 여성의 가슴을 만질 수 있게 한 행사의 사진을 보도한 것은 비록 일부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하더라도 여성을 성성품화하고 있다고 인상을 주고 있다.

또 이같은 보도는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일반적인 사회 정서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 및 청소년층에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

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30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주문〉

동아닷컴 2013년 11월 5일자 「하버드 학생들이 한밤중 누드로 뛰는게 전통? [19금]」 제목의 블로그(저널로그)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동아닷컴 블로그(저널로그)에 게재된 위 적시 기사는 다음과 같다.

『하버드 학생들이 한밤중 누드로 뛰는게 전통? [19금]

11 5th, 2013 @ 02:03 pm > 사막의향기

하버드 대학 투어 가이드를 해준 리즈 라는 학생으로 부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생들이 일년에 두번, 누드로 스트리킹을 한다고 하네요. (중간생략)



12월 중순 학기말 시험이 시작되기 전날 밤 옷을 벗어던지고 누드로 학교

광장을 뛰고 있는 하버드대학생들.

보스톤의 12월은 매우 쌀쌀하지만 매년 100~200명 정도가 한밤중 알몸 질주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원초적 비명 질주에 참가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남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용감한 여학생들이 매년 참가해 남학생들과 길 옆에서 응원하는 동료 학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고.



학교 당국도 학생들 스트리킹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고 학생들의 자유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주고 있다는군요.

일년에 두 번, 학기말 시험 전날밤 스트레스에 쌓인 학생들이 한밤중 알몸으로 몇 십분 뛰어 다닌다고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한 듯 합니다. (이하 생략)

동아일보 저널로그 - 사막의향기

<http://blog.donga.com/jonk78/archives/16285>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동아닷컴 블로그의 위 기사는 하버드 대학생의 누드달리기 행사를 소개하면서 남녀학생들의 성기와 여성의 가슴 등 전라의 모습이 드러난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학기말 시험이 끝난 뒤 중압감을 떨쳐내기 위해 한 밤중에 벌거벗은 채달린다는 대학생의 생기발랄한 모습이 외설적이고, 퇴폐적인 느낌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기와 음모까지 확연하게 드러난 사진을 어린이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신문에 모자이크 등의 처리 없이 실는 것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36 신문윤리강령 위반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주문〉

머니투데이 2013년 11월 12일자 「스트립쇼보면서 성매매 하더니…」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스트립쇼 보면서 성매매 하더니…

경찰, 신변종 업소 업주 등 무더기 검거

머니투데이 오○○ 기자 입력 : 2013.11.12 12:00|조회 : 7677

스트립쇼를 보면서 유사성교행위와 성매매를 하는 신변중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중앙 무대와 밀실을 설치하고 밀실 내 유리창을 통해 스트립쇼를 보면서 동시에 성매매(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업주 오모씨(32)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12일 구속했다. 스트립쇼를 벌인 박모씨(22·여)와 성매매를 한 김모씨(31·여), 성매매남 오모씨(45), 종업원 홍모씨(26) 등 20여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자료/서울지방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업주 오씨 등은 지난 8월5일·6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마포구 서교동(홍대입구)에 있는 건물을 빌려 중앙무대와 밀실을 설치하고 밀실 내에서 스트립쇼를 보게 하면서 동시에 성매매(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오씨는 3월1일부터 8월초까지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건물 지하1층을 빌려 출입문 오른쪽에 중앙 무대를 만들고, 무대를 기준으로 ‘ㄷ’자 형태로 밀실 8개를 만들었다. 성매수남들은 밀실마다 사각형 모양의 창과 쇠창살이 설치된 중앙무대에서 이뤄지는 스트립쇼(15분가량)를 관람하면서 밀실에서 성매매(유사성교행위)를 한 혐의다. 홍대 인근에 있는 업소에서는 건물 4층 전체를 임차해 업소 중앙에 작은 무대 1개와 큰 무대 1개를 설치한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됐다. 작은 무대를 기준으로 ‘ㄱ’자 형태로 밀실 5개를 만들고 큰 무대를 기준으로 ‘ㄴ’자 형태로 밀실 6개를 제작해 잠실동 소재 업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업소 광고는 인터넷 등에 업소명을 A·A-1, B·B-1 등으로 바꿔가면서 홍보를 해왔고, 종업원 및 스트립걸, 성매매녀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소개를 받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스트립쇼를 보면서 성매매(유사성교행위)를 할 경우에는

1회당 8만9,000원을 받았고, 성매매(유사성교행위)만 할 경우에는 1회당 3만 9000원을 받았다”며 “스트립쇼는 무대에서 스트립걸이 속옷 차림으로 춤을 추다 손님이 밀실 유리창을 통해 팁을 주면 옷을 벗고 음부를 드러낸 채 자위행위를 연상케하는 춤을 추면서 성매수남들을 흥분시켰다”고 설명했다. 성매수남이 스트립쇼를 보고 흥분할 즈음 성매매 여성이 밀실로 들어가 남자 손님과 성매매(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서울지방경찰청

업주 오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CCTV와 철문을 설치하고 업소 밖에 문지기(일명 ‘문방’)를 세워 무전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단속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단속시 성매매 수익금이 압수당할 것을 우려, 5명 정도의 손님을 받고 성매매 수익금이 모아지면 업소 옆에 주차된 차량에 영업장부와 성매매 수익금을 옮겨 보관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서울경찰청은 2014년 1월까지 풍속업소(대형 성매매업소, 사행성 게임장 등) 특별 단속 계획을 수립해 광역단속수사팀, 경찰관기동대 및 합동 단속반 편성 등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11208404332393&outlink=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스트립쇼를 보면서 유사성교행위와 성매매를 하는 신변종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을 다루고 있다. 유럽 일부 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피쇼(PeepShow)와 성매매가 결합한 형태의 변태 성매매업소의 현장을 적발한 경찰발표를 인용하면서 무대 구성 및 형태, 이용 가격, 업소 홍보 기법, 여종업원 조달방법, 고객의 성매수까지의 과정 등을 지나치게 자세히 소개하였다. 특히 “팁구멍에 팁주시면 이쁜 언니들이 가까이 께아아악”, “팁 구멍에 팁을 넣어 보세요. 눈앞에서 환상의 쇼가 펼쳐집니다”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관음증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투명창과 팁구멍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였다.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불법 성매매업소의 세태를 고발하고 경종을 울리기 위해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했다는 기사의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기술과정에서 단속후 대처요령 등 자세한 범죄수법과 자극적인 내용을 여과없이 소개한 것은 청소년층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38 신문윤리강령 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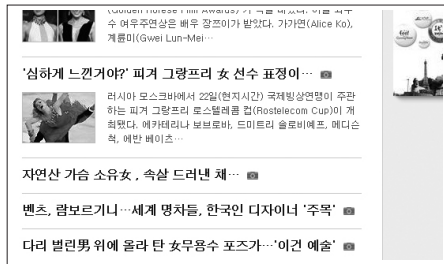
조인스닷컴 발행인 박 상 순

〈주문〉

조인스닷컴 2013년 11월 25일자(캡처시각) 「심하게 느낀거야? 피겨 그랑프리 女 선수 표정이…」, 「피겨 그랑프리 ‘심하게 느끼고 있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조인스닷컴이 게재한 위 적시 기사는 다음과 같다.



<11. 25 11:28 캡처시각>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2일(현지시간) 국제빙상연맹이 주관하는 피겨 그랑프리 로스텔레콤 컵(Rostelecom Cup)이 개최됐다. 에카테리나 보브로바, 드미트리 솔로비예프, 메디슨 척, 에반 베이츠, 카롤리나 코스트너, 올리아 리프니츠카야 등 참가 선수들이 연기하고 있다. [AP=뉴시스, 로이터=뉴스1]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조인스닷컴은 모스크바에서 열린 피겨 그랑프리 혼성경기 사진을 보도하면서 여자선수의 표정연기에 대해 마치 성적인 암시를 주는 듯한 「심하게 느낀거야? 피겨 그랑프리 女 선수 표정이...」, 「피겨 그랑프리 '심하게 느끼고 있어...」라고 제목을 달았다. 남자 선수의 어깨 위에 몸을 의지한 채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남자선수의 한 손만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놓고 성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보도자세라고 본다. 설령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조인스닷컴은 위 기사 보도시점인 11월 25일, 이외에도 연극 리허설 장면 사진에 대해 「다리 벌린 男배우 위에 올라탄 女무용수 포즈가 ... ‘이건 예술’」, 다른 사진에 대해서도 「자연산 가슴 소유女, 속살 드러낸 채 ...」 등 선정적인 제목을 달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3040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주문〉

동아닷컴 2012년 6월 5일자 「日서 인육 파티, 자신의 성기로 요리 제공한 엽기청년 왜?」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유〉

1. 동아닷컴 자사 사이트 저널로그에 게재된 위 적시 기사는 다음과 같다.

日서 인육 파티, 자신의 성기로 요리 제공한 엽기청년 왜!

by 정승환 on 2012-06-05 in 시사잡플 잡다구리

<p style="text-align: center;">크리미의원 논현점</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서울 논현동 위치, 지방총입 지방이식, 중부한시술경험</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x-small;">http://www.drllac.co.kr</p>	<p style="font-size: x-small;"> ④ 포털매트 가락플랫 가락재깁, 인공안 쇠사운비(소사지, 어락, 갈라 영거상용 후기, 최담20100101, http://www.jobsternart.com </p> <p style="font-size: x-small;"> 홈플러스 동원점 중앙문물 석방가라, 5중 주문중점, 카드 추가발안, 동원, 당일배출, http://www.homeplus.co.kr </p> <p style="font-size: x-small;"> 홈플러스 동원점 홈플러스, 중부지역특기, 김치전, 스텔, 열풍조일 최대20%, 1만원이상 무료배송, www.jobsternart.co.kr </p> <p style="text-align: right; font-size: x-small;">reocdis</p>
---	---

2일 전, 알론이 이 기사의 자료를 선네수였을 때 거부했었다.
 너무 충격적이고 혐기적인 사진 기사였기 때문이었다.

어지간한 알기 포스트 글은 산 크게 불려왔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사진별 불리했다가 역겨워 토하는 글 달았다.
 그래서 해당 사진자료에 대해서는 신상봉 끄고 있었는데 5일 포털 메인 뉴스를 보니 이 기사가 불리본 게 아닌가.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일본의 한 요리사가 자신의 성기와 고환을 제거한 후 이를 요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사진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요리를 위해 수술로 절제한 성기를 담은 비닐의 피묻은 장면과 성기를 자르는 모습 등 일반인의 정서에 반하는 충격적인 사진을 모자이크 등의 처리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독자에게 혐오감을 줄 우려가 있다. 비록 위 기사가 블로거가 작성한 것으로, 1년여 전 게재됐다 하더라도 청소년 유해물로 판단되는 게시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언론의 자세가 아니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03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경닷컴 발행인 윤 형 식

〈주문〉

매경닷컴 2013년 12월 8일자 「미모의 북한여성, 해외식당서 한국인만 보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매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미모의 북한여성, 해외 식당서 한국인만 보면 ... 경악

기사입력 2013.12.08 09:45:40 | 최종수정 2013.12.08 09:47:41

실각한 장성택은 외화벌이 등 주로 경제 부문을 관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한으로 소환한 장성택의 측근들도 자금 관리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외화벌이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8일 MBN에 따르면 북한이 해외에서 운영 중인 110여 개 북한식당은 ‘통치 자금 마련’과 ‘대남 정보 수집 창구’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음식점은 한국인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정부 관계자는 “수익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금고인 39호실로 흘러들어간다”고 밝혔다.

해외 식당운영을 통해 북한은 연간 1000만 달러, 우리 돈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분명한 것은 리용하 장수길이 공개 처형됐고, 측근 비리, 주로 금전 문제일 것이다. 예를 들면 외화 횡령 등을 들 수 있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외교관들에게도 다량의 현금이나 마약을 운반하게 하며 외화벌이를 강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북한의 고위급 외교관이 외화벌이 할당량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나라로 망명하기도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250624>>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실각한 장성택과 관련,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을 소개하면서 해외에서 운영 중인 110여개 북한식당에서 연간 1,0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고 있

다고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국내와 관련된 내용으로 ▲북한 음식점은 한국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북한 외교관이 외화벌이 할당량에 압박을 받아 한국에 망명했다고 언급했을 뿐인데, 제목은 「미모의 북한여성, 해외식당서 한국인만 보면…」이라고 달았다. 제목을 설명하는 내용은 한 군데도 없다.

북한식당에 여종업원이 근무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근거로 ‘미모의 북한여성’이니, ‘한국인만 보면…」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불필요하게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기사는 내용을 과장하고 왜곡했을 뿐 아니라 여성을 비하하고 성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강조한 측면이 있어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손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 「편집지침」 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회부한다.

▲ 2014-300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스포츠조선 발행인 방 준 식
2. 스포츠월드 발행인 조 한 규

〈주문〉

스포츠조선 2014년 1월 13일자 「간통적발’ 추정 동영상 인터넷 유출 논란」 제목의 기사, 스포츠월드 1월 14일자 「간통현장 급습’ 영상 유포 논란, 알몸 여성 머리채 잡고… ‘충격」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스포츠조선과 스포츠월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스포츠조선)= 『‘간통적발’ 추정 동영상 인터넷 유출 논란

기사입력 | 2014-01-13 11:26:12



경찰과 함께 간통 현장을 적발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돼 13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유명 사이트에 올라온 해당 동영상에는 경찰이 한 모텔방에 들이닥치자 침대 위 남녀가 당황해 하는 모습과 함께 경찰과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여성이 욕설을 퍼부으며 침대에 있는 여성의 머리를 붙잡아 흔드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침대 위 알몸 상태인 남녀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얼굴과 이름이 그대로 노출됐다.

지난 9일 올라온 이 동영상은 나흘 만에 조회수 14만여건을 넘겼고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동영상은 경찰이 아닌 현장에 동행한 제3자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영상을 공개한 사람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의 신상을 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라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nomad@yna.co.kr <연합뉴스>』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40113000000000007278&ServiceDate=20140113>>

(스포츠월드)= 『‘간통현장 급습’ 영상 유포 논란, 알몸 여성 머리채 잡고…
‘충격’

입력 2014.01.14 16:01:12, 수정 2014.01.14 16:01:12



간통 현장을 경찰과 함께 급습해 적발한 현장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은 온라인상에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해당 동영상에는 경찰이 한 모텔 방에 들이닥치자 침대 위 남녀가 당황해 하는 모습과 함께 경찰과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여성이 욕설을 퍼부으며 침대에 있는 여성의 머리를 붙잡아 흔드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침대 위 알몸 상태인 남녀가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에서 얼굴과 이름이 그대로 노출돼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9일 올라온 이 동영상은 나흘 만에 조회수 14만여건을 넘겼고 SNS와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기 때문.

동영상은 경찰이 아닌 현장에 동행한 제3자가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동영상을 공개한 사람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동영상의 유포에 대해 “당사자의 신상을 알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라면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 뉴스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http://www.sportsworldi.com/Articles/SWIssue/Article.asp?aid=20140114023528&subctg1=10&subctg2=00&OutUrl=naver>>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경찰이 간통현장을 적발한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해당 동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게재하였다.

비록 해당 사진을 흐릿하게 처리해 누구인지 육안으로 쉽게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녀가 벌거벗은 채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불륜 현장을 그대로 노출한 것은 바람직한 보도자세가 아니다. 해당 남성은 얼굴 형체는 물론 머리스타일까지 드러나 그를 아는 주변 인물에게 신원이 노출될 위험도 있어 보인다.

특히 스포츠월드는 첫 보도시에는 상반신 전체를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하루가 지난 뒤 같은 내용에 두 문장을 추가하고 노출 수위가 한층 높은 사진으로 교체했다.

위 보도를 처음 내보낸 YTN을 비롯해 대다수의 매체들은 해당 동영상 및 캡처사진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자이크 처리해 선정성을 완화했다.

따라서 지나친 불륜 현장을 노출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대중의 일반적 정서에 반하거나와 어린이를 포함해 광범위한 독자층을 갖고 있는 언론매체로서 삼가야 하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12 신문윤리강령 위반

동아닷컴 발행인 김 일 흥

〈주문〉

동아닷컴 2014년 1월 17일자 「빌딩 전망대서 누드 촬영 ... 12억 원 소송당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빌딩 전망대에서 누드 촬영 ... 12억 원 소송당해

입력 2014-01-17 14:35:28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에서 누드 사진을 찍은 유명사진 작가가 수십억 대 고소를 당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14일(현지시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소유주가 전망대에서 여성 모델의 상반신 누드를 촬영한 사진작가 알렌 헨슨에 대해 110만 달러(약 12억 원)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빌딩 측은 “작가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일에 대해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또 “누드 촬영은 안전하고 가족 친화적인 세계 관광명소인 빌딩의 명성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헨슨은 “상업적 유포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 Allen Henson/Splash News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



〈<http://sports.donga.com/3/all/20140117/60232551/2>〉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빌딩에서 여성 모델의 누드 사진을 찍은 유명사진 작가가 건물주로부터 사진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현장사진 2장을 게재하였다.

게재한 사진은 눈발이 날리는 순간에 촬영돼 아주 선명하지는 않지만 여성의 가슴은 물론 유두까지 드러나 있다. 반면 같은 사진을 보도한 국내외 대부분 매체들은 가슴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해 선정성을 다소 완화하였다.

유두가 보이는 여성의 상반신을 게재하는 것은 어린이 및 청소년층의 정서를 해치고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 「어린이 보호」 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3013 신문윤리강령 위반
 환경닷컴 발행인 항 재 활

〈주문〉

환경닷컴 2014년 1월 21일자(캡처시각) 「女 “사장이 사무실서 옷 벗기더니…” 경악」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환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 21 15:38 캡처>

『[金과장 & 이대리] "상사보다 더 무서워" ... 담배 끊게 만든 동장군, 사무실 온도 18℃ ... 키보드 치는 손가락이 '오덜덜'』

입력 2014-01-20 20:55:46 수정 2014-01-21 10:58:47 지면정보 2014-01-21 A27면

김과장&이대리가 혹독한 겨울 나는 법

대기업 A사에 근무하는 강 대리는 새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했다. 그는 10년이 넘도록 하루에 한 갑 이상 피워온 ‘골초’. 그동안 수십 차례나 담배를 끊어보겠다고 굳게 다짐했지만 매번 니코틴의 유혹을 떨쳐 버리지 못했다. 그런 그가 금연하게 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이유 때문이었다. 바로 뺏속까지 스며드는 혹독한 추위다.

강 대리가 일하는 A사는 작년 11월 임직원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사내 흡연장을 폐쇄했다. 애연가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조치였다. 회사 안에 부품공장이 자리잡고 있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려면 공장을 가로질러 15분가량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왕복 30분은 죽히 걸린다. 시간 낭비와 상사들의 눈총도 그렇지만 더 ‘치명적인’ 것은 추위였다. “영하 10도의 강추위에 담배를 피우려 30분을 오가는 것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모를 겁니다. 살을 에는 듯한 추위에 굴복해 결국 담배를 끊게 됐습니다.”

20일은 24절기 가운데 가장 춥다는 대한(大寒). 겨울이 지나 가려면 아직도 한 달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우리의 김과장 이대리들은 춥고 긴 겨울을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추위도 서러운데 내복 검사하겠다는 사장님

사장님이 내일부터 내복검사 하신대요

경기 파주에 있는 중소기업 B사의 김 대리(28·여)는 얼마 전 사장님의 ‘폭탄 발언’에 격분했다. 그의 사무실은 북향인 데다 난방시설이 잘 돼 있지 않아 겨울철에는 한낮에도 찬 기운이 스며든다.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김 대리는 올 겨울 들어 전기난로를 장만해 켜놓고 일을 했다.

문제는 전기요금의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것. 사장은 갑자기 ‘전기로 폭탄’을 맞자 특단의 조치로 ‘불시 검문’을 하기 시작했다. 1주일에 3번가량 불시에 사무실을 둘러보며 난로를 켜 직원들을 체크하는 것이다. 처음엔 “날도 별로 안 추운데 왜 난로를 켜고 있느냐”고 부드럽게 한 마디 던지더니 한 달이 지나자 “개별적으로 난로를 켜지 말고 두세 사람꼴로 하나씩만 켜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추위에 약한 김 대리는 이런 지시를 어겼다가 사장에게 걸렸다. 다른 직원들이 작은 난로를 발 밑에 켜놓은 것과 달리 김 대리의 난로는 유난히 커서 눈에 잘 띄는 것이 화근이었다. “김 대리,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못알아듣겠어? 사무실 사람들 다 추운데 혼자만 난로를 켜면 되겠어.” 사장의 목소리에 짜증과 불만이 가득 묻어났다.

김 대리가 “원래 추위를 잘 탄다”고 대꾸하자 성질 급한 사장은 ‘폭발’해 버렸다. “그럼 내복을 입고 다니면 되겠네요. 앞으로는 내복 검사를 하겠어요.” 순간 사무실 분위기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간 듯 싸늘해졌다. “아무리 농담이라도 여직원의 내복을 검사하겠다는 것은 언어 성희롱 아닌가요. 회사를 때려치우더라도 사과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참아야 하는 신세가 억울하네요.”

◆“최소한 일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서울의 한 구청에서 주무관으로 일하는 조모씨에게 가장 싫은 계절은 단연 겨울이다. 몸에 붙은 지방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강마른 체구 탓인지 겨울만 되면 맥을 못춘다. 이런 그에게 한겨울의 추운 사무실은 견디기 힘든 공간이다.

더구나 공공기관은 정부 지침에 따라 겨울철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맞춰야 한다. 말이 18도지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에서 중앙난방 시스템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벌어진 창문 틈 사이로 찬바람이 솔솔 들어와 체감온도를 실제 온도보다 한참 밑으로 떨어뜨린다. 컴퓨터 키보드를 치는 손가락이 굳어 입으로 호호 불어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날이 적지 않다. 전기요금 때문에 개별 난로를 장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세금을 아끼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최소한 일은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몸보다 마음의 추위가 더 심해

혹한의 겨울철에 마음까지 얼어붙는 직장인도 적지 않다. 대기업 C사에 근무하는 신 부장은 지금까지 50년을 살아오면서 이번처럼 겨울이 춥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20여년 동안 정들었던 회사를 다음달 그만둬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별’로 통하는 임원이 되겠다는 목표 하나로 달려 왔지만 최근 4년 동안 승진 인사에서 연달아 미끄러진 탓에 결국 팀장의 명예퇴직 요청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는 같은 업종의 중견기업으로 이직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갈 곳을 정하지는 못했다. 몇 차례 면접을 보기도 했지만 연락이 온 곳은 없다. 통상 연말 임원 승진 인사가 끝나고 연초가 되면 이직하려는 고참 부장급 직장인이 적지 않다는 헤드헌팅업체 관계자의 얘기를 들으니 날씨가 더욱 춥게 느껴진다. 결혼을 늦게 하는 바람에 아직 두 아들은 돈이 가장 많이 든다는 고등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이다. “얼마 전 면접을 마친 뒤 지하철역으로 걸어 가는데 유독 춥더군요. 자식들 생각에 먹고 살 걱정까지 들어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친 없는 겨울 … 견디기 힘든 고통

크리스마스때 이별통보 … 옆구리 시린 게 더 추워

대기업 유통 계열사에 다니는 문 대리는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2년간 사귀어 여자친구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다. 여자친구는 옆팀 직원으로 둘은 사내에 소문이 난 커플이었던 만큼 충격은 더 컸다.

최근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로 데이트 약속을 여러 번 깬 데다 여자친구에게 신경을 거의 쓰지 못한 게 문제였다. 문 대리는 무릎까지 꿇어가며 애원했지만 한 번 등을 돌린 여심은 돌아오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강추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친과 데이트를 즐겼겠지만 이별 이후 문 대리는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 이별의 아픔은 그렇다 치더라도 추운 날씨에 꼭 껴안고 다니는 커플들의 애정행각을 보면 온몸이 더욱 으스스해지기 때문이다. “여친 없이 겨울을 나는 게 이렇게 혹독하고 추운지 몰랐습니다. 집에만 있다 보니 기분마저 우울해지네요.”

강○○/전○○/황○○ 기자 kkm1026@hankyung.com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12059521&nv=3&nv=3&nv=3&nv=3&nv=3&nv=3&nv=3&nv=3&nv=3&nv=3>>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직장인의 애환을 소개하는 기획물의 하나로, 회사측의 난방비 절감 방침 때문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직장인의 애환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전열기를 사용하고 있는 직원을 본 사장이 추우면 내복을 입으라면서 앞으로 내복검사를 하겠다고만 말했을 뿐인데, 제목은 「女 “사장이 사무실서 옷 벗기더니...” 경악」이라고 달았다. 이는 기사내용을 과장·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사장이 마치 여직원에게 성추행이라도 한 듯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사의 내용과 동떨어진 제목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유도하는 것은 신문윤리강령 제3조 「보도준칙」 ③(선정보도의 금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편집지침」 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답변의 기회

▲ 2013-1168 신문윤리강령 위반

세계일보 발행인 김 병 수

〈주문〉

세계일보 2013년 6월 6일자 1면 「공연시설 빌릴 때 공무원들 ‘갑질’/K-팝의 나라 창피한 현실/티켓 상납 공공연한 비밀/상납한 표는 암표상들에/찍히면 불이익 … 항의 못해」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K-팝 열풍의 주역으로 부상한 공연업계가 정작 안방에서는 갑을 관계로 시름하고 있다. 정부는 K-팝 지원에 나섰다 고 자랑하지만 연예·공연 기획사들은 “공연장으로 쓰이는 체육시설을 빌릴 때마다 철저히 에워싸고 있다”며 관련 기관의 횡포를 토로했다.

5일 공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올림픽체조경기장을 이용한 A기획사는 시설 측에 200여장의 티켓을 상납했다. 10만원씩 계산하면 2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A기획사 관계자는 “티켓 상납은 이번 한 차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왔던 나쁜 관행”이라며 “이러한 상납 없이는 대관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K-팝 가수의 공연을 개최했던 B기획사 역시 “그간 체육시설 측에 매년 수백 장의 티켓을 바쳤다. ‘떡값’ 명목으로 거둬간 것인데 공무원들이 이래도 되느냐”며 “상납한 표로 인해 암표 시장이 기승을 부린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인기 가수의 대규모 공연이 열릴 때면 시설 인근에 서성대는 암표 상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티켓 요구, 술 접대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반말을 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티켓 상납과

접대는 갑을 관계에서 발생한 해묵은 폐단이지만 그간 공연업계는 대관 거부 등 불이익을 걱정하며 그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

이들은 체육시설의 관리 주체가 정부 기관이라는 점과 모호하게 규정된 대관 기준을, 시설 측이 갑 행세를 하는 근거로 꼽았다. 공연 기획사를 고객으로 생각하는 민간 극장과 달리 체육시설 측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설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대관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다. 대안으로 찾을 수 있는 공간도 전혀 없다. C기획사 관계자는 “K-팝 공연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시설 대관을 둘러싼 공연 시스템은 후진국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모호한 대관 기준도 기획사가 눈치를 보는 주요한 이유다. 각 체육시설은 대관 규약에 주요 공연 요소를 ‘사전 협의로 결정한다’고 적어놓고 있다. 공연계 관계자들은 “담당자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사전협의 요소는 관리자가 바뀌면 기준이 달라지고, 친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용인해주면서 나쁜 관행이 생겨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체육시설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실태조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내 시설의 관리감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관했다”며 하급기관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의 위 기사는 연예기획사들이 유명 가수 공연 등을 위해 공공시설인 체육경기장을 빌리려면 공연티켓을 상납하고 접대를 해야 하는 등 공직 신분인 시설 관계자들의 횡포가 심하다는 내용의 고발성 기획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올림픽체조경기장을 이용한 A기획사는 경기장측에 모두 2000만 원 가량의 공연티켓 200여장을 상납했다는 것이다. 비리의 주체를 올림픽체조경기장으로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기사는 『“티켓 상납은 이번 한 차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해왔던 나쁜 관

행”』『“이러한 상납 없이는 대관이 어렵다”』는 A기획사 관계자의 말도 함께 전했다.

사안 자체가 자칫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명으로 지목된 올림픽체조경기장 측의 해명이나 반론이 나올 법한데도 세계일보는 이를 들어 기사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기사는 단지 『“올림픽공원 내 시설의 관리감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관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하는데 그쳤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08 신문윤리강령 위반

全羅日報 발행인 유 춘 택

〈주문〉

全羅日報 2013년 8월 1일자 9면 「야영장 운영 위해 천혜 자연환경 훼손」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全羅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자연을 보호하고 가꾸어 후세에 계승시켜야할 임무를 가진 국립공원측이 오히려 앞장서서 자연을 훼손하고 있어 상급기관인 환경부의 관리감독이 절실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국립공원덕유산관리사무소(소장 정석원)로 야영장의 부족한 물 확보를 위해 지난 26일 천혜의 구천동계곡을 중장비로 파헤쳐 제방을 쌓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자연 파괴행위 모두가 야영

장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행위도 할수있다는 국립공원의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원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치목적은 후대에 길이 보전해야할 소중한 국가 자산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나아가 공원시설의 설치·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목적을 잘못 해석한 듯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이 라는 명목아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마구잡이식 야영장 건립에 앞장서고 있으며 2013년 7월 말 현재 전국 국립공원야영장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특히 덕유산 국립공원의 경우 지리산국립공원 야영장의 두 배가 넘는 1천 7 백동 규모의 야영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전국 국립공원 전체야영장규모보다 큰 것으로 확인 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근 지역의 상인들과 마찰은 불 보듯 뻔한데 최근에는 무주군이 국립공원 상가 내 차도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지역상권들은 다 죽이고 국립공원측의 편리만 제공했다고 구천동관광특구 내 일부 상인들은 주장하고 있다. 덕유산국립공원 야영장의 경우 약 30여 만 평의 면적에 119억 원의 예산이 투입 되었으며 2012년 의 경우 공단전체 야영객 수의 22.8% 인 10만 명이 넘는 야영객이 덕유산야영장을 찾아 규모대비 효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하지만 덕유산국립공원측은 무주태권도원 개원에 따른 국내외 탐방객 증가와 레저트렌드가 야영문화를 선호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덕유산에 풀오피션 캠핑장 조성과 1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세계캠핑캐라바닝연맹(FICC) 국제기준 야영장조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야영객을 위해 계곡을 파괴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자연을 지키고 가꾸어야할 국립공원이 수익사업에 눈이 멀어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하며 상급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http://jeollailbo.com/news/search_view.php?code4=L00111000&An=406749&page=1&mode=detail&search_text>

2. 위 기사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全羅日報의 위 기사는 국립공원덕유산관리사무소가 야영장 운영을 위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불법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성 기사다.

기사는 덕유산 국립공원측이 야영장의 부족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천혜의 구천동계곡을 중장비로 파헤쳐 제방을 쌓았고, 이는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편집자도 작은 제목으로 「국립공원덕유산관리사무소 물 확보 위해 불법 제방 설치」로 달았다.

따라서 기사 내용대로 제방 설치가 불법이라면 이는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불법이라는 기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덕유산 국립공원 측의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함께 소개야 하는데도 全羅日報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기사는 단지 『덕유산에 풀오피션 캠핑장 조성과 1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세계캠핑캐라바닝연맹(FICC) 국제기준 야영장조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덕유산 국립공원측의 야영장 조성사업 계획을 전하는데 그쳤다.

이 같은 제작태도는 보도의 객관성과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56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주문〉

서울경제 2013년 10월 18일자 2면 「지난달 외환위기 급변 상황에 직원 비상 대기 시켜놓고 …/휴양 즐긴 김중수 한은 총재/직무유기·자질 논란」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미국 양적완화 축소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기간 중 강원도의 최고급 콘도에서 휴식을 즐긴 것으로 드러나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경제신문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과 함께 확인한 결과 김 총재는 미 FOMC 회의 기간인 지난달 18일(현지시간) 강원도 홍천의 D리조트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총재가 이 리조트에 머문 기간은 9월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이었으며 숙박 비용은 김 총재 사비로 결제했다. D리조트는 회원가가 1억6,000만원에 달하고 객실 크기가 40~90평에 이르는 VVIP급 리조트다. 이낙연 의원실 관계자는 “김 총재가 FOMC 회의가 열리는 비상상황에 리조트에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으며 실제 콘도에서 김 총재를 봤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 추석 연휴 기간임에도 모든 경제부처와 한은이 미국 양적완화 축소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시점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한은 등은 비상점검회의를 잇따라 열고 외환시장 급변에 대비했으며 한은의 경우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언제든지 출근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당시 미 FOMC는 양적완화 규모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회의 직전까지 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외환정책의 사령관 격인 한은 총재가 FOMC 회의 기간에 강원도 리조트에서 휴식을 즐긴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이낙연 의원은 “대의 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앞둔 시점에 직원들은 비상대기 시켜놓고 리조트로 휴양을 간 것은 기관장의 리더십과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한은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은에서는 김 총재의 직원 비하발언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김 총재는 지난 15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

은에 금융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금융감독 기능은 실력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한은에 감독기능을 주면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 노조는 성명을 내고 "총재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비상식적인 발언"이라며 "직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자신의 인사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은 안팎에서는 내년 4월 임기 만료를 앞둔 총재 후임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정치권과 금융시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스승으로 불리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해 이주열 전 한은 부총재, 정갑영 연세대 총장,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김인준 서울대 교수, 김대식 전 한은 금통위원과 전직 고위 경제관료 2~3명이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1310/e2013101800205570060.htm>>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는 위 기사에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이 양적 완화 축소를 결정할 가능성 때문에 한은 직원들이 비상근무 체제 중이던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강원도 고급 리조트에서 휴식을 즐겼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 총재는 양적 완화 축소 여부를 결정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계속됐던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동안 강원도 홍천의 D리조트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추석연휴 기간이었지만 모든 경제부처와 한은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를 실시 중이었고, 특히 한은은 관련 부서 직원들에게 언제라도 출근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고 기사는 전했다.

사안 자체가 김 총재의 사생활과 직결됐기 때문에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크다고 여겨지지만 서울경제는 이를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

위 기사가 보도된 후 김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휴가를 간 것도 아니고, 서울과 근거리에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대응이 가능했다"고 답변했다.

위 기사처럼 비난의 당사자에게 해명과 답변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4-1085 신문윤리강령 위반
대구신문 발행인 최 재 왕**

〈주문〉

대구신문 2014년 3월 10일자 9면 「사육에 휘둘리는 ‘해양레저도시의 꿈’/주먹구구’ 울진 요트사업/도·군협회 후포 출신 선후배로 얽혀 사조직화/전무이사 K씨, 위탁운영 요트학교 관리직 겸해/매월 350만원씩 월급 챙겨 … 소중한 혈세 낭비」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대구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리와 불합리한 조직 운영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든 가운데 울진군이 육성 중인 요트관련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개선이 시급하다.

군은 바다를 낀 지역 특색을 살려 후포항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 마리나항을 울진의 랜드마크로 조성키로 하고 핵심사업으로 요트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마리나항은 요트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수역시설을 갖추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해양레저시설을 갖춘 구역을 말한다.

군은 이를 통한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의 부활을 꾀하고 있으나 이 같은 사

업이 일부 요트협회 임원에게 휘둘려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요트관련 사업의 이같은 부실한 운영은 경북요트협회와 울진군요트협회, 군에서 위탁운영 중인 울진군요트학교 등 사조직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북요트협회 전 임원 등에 따르면 경북요트협회 전무이사인 K씨는 울진군 요트협회장과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위탁운영 중인 군요트학교 관리직을 겸하며 경북요트협회와 울진 요트협회를 주무르고 있다.

울진군요트학교는 울진군이 요트의 후진을 양성하고 지역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요트체험 등의 사업을 통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설립했다.

군은 요트학교에 2012년 보조금 2억원, 2013년 보조금 2억5천만원 등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이 돈이 불필요한 인원에 대한 월급 등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

특히 K 경북요트협회 전무이사는 이 요트학교에서 매월 350만원이란 월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민들은 “왜 군 예산을 이렇게 쓰느냐”고 항의하고 있다.

요트학교는 하절기인 6~8월까지 각종 사업이 집중돼 동절기에는 거의 사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K 전무는 관리직이란 명목아래 매월 월급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은 비정상적인 경북요트협회, 울진군요트협회 등에 대한 검·경찰조사와 외부의 집중적인 감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울진군요트협회와 경북요트협회의 임원들이 후포 출신의 선후배들로 얽혀있어 외부 감시가 없는 한 요트협회와 학교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도 막을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후포주민 B씨는 “이런 현상으로 경북요트협회·울진군요트협회 등은 사조직이란 비난을 받고 군에서는 이를 제어하기는커녕 덩달아 호응을 하고 있어 큰 문제”라며 “누군가가 나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후포주민 A씨는 “경북요트협회, 군과 울진군요트협회 등이 요트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관련 인프라 조성과 함께 후진 육성차원에서 후포중·고 학교 요트선수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하는데 정작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잣밥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idaegu.co.kr/news.php?code=tk0104&mode=view&num=124074>)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신문의 위 기사는 경북요트협회 전무와 울진요트협회장을 겸하고 있는 K씨가 울진군에서 민간에게 운영을 위탁한 울진요트학교의 관리직을 맡아 350만 원씩 월급을 받는 것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요트 후진 육성과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요트학교에 울진군은 2012년 2억 원, 지난 해 2억5천만 원 등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돈이 불필요한 인원에 대한 월급 등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는 것이다. 작은 제목으로 표현한 것처럼 「소중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기사는 비난의 당사자인 K씨를 익명으로 처리했지만 직책과 직명을 명기했기 때문에 K씨의 신분은 인터넷만 검색하더라도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K씨로서는 명예 훼손과 더불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명이나 반론의 여지가 크다고 여겨지지만 대구신문은 이를 지면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같은 보도태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④(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보도자료의 검증

▲ 2013-1182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주 문〉

스포츠동아 2013년 5월 29일자 17면 「직장인들의 아침 ... 하우 '두유<豆乳>' 두?/두유, 간편한 아침식사 대용식 인기」 기사와 제목, 5월 30일자 17면 「도심에선 젠틀맨, 오프로드에선 마초맨/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제너레이션 GLK」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1. 스포츠동아는 위 2건의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직장인들의 아침...〉= 『(전략) 롯데칠성음료에서는 소비자가 그동안 우유 대신 혹은 무의식적으로 마셨던 두유를 완벽한 아침식사 대용식의 대표 메뉴로 만들어냈다.

대표 제품은 바로 '참두'와 '참두 뉴트리빈'이다. 두 제품은 각각 고소한 '오리지널', 달콤하고 부드러운 '스위트', 고소하고 영양이 듬뿍 담긴 '검은콩' 등 3종씩 총 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리뉴얼된 '참두'는 고객이 원하는 영양과 맛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고의 두유 전문가들을 투입해 개발에만 약 2년이 소요될 정도로 공을 들였다.(중략)

'참두 뉴트리빈'은 본격적인 아침식사대용 두유다. 비타민B2, 콩 단백질, 칼슘 등 한국인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밸런스 있게 보충해주는 영양 두유로, 한 병(200ml)안에 바나나 4개 분량의 비타민B2, 계란 1개 분량의 콩 단백질, 우유 1잔 분의 칼슘 등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비타민B2는 세계적인 비타민 원료 공급회사인 DSM의 엄격한 품질 기준을 거친 퀄리비(Quali-B) 브랜드의 프랑스산 비타민B2가 사용됐다. 200ml 용기를 사용해 냉·온장 보관도 용이하다.(후략)』

〈도심에선 젠틀맨〉= 『메르세데스-벤츠의 더 뉴 제너레이션 GLK(이하 뉴 GLK)의 가장 큰 매력은 남성적인 매력이 물씬 풍기는 차별화된 스타일과 아웃도어 활동 시 온·오프로드를 가리지 않는 탄탄한 주행 성능, 운전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케어하는 충실한 안전장치들에 있다. SUV의 최고 가치가 공간 활용성 보다는 안전과 탄탄한 온·오프로드 주행성능에 있다고 생각하는 예비 오너들이라면 뉴 GLK는 훌륭한 해답이다.

벤츠 뉴 GLK에는 벤츠의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인 4MATIC이 장착돼 있다. 앞, 뒤 차축의 구동력을 45:55로 배분해 일반 도로에서는 4륜 구동의 장점(2륜 구동보다 접지력이 높다)인 뛰어난 직진 안정성을 발휘한다.

또한 오프로드에서는 높은 트랙션 컨트롤 능력을 발휘한다. 노면 상황에 비해 구동력이 지나치게 커 타이어의 회전력이 노면과의 마찰력을 넘어서면 타이어가 공회전하여 휠 스핀을 일으킨다. 4MATIC 시스템의 구동력 배분은 바로 이런 순간 휠스핀을 억제해 오프로드에서 주행성능을 향상시킨다.

또한 4MATIC과 공조하는 4ETS(4Electronic Traction System) 및 다이내믹 핸들링 컨트롤 시스템을 통해 타이어의 공회전과 미끄러짐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어한다. 그 결과 핸들링과 주행 안정성이 향상됐다. 도심에서는 깔끔한 신사 같은 안정된 주행 성능을, 오프로드에서는 마초같은 파워를 발휘하는 셈이다.(후략)』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동아는 위 적시 기사에서 롯데칠성음료에서 생산하는 두유 제품인 ‘참두’와 ‘참두 뉴트리빈’, 수입차인 메르세데스-벤츠의 더 뉴 제너레이션 GLK를 광고 카피를 연상케 하는 제목에다 홍보성 짙은 문구를 곁들여 장점 일변도로 소개했다.

이 같은 기사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특정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3-1271 신문윤리강령 위반

1. 每日新聞 발행인 여 창 환
2.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3.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문〉

每日新聞 2013년 9월 24일자 15면 「시승기 렉서스 IS250/“독일차 돌풍 잠재워라” 일본의 승부수」 기사와 제목, 매일경제 10월 8일자 B5면 「프리미엄 SUV 선두주자 BMW 뉴X5/오프로드선 질주본능 … 도심선 세련된 드라이빙」 기사와 제목, 일간스포츠 10월 16일자 18면 「토yota 4세대 아발론 시승기/부드러운 가속 … 차체는 더 강해졌다」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每日新聞은 자동차 기획 면을 통해 최근 렉서스가 출시한 ‘렉서스 IS250’의 시승기를 싣고 이 신형모델을 장점 일색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 “독일차 돌풍 잠재워라” 일본의 승부수라는 큰 제목 아래 「조용/시속 160km에서도 정숙」 「강력/최첨단 패널 접착 ‘단단」 「날렵/민첩한 핸들링 응답성」 「편안/넓어진 실내 낮아진 시트」 등 광고문구와 같은 작은 제목을 달았다. 이와 함께 자동차 내 외부의 컬러 사진을 크게 실었다.

매일경제와 일간스포츠의 위 기사들은 새로 시장에 나온 외제차들을 소개하는 ‘시승기’다.

기사들은 그러나 차량의 장·단점을 두루 지적하며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광고카피를 연상케 하는 감성적인 제목과 홍보성 짙은 문구를 곁들여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들은 특정업체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매일신문 : [http://www.imaa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 47193&yy=2013](http://www.imaa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7193&yy=2013)〉

〈매일경제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950959>〉

〈일간스포츠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2866923〉

▲ 2014-106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조 영 권
2. 서울경제 발행인 김 인 영
3. 국민일보 발행인 김 성 기
4. 머니투데이 발행인 홍 선 근
5. 한국일보 발행인 고 낙 현

〈주 문〉

파이낸셜뉴스 2014년 1월 22일자 22~23면 「기획/상반기 눈여겨 볼 분양단지」 면 기사 8건, 서울경제 1월 23일자 「2014 분양, 이곳을 주목하라」 별지 섹션, 국민일보 2월 4일자 「쿠키건강+」 별지 섹션의 기사 20건, 머니투데이 2월 8일자 18면(「Fashion」)의 기사 3건, 한국일보 2월 13일자 20면(「졸업입학선물 특집」)의 기사 7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위 신문들은 특정 주제로 별지 섹션 혹은 기획면을 제작하면서 기업과 제품에 대해 장점 일변도로 홍보했다.

파이낸셜뉴스는 2개면에 걸쳐 8곳의 분양단지를 홍보했고, 서울경제는 8개면을 할애한 별지 섹션을 통해 장점 위주로 분양중인 아파트를 소개했다. 국민일보는 건강을 주제로 한 별지 섹션에서 타이레놀, 화이투벤 등의 약품과 영양제, 잇몸치약 등을 제품 사진과 함께 홍보했다. 머니투데이와 한국일보는 패션과 졸업입학선물을 주제로 특정업체의 가방, 시계, 신발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위 기사들은 객관적인 보도기사가 아니라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돕는 홍보성 기사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⑤(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